

ISSN 2713-4520

---

# 영남국방논총

Yeungnam National Defense Review

---

제2권 제1호 (통권 제2호) 2020



영남대부설 **한국군사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Military Affairs

Yeungnam University, Gyungshan, Korea

---

# 영 남 국 방 논 총

Yeungnam National Defense Review

제2권 제1호 (통권 제1호) 2020

---

## 목 차

명문 군사학과 탄생을 통한 군사학 학문체계 정립 / 이종호 .....	1
선비정신과 군인정신의 비교 / 이영찬 .....	23
방어작전 시 기동성 발휘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 / 성형권 .....	43
육군 초급장교 인력획득 정책의 비판적 평가 연구 - 군사학과 자유경쟁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 / 박효선 .....	69
지도자 리더십과 국가발전에 관한 연구 / 김정수 .....	87
군 복무기간 단축이 초급간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과 그 해결방안 / 김군기,나유석.....	111
부상하는 군사과학기술 개발 추세 / 김종열.....	141
북한의 핵공격에 대응한 한국의 자위적 선제공격전략의 타당성 검토 / 전상조 .....	173

# 명문 군사학과 탄생을 통한 군사학 학문체계 정립

## 이 중 호\*

- 
1. 서 론
  2. 군사학과 운영경험과 착상
  3. 명문 군사학과 육성과 군사학 학문체계 정립방향
  4. 결 론
- 

## 요 약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제한사항 속에서도 각 대학교의 군사학과는 특성화된 발전전략을 가지고 타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획기적인 성장을 해 왔고, 각 대학교 안에서 중심이 되는 대표적인 학과로서 자리매김 하였다.

군사학과가 짧은 시간에 대학의 학문적 전통과 문화에 융합하여 발전하게 된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직면한 현실은 또 다른 발전적 도약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대내적으로는 대학 구조조정이라는 큰 문턱을 넘어야 하고, 대외적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기술과 군사전략체계의 결합을 통한 군사혁신의 진행상황에서 미래전에 적응 가능한 초급장교를 육성하는 혁신적 교육방법을 구상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군사학과와의 운영을 통하여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질적 향상을 통해 명문학과로 도약하고, 군사학 학문체계를 정립해 나가는 발전방향을 탐구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의 용이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표적인 군사학과라고 할 수 있는 4년제 대학교의 육군협약 8개 군사학과를 대상으로 검토하였으며, 대표적인 사례로는 건양대학교 군사학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

\* 건양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군사경찰행정대학원장, 군사학 박사

## 1. 서 론

군사학이 하나의 학문분과로 학계에서 인정을 받고 종합대학교에 군사학과가 신설된 것도 벌써 16년째이다. 육군과 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8개 대학교의 군사학과 외에도 거의 20여개 대학교에서 군사학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약 80여 개 전문대학에서 부사관 관련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각 대학교는 학부, 석사 및 박사과정, 군사학 관련 연구소 등을 운영하며 대학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처음 대학교에 군사학과가 신설되었을 당시에는 군사학 학문체계 자체도 학계에서 정착이 잘 안되어서 교수 및 학자들의 이해 부족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대학 내에서 군사학과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역사적 경험, 규정과 방침, 협력체제 등 기반의 취약성 때문에 매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신설학과로서 학과를 운영하는 신입교수들도 학과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학과목 등 교육운영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대학의 교육이념 및 교육방향, 교육정책에 통합해 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더 나아가 한국의 대학 현실에서 발생한 사교육체제 기반의 취약성, 학령인구의 절대적 감소에 따른 입시문제 등으로 아직 태동기인 각 대학교의 군사학과도 함께 성장통을 겪어 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보면 많은 어려움과 제한사항 속에서도 각 대학교의 군사학과는 특성화된 발전전략을 가지고 타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획기적인 성장을 해 왔고, 각 대학교 안에서 중심이 되는 대표적인 학과로서 자리매김했다고 자체 평가해 본다.

군사학과가 짧은 시간에 대학의 학문적 전통과 문화에 융합하여 발전하게 된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군사학이라는 학문분야 자체가 갖고 있는 학문적 정체성과 타 학문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포용성이 있기 때문이다. 충남대학교 이종학 명예교수는 그의 저서 나의 학문과 인생에서 “군사학은 전쟁을 연구대상으로 하며, 국가와 민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 방법과 이론체계를 연구,발전시키는 것으로 국가 존립을 위한 중요한 학문분야이다. 나는 군사학이 학문분야로서의 시민권을 획득하는데 40여년 간 노력했으며, 이 목표는 달성되었다.<sup>1)</sup>”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학문적 특성이 인간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본질을 탐구하는 대학이라는 학문적 풍토 속에 잘 융합이 되었던 것이다.

둘째, 군의 장교단 내에 능력과 학문적 성과가 출중한 교수진을 선발하여 군

---

1)이종학,『나의 학문과 인생』, (대전: 충남대학교 출판부, 2009), p.115.

사학과에서 운영하였기 때문에 통합적 관점을 견지하고, 목표지향적 사고, 성과주의적 업무추진 방식 등에 익숙한 이들의 역량발휘가 대학 내에 진취적이고 신선한 학풍을 조성하였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은 4년제 대학의 군사학과에서 군사학 석사과정, 군사학 박사과정, 군사학관련 연구소 등이 신설되었다고 생각한다.

셋째, 군·학 협력을 통해 군은 우수한 장교와 부사관을 획득하고, 대학은 모집과 취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았다.

지금 각 대학교는 2021년 3주기 평가에 대비하여 대단히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만큼 대학의 모집, 취업, 교육 등 여건은 어렵고, 대학 구조조정이라는 큰 암초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sup>2)</sup>

이러한 대학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군·학 협력을 통해 탄생하고 운영되는 군사학과는 대학이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고 사회와 군에서 요구하는 “실용인재 육성”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으며, 군의 입장에서 보면 변화하는 전장환경에 적응하고 군사분야와 타 학문체계가 융합된 “맞춤형 인재”를 안정적으로 획득하는 중요한 통로 역할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군사학과의 운영을 통하여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질적 향상을 통해 명문학과로 도약하고, 군사학 학문체계를 정립해 나가는 발전방향을 탐구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분석의 용이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표적인 군사학과라고 할 수 있는 4년제 대학교의 육군협약 8개 군사학과를 대상으로 검토하였으며, 대표적인 사례로는 건양대학교 군사학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논문 구성은 제1장은 서론, 제2장은 군사학과 운영 경험과 착상, 제3장은 명문 군사학과 육성과 군사학 학문체계 정립, 제4장은 결론 순으로 하였다.

---

2) 2020년 8월 14일 교육부가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대학의 자율성 존중, 지역대학 배려 강화, 대학의 평가 부담 완화를 주요 골자로 수립됐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변경된 중점으로 정량 지표 중 신입생·재학생 충원을 비중이 확대된다. 2주기 보다 6.7% 상승한 20점(100점 만점, 20%)이 평가 배점에 반영된다. 이는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정부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스스로 적정 규모화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어 전임교원 확보율 배점을 기존 10점(75점 만점, 13.3%)에서 15점(100점 만점, 15%)으로 늘렸다.

## 2. 군사학과 운영 경험과 착상

오늘날의 대학은 19세기 훔볼트가 설립한 베를린 대학의 학제구조가 기초가 되었다. 베를린 대학교는 기초학문과 응용학문의 분리, 대학을 통한 학문연구, 대학교육을 통한 국가의 필요한 인재상 구현이라는 교육목표를 지향하였다.

훔볼트의 대학 교육이념은 빌등(Bildung), 즉 교양과 인격도야로 축약되며, 이는 19세기로부터 20세기까지 교육분야 뿐만 아니라 일상적 삶의 원리로 인식되었다.<sup>3)</sup>

그러나 21세기 현재 대학교육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포스트모던의 대학 교육은 학문분야의 다원적이고 개별적인 담론들이 충돌하고, 또 융합하면서 학문과 도덕을 지탱하고 있는 기존의 혼동과 더불어 학제구조의 변혁이 확산되고 있다.

대학교육이 달성하고자 하는 가치와 지식 또한 변화하고 있는데 그것은 경쟁력 향상, 지식의 수월한 습득을 통한 활용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과학과 수학의 정확한 논리가 뒷받침되는 경험적 진리가 강조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문명의 중심에 있는 인간의 부재가 문제라는 관점이 계속 부각되는 원인이다.

대학교에 신설된 군사학과도 21세기 대학교육의 전환기에 나타난 새로운 도전적인 발상이고, 현재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된다. 동시에 군 장교가 군사학 지식만을 습득하여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가? 인간과 사회의 본질을 이해하는 리더십이 충만한 군 장교를 우리가 배출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제시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서 지난 10년간 건양대학교에서 군사학과를 운영하면서 얻은 경험을 통하여 명문 군사학과 탄생에 대한 착상을 해 보고자 한다.

### 2.1. 군사학과 현황과 교육과정

현재 군사학과는 세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첫 번째 유형은 국방부 및 육군과 협약을 통해 학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학군과 학사장교로 임관 후 6-7년 복무하는 것이다. 대전대학교, 경남대학교, 원광대학교, 조선대학교, 건

---

3) Anthony T. Kronman, 한창호 역, 『교육의 종말』, (서울: 모티브 북, 2007), pp.127-129.

양대학교, 영남대학교, 용인대학교, 청주대학교와 고려대학교(사이버 국방학과) 등 9개교에 설치되어 있으며, 학생들은 군 복무 간 장기지원에서 선발이 되면 안정적인 군 생활이 보장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시 사회로 복귀하여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한다.

두 번째 유형은 준협약대학으로서 육군과 협약은 되어 있으나 학생들이 군 장학생 시험에 합격이 되었을 때 학비를 국비에서 지원해준다. 군 장학생 시험에서 가점을 주도록 되어 있으나 큰 변별력은 없는 실정이다. 상명대학교, 서경대학교, 충남대학교, 동양대학교 등 4개 교이며, 학생들이 군 장학생 시험에 우선 합격이 되어야 하므로 학사운영 및 학생 훈육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세 번째 유형은 비협약대학으로서 대학교 자체의 발전계획에 따라 군사학과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입학한 학생은 군 장학생 시험에서 합격이 되어야 국비지원이 가능해진다. 우석대학교, 호서대학교, 광주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주대학교, 동신대학교, 상명대학교(천안), 초당대학교, 호원대학교, 송원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10여 개 대학교가 있다. 준협약대학과 마찬가지로 저학년에 학사운영 및 훈육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군사학과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육군과 체결한 협약서(군사학 발전 협력 합의서)에 따라 육군사관학교와 제3사관학교의 장교양성과정에 준하여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모든 군사학과 교육과정 편성은 유사하게 되어 있으며, 대체로 군사학 전공과 기타 특성화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먼저 군사학 전공과목은 각 대학 군사학과 특성에 따라 전공 필수과목과 전공 선택과목의 범위와 개설과목 수에 있어서 다양한 편차가 존재한다.

그것은 대학교 별 교육이념과 교육목표 그리고 교육운영방향에 맞추어 차이가 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군사학은 종합학문으로서 전쟁론, 군사사와 같은 인문학 분야가 있고, 군사전략, 국방정책론 등과 같은 사회과학 분야가 있으며, 무기공학, 방위산업, 국방정보통신 등과 같은 자연과학 분야가 있다.<sup>4)</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군사학과는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 위주로 학과목이 편중되어 있다.

물론 2-4명의 전임교수 및 일부 계약직 교수로 운영되고 있는 군사학과에서 이러한 종합학문 분야를 모두 포괄하여 교육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미래전의 핵심인 정예장교를 배출해야 하는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다.

---

4) 박용현, “군사학이란 무엇인가”, 『군사학 개론』, (서울: 플래닛미디어, 2016), p.53.



특성화교육은 모든 군사학과가 대학의 비교과과정 운영계획에 반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즉 초급장교의 지휘능력 배양이라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체력단련 프로그램, 방학기간을 이용한 병영체험훈련, 군사 실무과목, 훈육과목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성화 교육은 학생들이 장차 군의 초급장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는데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그러나 각 대학교의 군사학과마다 교육방법과 운영 시스템이 상이하고, 그 성과도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군사학과 학생들의 신분이 무관후보생이 아니고 민간인 신분이다 보니 병영체험훈련이나 훈육교육 및 군사실무교육에서 군의 지원 시스템 측면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중기 복무자원인 군사학과 학생들의 초급장교 리더십 배양을 위한 체계적인 특성화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특성화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교육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 2.2. 군사학과 교수 운영 및 학사지원 실태

군사학과는 육군과 체결한 협력합의서에 따라 전임교수 2명, 계약직교수 2명을 육군 추천방식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각 대학교의 군사학과에는 육군 추천 전임교수 2명과 계약직 교수 2명을 필수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의 여건에 따라 전임교수 및 계약직 교수를 2명에서 4명 정도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교육 및 학사관리의 필요, 대학의 인사운영계획에 따라 전문경력인 교수, 겸임교수, 시간강사 및 대우교수 등이 일부 운영되고 있다.

아직 군사학 학문체계가 정립이 되어 있지 않고, 군사학 박사 학위를 보유한 학자가 충분치 않은 관계로 각 대학교의 군사학과에는 군사학 박사학위 보유 교수진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주로 정치학, 행정학, 정책학 및 인문학 분야 학위 보유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사 학위 교수도 다수 보임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군사학과 교수진이 대부분 군에서 고급장교로 복무하다가 전역한 후에 대학교에 채용되었기 때문에 학문적 깊이가 있거나 학계 활동이 활발한 편이 아니다. 그런 이유로 각 군사학과 교수진의 논문게재 및 저서 발간 실적, 연구과제 수행 실적이 비교적 미미한 수준이며, 사실 이것이 군사학과 교육의 질적 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국의 대학사회에서 명성이 높은 대부분의 학과는 교수진이 출중하고 학문

적 성취 면에서 대단히 많은 연구논문 업적을 내고 있으며, 정부와 산업체의 공동연구 과제 실적이 개인별로 10억 원 이상을 보이고 있다.

물론 군사학 분야도 국방R&D 과제 및 정부과제, 지자체 및 방산업체의 연구 과제가 다수 발주되고 있으며, 군사학 관련 학술대회의 개최 및 학술지 발간 등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1〉 국방 R&D 역량강화 계획

- 국방R&D강화로 국내개발 확대, 부품 국산화
  - 국내조달 : 60% ⇒ 70%, 부품국산화 : 67% ⇒ 75%
- 국가R&D와 국방R&D 연계, 4차 산업혁명기술 확보
  - 인공지능, 무인화 기술 활용한 무인전투헬기, 초소형 정찰로봇 등
- 민군협력 활성화로 기술수준 향상 : 민군겸용기술 국방분야 실용화율 61% ⇒ 70%

출처 : 방위사업청, 『'18-'22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 p.77.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학과 교수진들의 실적이 미미한 것은 군사학과와 군사관련연구소 그리고 석·박사과정, 군사관련 학회 등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것이 향후 잘 연계되도록 노력한다면 연구활동 및 연구실적이 풍부하게 축적될 수도 있을 것이다.

군사학과 학사지원과 관련된 시설 지원, 교비 등 예산 할당, 행정직원 지원 및 기타 분야별로 각 대학교 간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그것은 대학 자체의 지향하는 방향이 다르다보니 나타난 현실이지만 한편으로는 해당 대학의 군사학과 교수진의 역량과도 관계가 있다.

다행히 군사학과는 육군과의 협력합의서를 근거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각 대학교는 일정부분 군사학과 운영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사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예산 측면에서도 다양한 특성화 교육예산을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으로 군사학과 운영실적과 교수진의 역할 차원에서 대학의 발전에 여러 측면으로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다양한 대학 발전 TF 등에 참여하여 미래 비전과 발전계획 등을 만들어 가는데 역할을 수행한다면 군사학과 학사지원 부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2.3. 군사학과 운영 사례분석(건양대학교 군사학과)

건양대학교 군사학과는 육군과 체결한 협력합의서에 근거하여 영남대학교,

청주대학교, 경남대학교, 용인대학교와 함께 2011년 신설되었으며, 운영을 시작한지 벌써 10년을 맞이하고 있다.

〈표 2〉 건양대학교 군사학과 졸업생 수(2015-2020)

총계	1기 2011학번	2기 2012학번	3기 2013학번	4기 2014학번	5기 2015학번	6기 2016학번
246명	40명	39명	43명	41명	42명	41명

\*출처 : 건양대학교 연보(2019년)에서 재정리.

그동안 246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육군 소위로 임관시켰다. 앞 기수들은 육군대위까지 진출하였고, 2021년 내년도에는 학군장교로 임관한 졸업생 중에서 장기지원 선발이 안 된 장교들은 사회로 복귀해야 될 때가 되었다.

2011년 학부과정 신설을 시작으로 군사학 석사 및 통일학 석사과정 그리고 군사학 박사과정이 신설되었고, 육군훈련소 및 부사관학교 등 주변의 군부대 부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군사학과(계약)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산학군관연의 협력을 위해 2012년 군사과학연구소를 설립하여 정부 및 국방R&D 과제 수행, 방사청 지원 방산전문인력 양성교육과정 운영, 국내 및 국제학술대회, 충남국방산업 추진전략 등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정책포럼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학부, 석·박사과정, 계약학과 및 연구소 운영을 위해 훌륭한 교수진을 초빙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현재 전임교수 4명, 강의전문교수 4명, 겸임교수 2명, 외래교수 2명, 대우교수 1명, 전문경력인 교수 1명(연구재단 지원), 군사과학연구소의 연구전문교수 1명 등 15명이 확충되었다.

지난 10년 간 명문학과로 발돋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서 성과도 있었으나 한계도 분명히 있었다. 큰 성과라고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졸업생 중 50% 가까이 장기지원 선발이 되고 있으며, 임관성적 우수로 국무총리 수상자가 나오고, 졸업생 중에서 2명이 2020년 육군본부 동춘상을 수상했던 것 등이라고 할 수 있다.<sup>5)</sup>

그러나 대학 구조조정이란 엄혹한 현실 속에서 학과 발전의 어려움도 동시에 존재한다. 사실 이 문제가 향후 군사학과의 운영 중 입학홍보, 교육지원 예산문제, 신입교수 충원 등에 있어서 가장 큰 암초라고 할 수 있다.

5) 대전일보(2020.4.9.), 제15회 동춘상 수상자, 건양대학교 군사학과 4기 졸업생 김형우, 송형주 중위가 선정.

따라서 지금은 군사학과 교수진과 학자들이 중지를 모아 그동안의 노력을 신중하게 평가해 보고 향후 명문 군사학과로 발돋움함으로써 군사학 학문체계를 정립하는 방안을 모색할 때이다.

대부분의 군사학과에서 보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사례로 건양대학교 군사학과에서 그동안 노력했던 결과를 몇 가지로 종합 분석해 보고자 한다.

첫째,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치밀한 입학홍보 전략의 수립 및 적극적인 추진이다.

군사학과 학생 모집은 수시와 정시로 구분하여 대체로 입학정원을 채우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매년 학령인구의 감소 및 군사학과와의 확대 등으로 향후 모집미달 사태가 우려되고 있는 현실이다. 학생들의 입학 수준은 여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내신 3등급에서 4등급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것도 매년 저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추진하였던 입학홍보전략 중점은 ① 자매고교 및 지역 거점고교와의 자매결연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 확대, ②고교 방문 홍보, ③지역별 전담 입학사정관과 협력하여 고교관리 및 전형안내를 통한 우수 입학자원 확보 등이다.

자매결연 실적은 모두 199개 고교였으며, 이들 자매고교에서 지원등록 학생이 전체의 50% 가량 유지되고 있다. 이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교장, 교감 정기인사 시기에 축하 카드를 보내고 있으며, 자매고교 장학금, 교육특강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고교 홍보방문은 2019년에는 재학생 모교방문, 고교 찾아가는 입시설명회 등을 활발하게 수행하였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 문제로 온라인 홍보 위주로 시행하고 있다.

〈표 3〉 입학 홍보 현황(2019년도)

구 분	모집 설명회	재학생 모교방문	교사 초청설명회	온라인 홍보
횟 수	190회	263회	171회	40회

\*출처 : 군사학과 입시홍보 실적(2019년) 재정리. 온라인 홍보는 동영상 제작, 홍보물 제작 등 포함

둘째, 엄격하고 체계적인 학사관리로 교육의 질 향상 및 교육 만족도를 충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군사학과 학생의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은 145학점이다.

이것은 크게 군사학전공 62학점, 제2전공 30학점, 교양 38학점, 군사 특성화

15학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4〉 군사학과 학점 이수체계(2020년)

구 분	교 양				전 공	제2전 공	특성 화과 목	계
	필수	중점	선택	계				
학 점	10	10	18	38	62	30	15	145

\*출처 : 2020 군사학과 운영계획 재정리. 해외 유학기간 특성화과목은 이수로 간주

학사관리의 중점은 ① 군사학 전공 외에 제2전공 이수, ②군사특성화 과목을 통해 초급장교 지휘역량 배양, ③졸업 인증제 시행으로 잠재역량 극대화 등이다.

군사학 전공은 미래전쟁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장교의 능력 배양을 위해 인문학, 사회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자연과학 분야를 다양하게 편성하였으며, 특히 제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 습득을 위한 과목과 함께 무기공학, 국방정보통신, 국방M&S 등의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제2전공은 복수전공 개념으로 졸업 시 군사학 학사학위 외에 추가로 하나의 학사학위를 더 취득함으로써 병과 선택의 폭을 넓히고, 향후 장기지원 선발이 안 되었을 경우 사회로 복귀할 때 취업의 관문을 좀 더 수월하게 통과하기 위한 준비개념으로 시행하고 있다.

학생들이 대부분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어학관련 학과, 기계공학, 상담심리학과, 경영학과, 디지털콘텐츠 학과, 국방공무원학과 등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으나 병과선택이나 향후 취업문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복수전공으로 30학점을 이수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과정인 것이 현실이다.

군사특성화 과목은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병영체험훈련을 하거나 학기 중 초급장교들에게 필요한 전술론, 논문작성훈련, 초급장교 지휘능력배양 특강 및 방학 중 시행되는 영어집중교육 등 15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병영체험훈련은 위해 육군훈련소 및 군 부대와 별도로 협력해야 하고 체험훈련 자체도 훈련대상을 민간인 신분으로 하다 보니 가장 기초적인 것 위주로 하여 성과가 기대만큼 크다고 할 수 없으며, 그마저도 올해는 코로나 문제로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

졸업인증제는 201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모든 졸업생들이 인증을 받았으며, 초급장교의 잠재역량 개발에 크게 기여하였다.

〈표 5〉 군사학과 졸업인증제도(2020년도)

구 분	영 어	육군 체력검 정	전 산	한 자	무 도	독 서
내 용	TOEIC 800, OPIc IM3	특 급	ITQ	2급	태권도 1단	60권
	최저 토익 700	최저1 급				

\*출처 : 군사학과 운영계획(2020년) 재정리.

졸업인증제는 매 학년 달성목표를 제시한다. 학년별로 목표 달성한 학생은 별 표를 패용하고, 군사학과 명예의 전당에 사진을 게시하여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

〈그림 1〉 군사학과 명예의 전당(2019년도)



셋째, 교육 및 연구역량이 출중한 교수를 초빙하고, 교육 및 연구성과를 확대

하기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최근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대학교육의 미래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학 교육환경의 IT인프라 구축, 학제적 융합과 학생 개별교육 방법의 도입 그리고 정부교육기관+교육계+산업체의 네트워크를 통한 연구개발 노력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sup>6)</sup>

군사학은 종합학문의 성격이 강하므로 다양한 학문 분야의 교수들이 학제적 융합과 연구성과를 많이 내야 한다.

인문사회분야 학과의 경우 학생 25명당 1명의 교수 확보기준이 있으나 현재 전임교수 4명, 강의전문교수 4명, 대우교수 1명, 전문경력교수1명 등 10명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 기준은 초과하고 있다. 추가로 겸임교수 2명, 외래교수 2명, 연구전문교수 1명 등 계약직 교수 5명을 운영하고 있다.

초빙된 교수는 대체로 군사학, 정치학, 행정학, 정책학, 역사학, 산업공학 등 박사학위 보유자가 14명, 박사과정 수료자가 1명이다.

전임교수 만을 대상으로 지난 5년 간 연구실적을 종합해 보면 아래 도표와 같다.

〈표 6〉 군사학과 전임교수 연구실적(2016-2020년)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국외(SCI, SCIE, Scopus)	0	0	0	0	1
국내(등재후보지 이상, KCI)	2	3	2	3	4

\*출처 : 2020년 군사학과 전임교수 연구실적 종합 재정리

2019년 이전에는 군사학과 전임교수를 2명 수준에서 운영하였고, 2020년도 부터 4명으로 운영함에 따라 전임교수 연구실적이 증가하였다.

학술세미나 및 정책포럼은 군사과학연구소 및 대학원을 중심으로 매년 4-5회 진행하고 있으며, 1회 정도는 국제학술세미나로 개최하고 있다.

교수들의 학생 전공교육과 관련하여 연구실적과 학술세미나 등 연구활동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개별 교수들의 연구성과에 따라 학생 교육의 질도 향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 대학에서 명문학과라고 할 수 있는 대부분의 학과는 교수 개인별 국가

6) 강이화, “4차 산업혁명과 대학교육의 미래”,『교육혁신 연구』, 2019, vol 29. pp.291-292.

R&D과제가 10억원 이상이 된다. 그만큼 정부-대학-산업체의 연계 네트워크는 매우 중요한 국가경쟁력이 되고 있으며, 대학의 발전에 큰 버팀목이 되고 있다.

군사학과도 국방R&D 과제가 증가하고 있고, 정부, 군, 산업체가 연계된 연구사업이 활발해지고 있으므로 군사학과의 연구 노력도 더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도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군사과학연구소에서 연구과제를 수주한 실적을 종합한 자료이다.

〈표 7〉 군사과학연구소 연구실적(2016-2020년)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연구 실적 (산업체공동연구 포함)	2	3	3	3	2
연구 예산	5천만원	8천만원	5억 7천만원	2억 7천만원	7억 9천만원

\*출처 : 2020년 군사과학연구소 연구실적 종합 재정리

군사과학연구소는 현재 건양대학교-국방대학교-충남도-논산시가 협력하여 충남 논산에 국방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방위사업청의 방산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선정되어 매년 80명의 대학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산전문인력 양성교육 및 방산업체 취업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림 2〉 충남국방산업단지 조성 및 방산클러스터 협의체 운영개념



\*출처 : 충남 국방 국가산업단지 조성 개발계획 (2018년), p.35.

넷째, 명품 초급장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체력뿐만 아니라 인성이



검비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체계적인 학생 훈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장교후보생의 인성교육 중점은 장교로서의 책임감과 명예심 고양, 군사전문가로서의 가치관 정립, 군 지도자로서의 덕성 함양에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인성 강화 프로그램을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진행해야 한다.<sup>7)</sup>

그동안 군사학과 내규를 6차례 개정하면서 학생 훈육을 제도화 시켜 시스템에 의해 훈육이 이루어지게 하였으며, 기본적으로 학생관리는 학생자치제도를 운영하여 자율적 시스템에 따라 운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자치제도는 자율정신과 품성을 함양하고, 책임의식 및 지휘통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다. 자치제도 편성은 학생회장과 명예위원장, 생활관 자치회 명예위원이 상호 협력하면서 각 학년 학생회 과대표를 통제하게 되어 있다.

학생들은 매일 아침 기상 이후 07시부터 1시간가량 대운동장에서 학년별 자체적으로 점호를 취하고, 아침운동을 하는데 주로 국군도수체조, 윗몸 일으키기, 팔 굽혀펴기, 3km 달리기 등 수준측정을 한다.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은 학교 뒷산 반야산 일대에서 4.5km 산악구보를 하면서 산악 적응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학생들은 전원 의무적으로 기숙사에 기거하면서 집단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있으며, 매 학기 학생 상호 적성평가를 해서 교우관계 및 품성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다.

적성평가는 학교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실시하며, 선호 및 비선호 학생, 장단점 기술 등 10개 요소를 평가한다. 그 결과는 군사 특성화 잠재역량 성적에 반영하고, 매 학기 발송하는 학부모 학사서신에 포함하고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전임교수 1명이 기숙사에 학생들과 함께 기거하며 훈육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생들을 학년별 6개 분임으로 편성하고, 분임별로 지도교수 1명을 임명하여 학생들에 대한 대학생활 상담, 해외 자매대학 유학 등 진로상담, 복수전공 지원, 병과선택 및 기타 애로사항 면담 등을 전담하고 있다.

또한 지도교수들은 담당학생들의 졸업 후 복무부대를 방문하여 초급장교 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언을 계속하고 상급 지휘관을 만나서 학생의 장점을 홍보해 주고 있다.

장교리더십 함양을 위해 후보생 상호 간에 Learning&Training 군사실무 교

---

7) 남재일, “학군사관후보생의 양성교육 만족도 분석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행정학박사 논문.

(원주: 상지대학교, 2019), pp.88-91.

육을 매주 1-2시간 시행하고 있다.

주요 교육내용은 제식, 개인화기, 구급법, 각개전투, 화생방, 경계, 수류탄, 분대전술 등 8개 과목이며, 1학기에는 4학년 학군후보생이 학사후보생을 대상으로 주 1시간 교육을 하고, 2학기에는 4학년 학사후보생이 1, 2학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

학군후보생은 군사실무과제에 대한 교관능력이 배양되고, 학사후보생은 군사실무 과제를 습득하고, 1,2학년 교육을 하면서 교관 및 야전적응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현재 3학년 학생 2명이 미국 보이시 주립대학교, 일본 조사이 국제대학교에 유학을 하고 있다. 매년 2명에서 5명의 학생들이 미국, 일본, 중국, 호주, 필리핀 등 해외 자매대학교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글로벌 지식을 습득하고 어학능력을 향상하고 있다.

다섯째, 군사학 학부과정과 연계하여 군사학석사, 통일학석사, 군사학박사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군사학 학문체계 정립에 노력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국가안보전략목표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동북아 및 세계평화 및 번영에 기여, 국민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안심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다.<sup>8)</sup>

군사학이란 전쟁의 본질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전쟁과 평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즉 전쟁 안에 평화가 있고, 평화 안에 전쟁이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군사학은 전쟁과 평화를 연구하는 학문체계라고 할 수 있다.

즉 군사학 연구는 국가안보를 유지하고 국가안보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핵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군사학과가 중심이 되어 군사학 석·박사, 통일학 석·박사 과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

군사학 석사는 약 10명이 수강하고 있고, 통일학 석사는 12명, 군사학 박사는 14명이 수강 하고 있다. 건양대학교의 위치가 국방관련 기관이 많은 곳이라서 교육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매년 군사학 석사 3-4명에 대하여 군사학 석사학위를 수여하고 있으며, 통일학 석사 3-4명에 대하여 정치학 석사를 수여하고 있다. 군사학 박사는 2018년 제1호 박사 1명을 배출하였고 금년에 1명이 군사학 박사학위를 수여받을 예정이다.

## 2.4. 군사학과 운영 경험을 통한 새로운 착상

---

8)국가안보실,『국가안보전략』, (서울: 다원디자인프린팅, 2018), pp.25-27.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21세기 군사혁신(RMA)이 급격하게 확산 중에 있으며, 그것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에 따른 환경과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오고 있다. 즉 정보화 사회에서 지능사회로 진보하면서 전쟁과 평화의 방법론도 데이터, 네트워크, 지능, 유무인 복합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엄청난 변화가 진행 중에 있다. 미래전은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간의 전투, 사이버 중심 전쟁, 에너지무기와 인공지능의 결합, BCI(brain-computer interface)기술을 활용한 무기체계 제어, 우주전쟁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따라서 ICT기술을 국방에 효과적으로 결합시키지 못하면 미래전쟁 수행의 주체가 될 수 없다.<sup>9)</sup>

우리가 서 있는 곳은 현재에 서 있지만 바라보는 눈은 미래를 봐야 한다. 우리가 지도하는 학생들은 향후 10년에서 20년 후 군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10~20년 이후 정말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전수해 주어야 한다.

첫째, 군사학과 졸업생들의 진로를 몇 가지 트랙으로 설계하여 교육중점을 조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졸업생 중에서 장기지원에 선발이 되는 학생이 있고, 6-7년 후 사회로 복귀하는 학생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자연과학 분야에 중점을 두고, 학부-석사-박사과정을 연계하여 학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 ICT기술혁신과 국방분야가 효과적으로 결합되는데 핵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자연과학 분야의 교과목과 과정을 추가로 설계하여야 한다.

셋째, 교육 및 연구역량이 출중한 교수진을 계속적으로 초빙하고, 소속된 교수진들의 연구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명문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학생의 모집과 취업뿐만 아니라 교수진들의 연구업적이 축적되어 대학과 사회발전에 기여해야 되기 때문이다.

넷째, 군사학 학문체계 정립을 위해서는 학문 공동체가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대학 군사관련 학과 간의 네트워크가 연결되고, 연구활동이 상호 연계되거나 통합되어 시너지를 발생시켜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각 대학의 군사학과가 합심하여 군사학회를 결성하고, 군사학 발전 노력을 함께할 수 있는 수준 높은 학술지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

9)김명준, “국방과 ICT의 결합”, 『육군 정보화발전 세미나 책자』, 2019, pp.5-7.

### 3. 명문 군사학과 육성과 군사학 학문체계 정립방향

그동안 군사학과를 운영했던 경험을 토대로 군사학과를 장차 명문학과로 육성 할 수 있는 몇 가지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 3.1. 군사학과 학생들의 진로를 3가지 트랙으로 재설계

군사학과 학생들은 졸업 후 6-7년 간 장교로 복무하고 장기지원 선발이 되면 계속 복무를 하고 비 선발자는 사회로 복귀해야 한다. 약 50%가 장기지원 이 된다고 가정하면 한 기수 중 50%인 20여명은 사회로 복귀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림 3〉 군사학과 학생 졸업 후 진로 3가지 트랙



\*출처 : 2020학년도 2학기 군사학과 워크숍 토의자료 재정리

군사학과 졸업생의 3가지 진로 트랙 중 첫 번째 트랙은 장기지원 선발이 되어 군 복무를 계속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미래전에 대비한 군사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공선택 과목에 4차 산업혁명기술 과목을 추가하고, 군사학과 내에 연계전공으로 방위산업공학 과를 신설하여 제2전공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것이다.

건양대학교 군사학과는 2021학년도부터 방위산업공학과를 연계전공으로 신설

하기로 하였다. 1학년 학생 약 10여명과 2학년 학생 중에서 제2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 5-6명이 지원할 예정이다.

두 번째 트랙은 장기 비선발 졸업생 중에서 예비군 지휘관 또는 군무원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이를 위하여 군사 특성화 과목 중에 4학년 1학기에 “예비전력 및 군무원”이라는 과목을 신설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예비군 지휘관 및 군무원에 대하여 이해하고, 시험과목에 대하여 선 학습한다면 장교 복무 간에 미리 준비하는데 유리할 것이다.

세 번째 트랙은 장기 비선발 졸업생 중에서 방위산업체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이를 위하여 졸업생 중에서 방산업체로 진출하고자 하는 지원자를 찾아 방산업체 진출 방법을 안내하고, 군사과학연구소에서 매년 수행하는 방산전문인력 양성교육과정에 입소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교육 경험을 통하여 볼 때 육군 대위로 전역하고 양성교육에 입소한 교육생은 100% 방산업체에 취업이 되었다. 그만큼 업체 대표들이 군 장교 전역자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향후 제2전공을 방위산업공학과를 선택하여 공학사를 취득한 졸업생인 경우에는 방산업체 취업이 훨씬 유리할 것이다.

어느 경우의 트랙일지라도 체계적인 훈육을 통해 인성교육은 강화되어야 한다.

### 3.2. 자연과학 분야에 중점을 두고 학부-석사-박사과정 연계한 학사관리

김구 선생은 스스로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삼팔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에 구차한 안일을 취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폭발하면 세계평화의 파괴인 동시에 동족의 피를 흘려 왜적을 살리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의 말대로 민족을 중심으로 한 평화통일, 남북협상의 길에서 1949년 6월 생을 마감하였다. 1년 뒤 전쟁이 시작되었고 3년 간 지속된 전쟁 이후 한반도에는 파괴와 절망이 일본에는 번영과 부흥이 자리했다.<sup>10)</sup>

현재 입학한 학생들은 향후 한반도 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것이다. 그만큼 중요한 세대이다. 그러므로 첨단 ICT기술과 군사전력체계를 결합한 군사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

10) 정병준, “김구, 해방 후 건국노선과 평화통일 활동”, 『통일담론의 지성사』, (서울: 패러다임북, 2015), pp.51-55.

학생들이 국방정보통신, 4차산업혁명 기술과목 등을 전공 선택과목으로 수강하도록 하고, 지원자는 제2전공을 방위산업공학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대부분의 졸업생들이 CAD, 코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sup>11)</sup>

군사경찰행정대학원에 석사과정으로 방위산업공학과를 신설하고, 박사과정에 통일학과를 신설하여 충청권으로 부임한 졸업생들과 계룡대, 자운대 및 연무대 근무 간부들이 계속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군사학은 학부-석사-박사과정이 연계되고, 통일학은 석사-박사과정이 연계되며, 방위산업공학은 학부-석사과정이 연계되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 3.3. 교수진의 교육 및 연구역량 향상

교육의 질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교수진의 교육역량이 높아야 하며, 정부 및 산업체 연구과제를 다수 수주하여 연구를 진행할 정도의 역량을 갖춘 교수진을 편성해야 한다.

따라서 전임교수 및 비전임교수의 총원 시에는 박사학위 보유자이면서 연구실적이 많은 학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교수 초빙 조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임교수는 매년 국외 SCI 및 국내 KCI급 학술지에 논문을 1편 이상 게재하고, 비전임교수는 논문게재를 권고하여 학과의 교수진들 내에서 연구풍토가 진작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훌륭한 연구실적이 나오고 좋은 군사학 관련 저서도 발간이 되어 학생들에 대한 교육 수준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군사과학연구소에서는 매년 3건 이상의 연구과제를 수주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군사학과 교수진들이 의무적으로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연구역량을 발휘하고 연구비 또는 자문비 등을 가능하면 충분히 지급받아 연구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구사업과 연계하여 학술세미나, 정책포럼을 분기 1회 이상 계획하여 추진함으로써 연구산물이 축적이 되도록 하면 학과 내에서 자연스럽게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는 학풍이 조성되리라고 본다.

---

11) CAD(Computer Aided Design),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하여 도면 관련작업을 하는 기술, 자동설

계, 컴퓨터 이용 설계라고 한다.

코딩(Coding), 코딩이란 주어진 명령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언어 또는 기계언어

로 프로그램을 입력하는 것. 광의의 의미로 프로그래밍과 동일한 개념이다.

### 3.4. 군사학 학문체계 정립을 위한 학문 공동체 구성

종합대학교에 군사학과가 설치되기 시작한 이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육군에 안정적으로 우수한 중기 복무장교를 획득하도록 해주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도 있었으나 학문적 성숙도 측면이나 국가R&D 및 국방R&D 연구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는 의문이 생긴다.

그동안의 교육과 연구의 실적을 종합하고 더욱 발전된 군사학 학문체계 정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학문공동체가 잘 구성되어야 한다.

현재 군사학과는 8개 협약대학을 중심으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이것은 육군본부와 군사학과 운영을 위한 통로역할로 제한되어 활동하고 있으므로 학문 공동체라고 할 수 없다.

학술활동을 하는 학회가 결성되고 대표적인 학술지를 발간할 수 있어야 하며, 학회 주관의 학술대회와 국가 및 국방관련 연구과제를 함께 수행했을 때 진정한 학문공동체가 형성되어 간다고 할 수 있다.<sup>12)</sup>

단계별 발전방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제1단계는 8개 협약대학과 군사분야 저명한 학자들과 함께 중지를 모아 군사학회를 창립한 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학회의 정기 학술지 발간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처음 학회를 결성할 때 학회의 지향방향에 대한 공감대, 조직 구성문제, 예산의 확보 등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소규모 추진 TF를 구성하여 면밀히 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2단계는 준협약대학 및 비협약대학 중에서 원하는 대학이 참여하도록 권고하여 학회의 규모와 활동범위를 확장하고, 학술지가 등재후보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내 및 국제학술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학회 주관 국가 및 국방관련 연구사업을 수주하여 연구실적이 축적되도록 해야 한다.

제3단계는 방위산업체, 국방관련 연구기관, 군사분야 개인 연구자들을 폭넓게 참여하도록 하여 학회운영을 내실화해야 하며, 학술지가 등재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회가 시스템에 의해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관을 국제적 수준에 맞게 정기적으로 개정하여 군사분야에 관심이 있는 모든 학자 및 학생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군사학 학문공동체로 성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12) 이원희, “미래군사학회 발자취와 발전방향”, 미래군사학회 10주년 기념세미나, 2019, pp.14-18.

## 4. 결 론

미국의 국제정치학자 제임스 스타인버그(James Steinbers)는 그의 저서 21세기 미중관계(전략적 보장과 각오)에서 “미국과 중국이 경쟁적이고, 역동적인 두 국가의 관계에서 본질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전략과 정책을 개발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현재의 우려가 미래의 현실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sup>13)</sup>

그것은 이미 1981년 길핀이 패권전쟁이론을 정립하면서 강대국으로 부흥하는 중국과 기존의 패권국인 미국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충분히 예견했던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sup>14)</sup>

한반도 문제도 두 강대국의 패권경쟁의 구도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 군사학과 학생들이 군 복무 간 중요한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시기는 국제정치의 대전환기, 제4차 산업혁명 기술과 군사전력체계가 결합되어 전쟁의 양상이 바뀌는 군사혁신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학과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시대의 요구에 맞게 전향적으로 변화시킬 때가 되었다.

제4차 산업혁명기술을 습득하여 전장양상의 변화에 방관자가 아니라 직접적인 주도가 될 수 있는 역량을 배양시켜야 하며, 군사학과 학생들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진로 3가지 트랙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어느 경우의 트랙이라고 할지라도 조직 내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성이 갖추어져야 하므로 체계적인 훈육을 통해 초급장교의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군사학과 교육 시스템을 개선함과 동시에 군사학과 교수진의 학문적 업적을 축적하고, 군사학 학문 공동체를 정립함으로써 교육과 연구의 선순환체제가 구축되리라고 확신한다.

---

13) James Steinbers, 박영준 역, 『21세기 미중관계(전략적 보장과 각오)』,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2015), pp.293-295.

14) Gilpin, Robert, War & Change in World Politics.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 《참고문헌》

- 강이화, “4차 산업혁명과 대학교육의 미래”, 『교육혁신 연구』, vol 29. 2019.
- 국가안보실, 『국가안보전략』, 서울: 다윈디자인프린팅, 2018.
- 김명준, “국방과 ICT의 결합”, 『육군 정보화발전 세미나 책자』, 2019.
- 남재일, “학군사관후보생의 양성교육 만족도 분석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행정학 박사 논문, 원주: 상지대학교, 2019.
- 박용현, “군사학이란 무엇인가”, 『군사학 개론』, 서울: 플래닛미디어, 2016.
- 방위사업청, 『‘18-’22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 2018.
- 이원희, “미래군사학회 발자취와 발전방향”, 미래군사학회 10주년 기념세미나, 2019.
- 이종학, 『나의 학문과 인생』, 대전: 충남대학교 출판부, 2009.
- 정병준, “김구, 해방 후 건국노선과 평화통일 활동”, 『통일담론의 지성사』, (서울: 패러다임북, 2015.
- 충남도청, 충남 국방 국가산업단지 조성 개발계획, 2018.
- Anthony T. Kronman, 한창호 역, 『교육의 종말』, 서울: 모티브 북, 2007.
- James Steinbers, 박영준 역, 『21세기 미중관계(전략적 보장과 각오)』, (서울: 아산 정책연구원, 2015.
- Gilpin, Robert, War & Change in World Politics.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 대전일보(2020.4.9.)

# 선비정신과 군인정신의 비교

이 영 찬<sup>1)</sup>

---

## 순 서

1. 서론
  2. 선비정신
  3. 군인정신
  3. 선비정신과 군인정신 비교
  4. 결론
- 

## 요 약

본 연구는 선비정신이 군인정신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 연구결과 역사 속에 흐르는 선비정신은 현재의 군인정신으로 이어져 오고 있었고, 문무를 겸비한 선비는 우리 군인들의 본보기가 되고 있었다. 선비정신이 인(仁)과 의(義)를 기초로 인간존중, 청렴결백 및 근검절약, 명분과 의리, 관용과 달관의 정신들을 실천한다면, 군인정신은 육군의 5대 가치관(충성, 용기, 책임, 존중, 창의)과 3대 핵심가치관(위국헌신, 책임완수, 상호존중)으로 신념화 및 행동화되고 있었다. 내용적 측면을 비교해보면 인간존중이나 명분과 의리 등은 가치관의 충성, 용기, 책임 등과 비슷하고, 강조 측면에서도 문무를 겸비하라는 것은 전투기술에 숙달하고 자기계발을 도모하라는 것과 유사하며, 태도 측면에서도 내면적 태도와 자기 수양을 포함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사하다. 다만, 여기에 더해 군인정신은 외면적 태도까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

1) 영남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lee0chan@hanmail.net

결국, 선비정신과 군인정신은 시대상의 차이일 뿐이지 지향하는 방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고, 그것을 위해 언제라도 자기자신을 희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맥락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선비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우리 군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육군의 5대 가치관이나 3대 핵심가치를 실천하는 것 뿐만 아니라 늘 군사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모든 것에 솔선수범해야 하며, 올바른 품성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아울러 선비정신을 군인들의 정신적 유산으로 받아들여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

**키워드 : 선비정신, 군인정신**

# 1. 서 론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로부터 ‘선비 같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것을 매우 좋아하였다. ‘선비’를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의를 구현하며, 학식과 덕망이 매우 높은 사람을 일컫는 의미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물질만능주의와 개인 및 이기주의가 팽배한 오늘날의 사회 속에서도 정신 및 가치 중심이면서 건전한 사회를 구현하고 공동체 의식을 견지한 ‘선비’는 여전히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비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대부분 학문을 닦고 정의만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선비의 시작은 고구려의 조의선인(早依仙人)과 신라의 화랑(花郎)과 같은 무예를 익힌 무인(武人)들에게서 출발하였다. 그들은 평상시 사냥과 가무, 무예 등을 연습하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전장에 나가 정예군으로 활동하였다. 더불어 틈틈이 학문까지 닦아 그들만의 사상적 기초를 다지기도 하였다. 그래서 선비는 일반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오로지 학문만을 닦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 아니라 무예를 연마하면서 학문을 겸비한 이른바 ‘문무(文武)를 겸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최근 우리 간부들은 일과 중에는 전투 수행방법과 전투기술을 숙달하면서 일과이외에는 자기계발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선비와 같은 삶이라고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선비가 갖고 있었던 정신까지도 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랫글에서는 전통문화 속 우수한 가치관인 선비정신과 우리 군인들이 ‘선비’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거쳐야 할 과정을 알아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과거로부터 현재로 이어지는 군인정신과 선비정신을 비교하여 분석함으로써 오늘날 우리 군인들에게 바람직한 윤리적 가치를 재정립하고자 한다.

## 2. 선비정신

### 2.1 선비의 개념

#### 2.1.1. 선비의 어원

선비는 순수한 우리말로 ‘어질고 지식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선비’의 ‘선’은 몽고의

‘어질다’라는 뜻인 ‘sait’의 변형인 ‘sain’과 연관이 되고, ‘빈’은 몽고어와 만주어에 있는 ‘지식이 있는 사람’을 뜻하는 ‘박시’의 변형인 ‘빈’에서 온 말이라고 분석되기도 한다.<sup>2)</sup> 그것의 우리말은 세종 시대에 제작된 용비어천가에 처음 나타나는데 유생(儒生), 유사(儒士), 유(儒)를 지칭하는 용어으로써 이것은 곧 ‘학문을 닦는 사람, 학식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였다.<sup>3)</sup>

국어사전에서 설명하는 선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식은 있으나 벼슬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며, 둘째, 학문을 닦은 사람을 예스럽게 이르는 말, 셋째, 학식이 있고 행동과 예절이 바르며 의리와 원칙을 지키고 관직과 재물을 탐내지 않는 고결한 인품을 지닌 사람을 이르는 말로 해석하고 있다.<sup>4)</sup>

반면에 단재 신채호 선생은 ‘仙의 무리’라고 해석하여 우리 민족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제례의식의 장소인 소도(蘇塗)를 지키는 무사 집단으로 설명하고 있고, 조선 후기 시조 작가인 김수장(金壽長)은 그의 ‘해동가요(海東歌謠)’에서 “장백산(長白山)에 기를 곳고 두만강에 말 씻기니 서근 저 선비야 우리 아니 사나히나…….”<sup>5)</sup>라고 읊으면서 용맹한 사나이를 ‘선비’라 칭하고 있다. 따라서 선비를 좁은 의미에서의 문인(文人)으로만 단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무인(武人)을 포함한 양반 모두를 선비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인 것이다.

조선 후기 학자이며 문신인 정약용은 그의 속유론(俗儒論)에서 ‘참다운 선비의 배움은 본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며, 오랑캐를 쳐부수며 재산을 넉넉하게 하고, 능히 글과 무(武)를 잘 쓸 수 있어서 마땅하지 않은 바가 없다.’<sup>6)</sup>라고 말했다. 즉, 선비는 ‘문무를 겸비한 높은 수준의 인격자(君子)’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

### 2.1.2. 선비가 되는 과정

훌륭한 선비가 되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책자에서 언급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소학(小學)과 논어(論語), 이덕형의 사소절(士小節), 율곡의 격몽요결(擊蒙要訣), 박지원의 양반전(兩班傳) 등이다. 소학(小學)에서는 인생을 수교(受教), 수학(修學), 행도(行道), 은퇴(隱退)의 4단계로 구분하였고, 논어(論語)는 수학(修學), 입지(立地), 불혹(不惑), 천명(天命), 이순(耳順), 성인(聖人)의 6단계로 구분하여 언급하고 있다. 사소절(士小節)과 격몽요결(擊蒙要訣)에서는 선비의 금지된 행동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예를 들면 선비는 말할 때 몸과 머리, 무릎, 발 등을 흔들지 말

2) 금장태, 『한국의 선비와 선비 정신』, (서울: 집문당, 1996), pp.307.

3) 오석원, 『한국 도학파의 의리 사상』, (서울: 유교문화 출판원, 2005), pp.236 ~ 237.

4) 금성출판사, 『국어대사전』, (서울 : 1992), pp.1606.

5) 김수장 편찬, 『해동가요』, (서울: 정음사, 1950), pp.340.

6) 정약용, 『여유당전서2 시집 I』, (서울: 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pp.340.

라는 등의 행동원칙이 많이 언급되어 있다. 특히, 소학(小學)에서는 15세 때에 상(象)<sup>7)</sup>을 춤추며 활쏘기 및 말 타는 기술을 배우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무예를 통해 선비로서의 자격조건을 갖추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선비는 고려 말 무신 난에 의해 귀족정치가 붕괴하고 새로운 관료층을 형성하면서 사대부(士大夫)라고 칭했고, 조선 시대에는 양반(兩班)으로 불렸다. 그들은 일반 서민(農, 工, 商)과는 다른 계급적 특권을 누렸는데 과거를 볼 수 있는 자격과 각종 부역(賦役)을 면제받았고, 대형(代刑)도 가능하였다. 그들은 독립된 유교 이념으로 의리를 지키는 이념적 주체로 사회를 지도하는 최상위 계층이었고, 모범적 행동으로 대중을 지도할 뿐만 아니라, 물질적 빈곤을 극복하면서도 매사 의리의 정신적 가치를 존중하였다. 더불어 의례를 지도함으로써 성직자와 같은 기능도 담당하였다. 결국, 선비는 도덕적 인간을 양성하고, 사회질서를 바로잡으며, 그들의 이념인 인(仁)을 실현하려고 노력한 시대적 정신 지도자라 규정 지을 수 있다.

## 2.2 선비정신

선비정신이란 선비들이 가졌던 사상이나 정신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유교의 전통적 가치관에서 형성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선비는 신분이나 계급보다는 인격이나 인품, 교양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인간상을 군자(君子)라 명시한다.

논어와 맹자에 나타난 선비정신은 인의사상(人義思想), 의리(義理), 출처관(出處觀), 수기치인(修己治人)으로 볼 수 있다.<sup>8)</sup> 조선 시대에는 유교 이념이 확립되면서 선비의 역할과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그것이 의리 정신과 애국 충절, 실학파의 실용주의 정신으로 나타난다.<sup>9)</sup> 특히, 유교를 국교로 하는 조선 시대에는 선비정신이 사회의 정신적 지주로 정립되기도 하였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사상을 분석해보면 주장하는 학자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크게 인간존중, 청렴결백과 근검절약, 명분과 의리, 관용과 달관 등의 정신<sup>10)</sup>을 가지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선비정신을 보면 모두 긍정적인 정신으로 보이지만 역으로 조선 시대에는 명분과 의리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후기 들어 실학사상의 영향을 받아 실용주의가 나타나지만, 그전까지는 형식과 예법을 너무 강조하고, 자기주장이 너무 강하여 당파 싸움이 발생하는 등 국론이 분열되는 폐단도 발생했던 것이

7) 武舞를 말함. 武舞는 궁중에서 아악을 베풀 때 악생들이 武를 상징하는 옷을 입고 추는 춤을 말함

8) 손운탁, 선비정신이 초기 한국 기독교에 미친 영향(영남대 대학원 박사 논문, 2012.6월), pp. 42~56.

9) 김장태는 이 부분에 대해 “조선 왕조를 통하여 도학이 정통 이념으로 정립되면서 도학의 의리론이 선비 정신의 중추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주장하였다.

10) 정태옥, 선비정신에 대한 연구(계명대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1985. 6월), pp. 42~56. 참조

다. 이러한 이면적인 선비정신의 모습을 역사적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자.

## 2.2.1 긍정적 정신

### 2.2.1.1 인간존중의 정신

우리나라는 신라의 국학 아래로 논어(論語)와 효경(孝經)이 필수적 과목으로 중시되었다. 이 중 논어에서는 공자의 중심사상이면서 유교의 핵심인 ‘인(仁)’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람을 사랑하며 인간을 존중한다는 말로 설명되어지는 인(仁)은 부모에게 미치면 효(孝)가 되고, 형제에게 미치면 우(友)가 되며, 나라에 미치면 충(忠)이 되는 것이라 말한다. 여기에 더해 용서의 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공자가 추구한 인간상인 군자(君子)가 궁극적으로 쌓아야 할 덕을 우리는 인(仁)이라 했던 것이다.

조선의 윤리에서는 특히 삼강오륜(三綱五倫)<sup>11)</sup>을 중요시하였는데 이는 인간관계에서의 올바른 도리를 밝힘으로써 인격적 대우를 통해 인간존중을 실천하도록 한 것이다. 우리의 전통사상에서도 인간존중 정신은 잘 나타나 있다. 경천애인(敬天愛人), 재세이화(在世理化), 인본 및 민본적 정치사상, 동학의 인내천(人乃天) 등이 바로 그것이다. 물질문명이 발전하여 인간 소외의 현상이 두드러는 현대사회 속에서 인간존중은 우리가 반드시 키워야 소중한 정신적 가치이다.

### 2.2.1.2 청렴결백과 근검절약의 정신

‘남산골샌님 원하나 못 내도 떼기는 잘한다.’ 말이 있다. 원님을 못 낸다는 말은 인사 청탁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고, 잘 떼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으면 가차 없이 규탄하여 이를 바로잡겠다는 선비의 기개를 의미한다. 그러한 정신을 살펴볼 수 있는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이조 세조 때에 선비 이승소(李承召)는 판서<sup>12)</sup>의 자리에 있으면서 겨우 삼 간밖에 안 되는 초가집에서 살았다. 그의 집 옆에는 당시 병조판서가 살았다. 하루는 어전에서 병조판서가 아는 체를 하자 이승소는 전혀 응답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최근 병조판서가 호화주택을 지어 살자 그를 아는 것 자체가 자신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의 행동은 선비사회에서 병조판서를 파문시키는 일종의 행위였다. 그것을 한 자로 지면불지호(知面不知乎)라고 하는데 해석하면 ‘누구시더라?’라는 뜻으로 절교를 선택

11) 유교의 도덕 사상에서 기본이 되는 것으로 삼강(三綱)은 군위신강(君爲臣綱), 부위자강(父爲子綱), 부위부강(夫爲婦綱)을 말하며, 오륜(五倫)은 부자유친(父子有親), 군신유의(君臣有義), 부부유별(夫婦有別), 장유유서(長幼有序), 붕우유신(朋友有信)의 다섯 가지 지켜야 할 규율을 말한다.

12) 조선 시대 중앙행정관서의 장관, 육조의 정2품 장관직.

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일부 다른 생각이 있을수는 있으나 이처럼 검소하고 분수를 지켜온 선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숭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사회는 무너지지 않았고, 아름다운 고유의 전통과 문화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다.

### 2.2.1.3 명분과 의리의 정신

우리나라는 주자학이 고려 말에 도입된 직후부터 대의명분을 중요시하는 사상이 시작되었다. 원(元)에서 즉위시킨 공민왕은 선비들의 성원을 등에 업고 배원책(排元策)을 표방하였고, 임진왜란에서는 강화란 있을 수 없다고 하여 많은 인명이 살상되었음에도 7년간이나 항전을 거듭하였다. 그것은 사실 애국애족의 정신보다는 오랑캐에 굴복할 수 없다는 대의명분이 작용했을지 모른다. 역사에서 세조의 무도(無道)를 손가락질한 사육신(死六臣), 청(靑)의 침략에 죽음으로서 대항한 삼학사(三學士), 일제의 침략에 단식으로 항거한 최면암(崔勉庵) 등은 죽음을 절의(絶義)로 바꾼 대표적인 선비정신 소유자들이다. 그들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죽음도 불사하며 그것을 지켜냈다.

이처럼 선비정신은 역사적으로 ‘의리(義理)’로써 가장 확실하게 나타났다. 그것은 개인의 생각과 행위에서 나타나는 작은 문제에서부터 사회와 국가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를 평가하는 분별의 기준이자 실천적 행동원리로 작용하고 있다.<sup>13)</sup> 여하튼 명분과 의리의 정신들은 물질과 권력 앞에 비굴하고 자신의 출세와 영달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양심적 인사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정의가 불의를 이기는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였다.

### 2.2.1.4 관용과 달관의 정신

공자의 제자 자공이 평생 지켜야 할 덕목이 무엇이냐고 공자에게 묻자 그는 ‘서(恕)’라고 대답하였다. 이 서(恕)는 인(仁)을 실천하는 길인 동시에 선비가 갖추어야 할 덕이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타인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관용(寬容)이다. 이 관용이 바탕이 되어 세상의 일에 구속됨이 없이 더욱 멀리 내다보는 달관의 경지에 도달한다. 여기 한 가지 역사적 사례를 들어보겠다.

조선의 을사사화 시 이조정랑(吏曹正郎)<sup>14)</sup>을 지냈던 노수진(盧守珍)은 파직되어 진도

13) 금장태, 한국의 선비와 선비정신(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11. 15), pp.63~65. 요약

14) 이조정랑(吏曹正郎)은 이조의 관직인 정랑(정 5품), 좌랑(정 6품)을 포함해 부른 명칭인데 직위는 비록 높지 않았지만, 내외 문무관을 추천하는 임무를 가졌고, 각 조 장관인 판서를 임명할 시에는 그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조선 시대에 눈독을 많이 들이는 자리였다. 그 자리는 후에 사색당파의 시발점이 되는데 이를 서로 차지하려 신하들 간에 최초 동인, 서인으로 갈라졌고, 차후 광해군의 세자 책봉과 관련하여 복인, 남인 등으로



로 귀양을 갔었다. 당시 그곳 수령이었던 홍인록(洪仁祿)은 수시로 그를 괴롭혔는데 선조가 즉위하자 그는 귀향에서 풀리고 지위도 차츰 올라갔다. 반면 홍인록은 죄를 지어 조정에서 처벌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결국 홍인록의 생사는 노수진의 말 한 마디에 결정되게 되었다. 홍인록은 과거 노수진을 학대했기에 절망에 빠질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노수진은 그가 악인(惡人)이 아니며 적절히 쓰면 괜찮다고 추천하면서 오히려 그를 도왔다. 그는 원수를 사랑으로 갚은 진정한 의미의 미덕을 발휘한 선비정신의 소유자였다.

이처럼 관용은 주변에 덕을 발산하여 오해와 반목, 갈등과 원한 등의 나쁜 인간관계를 버리고 선으로 사회를 재구성시킨다. 이와 같은 관용과 달관의 전통적인 인간관계는 현재의 이해타산적이며 비인간적이고 근시안적 관계로 변모하는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정신적 요소라 할 수 있다.

## 2.2.2 부정적 정신

### 2.2.2.1 지나친 명분과 의리 중시

선비정신의 부정적 요소라고 하면 지나치게 대의만을 강조하다 보니 현실과 괴리되고 대화와 타협을 이루지 못해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수도 있다는 점이다. 즉 당면한 국가의 위기 앞에서도 인(仁)의 포용적 자세보다는 의(義)의 비판적 태도를 밝히는데에만 집중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가지 사례로 인조반정으로 쫓겨난 광해군은 사실 조선의 군주 가운데 국제정세에 뛰어난 현군(賢君)이었지만 쿠데타 세력의 왜곡으로 역사에서 폭군(暴君)으로 낙인 찍혔다. 그는 재위 기간 청명(明靑) 교체 시기를 맞게 되자 절묘한 ‘등거리 외교’로 전쟁의 발발을 막았다. 그러나 이에 불만을 가진 대명 사대주의 노선을 견지한 신하들에 의해 폐위되었고, 이후 즉위한 인조는 노골적인 송명배금(崇明背金) 정책을 펼쳤다. 결국, 청은 조선을 침략하였고, 1936년 남한산성의 삼전도에서 인조는 청의 태종에게 삼배구고(三拜九叩)<sup>15)</sup>의 치욕을 겪게 되었다. 그리고 죄없던 약 50만여명의 백성들이 끌려가게 되었으며, 수많은 재물 또한 빼앗기고 말았다.

이러한 조선 후기의 사색당파(四色黨派)는 건전한 비판과 견제보다는 탁상공론으로 파벌의 주장을 관철하려다 보니 오히려 나라에 큰 짐이 되었다. 또한, 그들은 유교의 예법과 도덕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형식과 절차에 빠져 사회의 개혁에 장애가 되기도 하였다.

---

갈라졌다. 오늘날 청와대 인사수석의 자리로 보면 무난함

15) 본래는 三拜九叩頭禮(삼배구고두례)임. 인조는 평민 옷을 입고 세 번씩 절하며 그때마다 세 번씩 머리를 조아렸는데 실제로는 청 태종의 트집으로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몇십 번 머리를 부딪쳤다고 함.

## 2.2.3 타국 정신과의 비교

우리나라에 선비정신이 있다면 유럽에는 기사도(騎士道) 정신이 있고, 일본에는 무사도(武士道)<sup>16)</sup>정신이 있다. 기사도는 '기사가 가져야 할 명예롭고 예의 바른 행동'을 의미하며 봉건제도의 시기인 11세기에 발생하여 12~13세기에 전성기를 이루었다. 이후 14~15세기에 접어들며 타락했고, 결국 쇠퇴해 갔다. 기사들이 추구한 덕목은 기사서임식(騎士敍任式)에서 알 수 있듯이 무용(武勇).성실(成實).명예(名譽).예의(禮儀).경건(敬虔).겸양(謙讓).약자보호(弱者保護) 등이다. 초기에 기사도의 핵심을 이룬 것은 무용과 성실이었으나, 이후 명예와 예의가 추가되었고,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윤리를 받아들여 경건.겸양.약자보호 등이 추가된 것이다. 약자보호에는 부인에 대한 봉사도 포함되었는데 후에 이것의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신사도(紳士道) 정신이다. 물론 주군에 대한 충성은 언제나 그들의 중요한 규범이었다.

무사도는 일본의 춘추전국 시대에 전투를 업(業)으로 하는 계급 집단의 등장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봉건제 확립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성립되었다. 초창기 무사는 농촌 출신으로 전쟁에서 살아남은 용맹성은 인정되었으나 학문과 도덕성을 겸비한 엘리트적 존재는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가 윤리가 통용되는 규범을 만들었는데 크게 3가지로써 첫째, 철두철미하게 반성하는 태도, 둘째,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 셋째, 자신에 대한 명예의 수호이다. 그중 명예를 최고의 도덕준칙으로 삼아 그것이 훼손되면 할복(割腹)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그것을 지켰다. 물론 그들도 주군에 대해 무조건의 복종을 원칙으로 하며 주군에 대한 반항을 가장 극악한 죄로 간주하였다.

무사도란 용어는 최초 16세기부터 사용하였지만, 규범에 대한 개념은 이미 가마쿠라 시대(1192~1333)에 발전했다. 무사도에서 일관되게 강조한 것은 상무(常武) 정신으로 이는 무예와 싸움터에서의 용맹성을 말한다. 도쿠가와 시대(1603~1867)에는 그것의 개념이 유교의 영향을 받아 의리나 의무를 강조하는 보다 포괄적인 도덕체계로 변했다. 사무라이는 유교에서 말하는 '군자(君子)'와 동일시되었으며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층계급에 덕을 베푸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19세기 중반에는 사회 윤리교육의 기초가 되었고 충성과 희생의 대상이 영주에서 천황으로 바뀌었으며, 그것이 일본의 민족주의를 일으키는 데 이바지하였다. 1945년까지의 태평양 전쟁 기간에 일본인들의 사기를 강화시킨 것이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무사도 정신은 무사가 평시 지키고 명심해야 할 도덕적·윤리적 규범으로 그것에 영향을 준 사상은 일본 고유 민속신앙인 신도(神道), 중국에서 전해진 불교, 우리나라에서 전래한 유교 등이 있다. 신도를 통해서는 일본민족과 영토에 대한 애국심을, 불

---

16) 사무라이 정신이라고 함.

교를 통해서는 죽음을 극복하는 담대한 마음을, 유교를 통해서는 충성과 의리를 만들어 내었던 것이다. 이러한 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일본 무사들의 특징은 어둡고, 무섭고, 빈틈없고, 차갑고, 냉정한 이미지로 표출되었으며, 이러한 특성 속 무사도 정신의 기저에는 천황 중심의 국가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신도 사상 또한 포함되어 있었다.<sup>17)</sup>

이러한 기사도 및 무사도 정신들을 우리의 선비정신과 비교해 보면 다음의 몇 가지 차이점을 알 수가 있다. 첫째, 선비정신이 인간존중을 매우 강조하는 반면에 타국의 정신들은 개인 위주의 정신이며 주군에 대한 절대 충성만을 강조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그것들의 태도 자체가 전쟁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선비정신은 각자의 내면적 태도 즉 자기 수양을 강조하지만, 기사도와 무사도는 외향적 태도, 즉 타인에게 비치는 자신들의 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셋째, 선비정신은 무예뿐만 아니라 학문을 닦는 것을 매우 중요시하여 사회의 엘리트 계층으로 성장하였지만, 기사도와 무사도 정신은 무용만을 강조하다 보니 항상 누군가를 섬기는 피지배층으로 남게 되었다는 점이다.

<표 1> 선비정신과 기사 및 무사도 정신 비교

구 분	선비정신	기사도 및 무사도
중심사상	인간존중, 인(仁)	주군 충성
태도 및 숙달방법	내면적 태도, 자기 수양	외향적 태도, 검술 숙달
강조사항	문무 중시	무예 중시

### 3. 군인정신

우리 국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그 이념으로 한다. 또한,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복무상의 강령으로 군인정신을 제정하였고, 그 속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군인정신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므로 군인은 명예를 존중하고 투철한 충성심, 진정한 용기, 필승의 신념, 임전무퇴의 기상과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을 굳게 지녀야 한다.”<sup>18)</sup>

17) 조형기, 일본 무사도에 관한 연구(동아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03. 2), pp.57.

18) 군인복무규율, (대통령령 제26394호, 2015.7.1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법률 제13631호, 2015.12.29.)에는 군인은 명예를 존중하고~애국애족의 정신을 지녀야 한다고 명시되었다.

군인정신은 군의 무기와 장비 같은 유형전력이 아닌 무형전력을 대표하는 구성요소이다. 군인정신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려는 군인의 마음가짐”<sup>19)</sup>으로 이는 곧 ‘위국헌신(爲國獻身)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것은 전투상황에서 전투 의지로 작용함은 두말할 나위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군인정신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필수적인 요소’로 규정될 만큼 중요하다.

아울러 군인정신은 군인으로서 지녀야 할 가치관의 결정체이기도 하고 행동을 규제하는 원리이기도 하다. 군인이 부여된 임무나 공동생활을 하면서 전사로서 가져야 할 가치나 태도가 자연스럽게 내면화되며 형성된 신념체계가 곧 군인정신인 것이다. 헌팅톤(S. P. Huntington)이 군인정신이 전문직 군사 기능의 수행에 내재되고 그와 같은 기능의 본질에서 추론되는 여러 가지 가치, 태도 및 시각으로 형성된다고 주장한 것 또한 이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sup>20)</sup>

군인의 올바른 가치관과 고도의 윤리의식이 군인정신의 중심에 있다는 점에서 군인의 도덕성과 군인정신은 구분 지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 할 수 있다. 누구나 생존의 욕구가 있지만, 때때로 군인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야 한다. 이럴 때에 목숨을 내놓고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군인정신인 것이다. 투철한 군인정신은 도덕적 결단을 통해 단련되며, 기필코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력으로 구현된다.<sup>21)</sup>

군인정신은 국가와 군을 위해 바치는 이타적 자기희생을 의로운 일이라 판단한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은 어떤 고난과 역경도 극복하겠다는 도덕적 의지를 배양할 수 있게끔 한다. 그러하기에 전쟁의 도덕적 정당성을 인식할 수 있는 건전한 이성적 분별력과 판단력을 토대로 악(惡)과 불의(不義)에 맞서는 정의감, 용기 신의, 책임감 등 도덕적 능력을 높임으로써 필승의 전투 의지를 심어주는 군인정신 함양 교육은 군인들에게 있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군인정신은 역사적으로 하나의 사상으로 전해오면서 현대 군인들의 정신적 지주와 무형전력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 고조선 시대의 홍익인간 사상은 인간중심의 민족 사상으로 발전하였는데 시대별로 고구려의 상무 정신과 신라의 화랑도 정신, 백제의 자위(自衛) 정신, 고려의 자주(自主) 정신, 조선의 충효(忠孝) 정신 등이 군인정신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역사 속에서 우리 군인정신이 어떻게 이어져 오고 있고, 현재에 강조되고 있는 정신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

19) 이태규, 「군사 용어사전」, 일월서각, 2012

20) Samuel Huntington, The Soldier and the State: The Theory and Politics of Civil-Military Relation(Cambridge,M.A.: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57), pp.63.

21) 국방부, 간부의 군대윤리, 2016.11.30., pp.31.

### 3.1 역사적 측면

환인 시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오상지도(五相之道)<sup>22)</sup>의 가르침은 고구려와 신라에 까지 전해졌다. 이를 수련하는 사람들을 고구려에서는 조의선인(皀衣仙人)<sup>23)</sup>, 신라에서는 화랑(花郎)이라고 불렀다. 이들은 무예를 통해서 자신의 심신을 수련하였고, 이것이 훗날 상무 정신과 화랑도 정신의 토대가 되었다.

조의선인은 ‘선배’라고도 불렸는데 매년 10월에 상호 간의 경기를 통해 그동안 갈고 닦은 무예를 군중에게 선보였다. 그들의 활약은 과거 안시성 전투에서 잘 나타났다. 당 태종이 토산을 쌓고 그것을 무너뜨려 성벽을 공략하려고 하자 그들은 결사대 100여 명을 조직하여 당나라 2만의 기병과 전투를 벌여 토산을 차지하였다고 한다. 당시 그들의 수장이었던 연개소문과 유명한 재상인 을파소나 을지문덕 장군 역시 모두 같은 출신이었다. 그들의 정신 수양서는 참전계명(參陣誡命)<sup>24)</sup>이라는 것으로 성(誠), 신(信), 애(愛), 제(濟), 화(禍), 복(福), 보(報), 응(應)의 8가지(八理訓)를 강조하였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라의 화랑은 진평왕 시절 원광대사가 그들에게 일러준 다섯 가지 계율(世俗五戒)<sup>25)</sup>을 지침서로 수련하여 삼국통일의 대업을 달성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 중 임전무퇴는 직접 전투와 관련하여 언급하였고 나머지는 평시에 수련해야 할 계명이었다. 이후 고려 시대에는 선랑이라 하여 대관의 자제를 선발하여 임명하는 등 선비의 맥을 잇기 위해 힘썼다.

백제는 고구려의 위협과 신라와의 경쟁 속에서 스스로 힘을 길러 나라를 지키려는 자위 정신을 강조하였고, 이것이 5천의 결사대가 5만의 신라군과 결전하게끔 했던 필수요소로 작용했던 것이다. 고려가 북방의 거란과 여진을 물리치고 몽골과 40년간 싸울 수 있었던 것은 호국불교를 기반으로 하는 자주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선 시대에는 유교숭배 정책에 기초한 충효 정신이 강조되어 왜란과 호란 등에서 의병 활동을 전개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구한말 위정척사 운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 3.2 현대적 측면

---

22) 오상지도는 충(忠,) 효(孝,) 신(信,) 용(勇,) 인(仁)을 말함

23) 조의선인(皀衣仙人)이란 검은빛의 조복을 입은 선인을 말함

24) 을파소가 백운산(묘향산맥 중의 산)에 들어가 하늘에 기도하다가 어느 날 국조 단군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얻었다는 천서(天書).

25) 세속오계는 첫째, 충성으로서 임금을 섬긴다(事君以忠). 둘째, 효도로서 아버지를 섬긴다(事親以孝). 셋째, 믿음으로서 벗을 섬긴다(交友以信). 넷째, 싸움에 임해서는 물러섬이 없다(臨戰無退). 다섯째, 산 것을 죽임에는 가림이 있다(殺生有擇)는 다섯 가지의 계율임

1948년 정부 수립 후 군이 창설되었고, 이후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군 내부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애국심이 강조되었다. 1966년에는 군인복무규율이 제정되어 애국애족 정신으로 반영되었고, 그것이 이념으로 확고하게 뿌리 잡혀 철저한 반공사상으로 무장하게 되었다. 이후 월남전쟁을 거쳐 1980년 말까지 동일한 이념이 지속 이어졌지만, 소련이 붕괴하고 탈냉전에 들어가면서 군에서도 새로운 군인정신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육군은 그것을 정립할 목적으로 1997년에 ‘장교의 도(道)’를 제정하여 수신(修身), 수범(垂範), 위국헌신(爲國獻身)의 3가지 가치관을 강조하였다. 이후 군심(軍心)을 하나로 결집하고 우리의 정신적 사고와 행동의 지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치관 정립을 하고자 2002년에 ‘충성’, ‘용기’, ‘책임’, ‘존중’, ‘창의’의 5대 가치관을 제정하였다.

2003년도에는 장교단의 정신적 기준과 행동의 지표로서 위국헌신을 ‘장교단 정신’으로 제정하였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첫째, 전투적 사고를 견지한 장교, 둘째, 도덕성이 확립된 장교, 셋째, 언행일치 하에 솔선수범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장교를 실천지표로 삼았다.

2007년에는 21세기의 생존전략인 변화와 혁신을 위해 ‘육군문화혁신’을 제정하였는데 구시대적 의식과 관행을 청산하고 ‘사람 제일·자율과 책임·효율과 창의의 정신’을 강조하였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리더십 문화, 정신 문화, 일하는 문화, 병영 문화, 인재육성 문화, 교육훈련 문화 등 6개 분야 31개 실천과제를 선정하였다.

2019년에는 기존의 5대 가치가 신분과 계급에 따라 덕목이 상이하고, 신념화 및 행동화의 어려움이 제기되어 구성원들의 설문결과를 토대로 ‘위국헌신’, ‘책임완수’, ‘상호존중’을 육군의 핵심가치로 선정하였다. 위국헌신은 군인의 본분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이며, 책임완수는 부여된 임무를 올바르게 탁월하게 수행하여 국가 수호에 이바지하는 것이고, 상호존중은 모든 사람이 인간의 존엄성과 그 존재가치를 인정하고 지켜주는 것이다.

역사 속에서 강조한 군인정신과 현재 가치관으로 정립하고 있는 군인정신들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표 2> 군인정신의 변천

구 분		내 용
역사	상무 정신(고구려)	• 성(誠), 신(信), 애(愛), 제(濟), 화(禍), 복(福), 보(報), 응(應)
	화랑도 정신(신라)	• 충(忠), 효(孝), 신(信), 임전무퇴(臨戰無退), 살생유택(殺生有擇)
현대	군인복무규율(1966)	• 애국애족정신(명예, 충성, 용기, 필승신념, 임전무퇴, 책임완수)
	장교의 도(1997)	• 수범(垂範), 수신(受信), 위국헌신(爲國獻身)
	육군 5대 가치관(2002)	• 충성(忠誠), 용기(勇氣), 책임(責任), 존중(尊重), 창의(創意)
	장교단 정신(2003)	• 위국헌신(전투적 사고, 도덕성 확립, 언행일치하 솔선수범)
	육군문화혁신(2007)	• 사람 제일, 자율과 책임, 효율과 창의
	육군 3대 핵심가치(2019)	• 위국헌신, 책임완수, 상호존중

※ 군인복무규율은 2015.12.29.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법률 제13631호)으로 바뀜

위 군인정신들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 몇 가지의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충(忠)에 대한 대상이 임금에서 국가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즉, 역사에서는 임금이 나라의 주인이지만 현대에는 그것이 국가와 국민이기 때문이다. 둘째, 현대의 전투개념에 근거하여 임전무퇴 등은 제외되었다. 현대전은 전후방 동시통합 전투가 전개되고 인명이 중시되기에 필요하다면 후퇴할 수도 있다. 셋째, 위국헌신은 과거와 현재 모두에서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군인이라는 신분은 태생적으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직업이다. 따라서 사사로운 것보다 국가를 우선하는 가치가 요구된다. 넷째, 신분과 계급을 구분하지 않고 구성원들 모두가 실천 가능한 것으로 선정되었다. 대상에 따라 실천사항이 틀리면 추진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섯째, 효(孝)와 리더십 등 개인적으로 실천할 분야는 제외하였다. 그것들이 군인정신에 어느 정도 영향은 미치겠지만 절대적이지는 않아 배제한 것이다.

### 3. 선비정신과 군인정신 비교

선비는 문무를 겸비한 높은 수준의 인격자이며, 인(仁)을 실현하려고 노력한 정신적 지도자이다. 그들은 유교를 이념으로 인간존중, 청렴결백과 근검절약, 명분과 의리, 관용과 달관의 정신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였다.

군인정신은 역사적으로 고구려의 상무 정신과 신라의 화랑도 정신이 이어져 육군의 5대 가치관(충성, 용기, 책임, 존중, 창의)으로 정립되었고 최근에는 3대 핵심가치 (위

국헌신, 책임완수, 상호존중)로 신념화 및 행동화되고 있다.

내용적 측면에서 선비정신과 군인정신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선비 사상에서 인간존중은 그 대상이 백성인 데 반해, 군인정신에서는 전우에 해당한다. 청렴결백과 근검절약은 군인정신에는 포함되지 않고 장교단 정신의 도덕성 확립에 반영되어 있다. 명분과 의리는 올바른 것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 군인정신의 충성과 용기, 책임에 해당한다. 관용과 달관은 장교단 정신의 도덕성 확립과 언행일치하 솔선수범과 관련이 깊다. 이것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3> 선비정신과 군인정신 비교

구 분	선비정신	군인정신		비 고
		5대 가치관	3대 핵심가치	
세부내용	인간존중(仁)	존중	상호존중	
	청렴결백, 근검절약	•	•	장교단 정신
	명분과 의리	충성, 용기, 책임	위국헌신, 책임완수	
	관용과 달관	•	•	장교단 정신

둘째, 강조사항 측면에서는 두 정신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선비정신이 문무를 겸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처럼 군인정신 또한 전투 수행방법과 전투기술의 숙달 외 다양한 자기계발 도모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태도와 숙달 방법 측면에서 선비정신이 내면적 태도와 자기 수양을 강조하는 데 반해 군인정신에서는 그것 외에도 외적 태도나 전술 전기의 연마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큰 틀에서 보면 선비정신과 군인정신은 많은 부분에서 일치한다. 이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군인정신이 과거의 선비정신을 계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비정신은 넓은 의미의 애민(愛民)과 의(義)에 해당하지만, 군인정신은 조직의 존재 목적이나 정체성, 역할을 의미하는 육군의 5대 가치관이나 3대 핵심가치가 구성원들의 의사결정과 행동방식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두 정신 모두 지향하는 방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고 그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는 측면에서 궁극적으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선비정신과 군인정신은 시대상의 차이만 있을 뿐이며 기본적인 의미와 맥락은 같이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4. 결 론

앞에서 필자는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과거에 선비가 문인(文人)만이 아니고



무예까지 닦는 무인(武人)의 자질도 겸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래서 선비를 ‘문무(文武)를 겸비한 높은 수준의 인격자(人格者)’로 정의를 내렸고 선비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어린 시절에는 활쏘기와 말타기 등과 같은 무예 등도 익혀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그들은 인(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의(義)를 소중한 가치로 여겼으며, 인간존중, 청렴결백과 근검절약, 명분과 의리, 관용과 달관의 정신들을 실천하였음을 밝혔다.

선비정신과 유사한 군인정신 또한 역사 속에서 고구려의 상무 정신과 신라의 화랑도 정신에서 유래되어 현재는 ‘장교의 도’, ‘육군의 5대 가치관’ ‘장교단 정신’, ‘육군문화혁신’, ‘육군의 3대 핵심가치’ 등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그 중 육군의 5대 가치관(충성, 용기, 책임, 존중, 창의)과 3대 핵심가치(위국헌신, 책임완수, 상호존중) 등은 선비정신과 일맥상통하며 현재에 맞게 가장 잘 표현한 내용임을 언급하였다. 즉, 종합적 측면에서 우리 군인들은 선비정신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현대시대의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군인들이 더욱 더 시대에 맞는 선비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는 군사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군대는 전투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구성원인 군인은 적과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사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계급과 직책에 맞는 군사이론과 교리, 직무지식을 습득하고 전투지휘 및 기술, 관련 법규 등도 숙달 및 숙지해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노력이 결국 선비사상의 핵심인 인간존중, 다시 말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에 핵심적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실력이 뛰어난 군인이 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둘째는 모든 면에서 솔선수범해야 한다. 솔선수범은 글자 그대로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과거 선비들은 청렴결백하고 근검절약하며 관용 등의 도덕적 모범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었다. 우리 군인들도 위험하고 힘든 일에 앞장서고 현장에서 구성원들과 동고동락하며 신뢰와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 솔선수범은 구성원들에게 사고와 행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꾸준한 솔선수범 속 자기절제의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군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올바른 품성을 가져야 한다. 여기서 품성이란 사람의 됨됨이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육군의 5대 가치관도 포함되지만, 무엇보다 윤리의식과 공정성을 견지해야 한다. 윤리의식은 도덕적 가치판단에 따라 바르게 행동하고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다하는 자세와 태도를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덕적 언행과 청렴, 준법정신 등을 실천해야 한다. 공정성은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공평하고 올바르게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사고와 행동, 공평한 대인관계, 명확한 공사의 구분 등을 실천해야 한다.

선비라는 칭호는 말이 아닌 선비정신을 행동으로 실천할 때만 가능하다. 과거부터 지

금까지 선비정신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의 근원으로 불변의 가치를 지니고 있기에 오늘날 우리 군인들은 언제나 선비정신을 잊지 않고, 본받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정신적 유산인 선비정신과 유사한 군인정신을 가슴속에 품고 임무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군인, 그리고 군 조직의 존재이유이자 목표인 '조국수호'라는 숭고한 사명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1. 국방부, 『간부의 군대윤리』, 2016.
2. 금성출판사, 『국어대사전』, 서울, 1992.
3. 금장태, 『한국의 선비와 선비정신』, 서울, 집문당, 1996.
4. 금장태, 『한국의 선비와 선비정신』,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5. 김수장 편찬, 『해동가요』, 서울, 정음사, 1950.
6. 오석원, 『한국 도학파의 의리 사상』, 서울, 유교문화 출판원, 2005.
7. 이태규, 『군사 용어사전』, 일월서각, 2012.
8. 정약용, 『여유당전서2 시집 I』, 서울, 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9. 정태옥.(1985).「선비정신에 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0. 조형기.(2003).「일본 무사도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1. 손윤탁.(2012).「선비정신이 초기 한국 기독교에 미친 영향」. 영남대 교육대학원 박사 논문
12. Samuel Huntington, The Soldier and the State: The Theory and Politics of Civil-Military Relation(Cambridge,M,A.: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57), pp.63.
13. 군인복무규율, 대통령령 제26394호(2015. 7. 13.)
1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법률 제13631호(2015. 12. 29.)

<abstrast>

## Comparison between Seonbi spirit and soldier spirit

Lee, Young Chan (Yeungnam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the scholarly spirit is related to the military spirit.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spirit of scholarship in history has been passed down to the spirit of the current soldier, and the scholar who has both literary and literary arts has become an example of our soldiers. Based on humanity and righteousness, the spirit of scholarship practices the spirits of respect for humanity, integrity, innocence and power saving, justification and loyalty, tolerance and dearness, and the military spirit is the army's five values (Responsibility, respect, and creativity) and three core values (dedication to the country, fulfilling responsibilities, and respecting each other) were becoming convictions and actions. In terms of content, respect for humanity, justification, and loyalty are similar to loyalty, courage, and responsibility in values, and in terms of emphasis, having both culture and knowledge is similar to mastering combat skills and promoting self-development. Including the inner attitude and self-discipline, the military spirit regards the outer attitude as important.

In the end, the spirit of the scholar and the spirit of the soldiers are only the difference in the times, but the direction they aim for is for the country and the people, and it can be seen that they share the context in that they sacrifice themselves for it. Today, in order to realize the spirit of scholarship, what we want to ask our soldiers is that in addition to the Army's five values and three core values, we must strive to become military experts, take the initiative in everything, and strive to have the right character. In addition, it suggests that the spirit of the scholar will be accepted as the spiritual heritage of the soldiers and continued to be inherited and developed in the future.

**Key Words : Seonbi spirit, soldier spirit**



# 방어작전 시 기동성 발휘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

성 형 권<sup>1)</sup>

---

## 순 서

1. 서론
  2. 이론적 고찰
  3. 기동성의 본질
  4. 방어작전 시 기동성 발휘
  5. 결론
- 

## 요 약

현재 양적인 병력의 축소와 더불어 첨단 무기체계에 의한 전투력의 질적인 향상을 추진하고 있는 육군의 지상작전부대는 앞으로 현재에 비해 병력 밀도가 현저하게 낮아진 전장에서 비선형 및 분산된 상태 하에서의 작전 수행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이에 따라 민첩한 물리적 기동력과 ‘상황판단-결심-대응’의 전투지휘 속도를 통한 전투 효율성의 극대화가 요구되며, 특히 방어작전의 수행에 있어서도 진지 위주의 작전개념으로는 변화되는 전장환경에 대응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동성의 의미를 고찰해 보고, 방어작전 간에도 기동성을 적극적으로 발휘해야 할 필요성을 실증적으로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키워드:** 기동, 기동성, 기동성 발휘

---

\* 본 논문은 2015년 합동군사대학교 육군대학 지상전술 2학처장으로 재직 당시 육군교육사령부 교리연구사업의 일환으로서 연구 및 발표했던 내용을 정리한 것임.

1) 영남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shkmil@hanmail.net

# 1. 서 론

‘기동(機動, Maneuver)’은 군사작전의 원칙으로서, 그리고 전투수행기능(War-fighting function)의 한 분야로서 과거와 현대는 물론이고 미래의 군사작전 수행에 있어서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이에 따라 육군에서는 이러한 ‘기동’에 의한 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급 전투부대들이 기동성을 구비하고 발휘할 것을 끊임없이 강조해 오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기동성’이 단순히 적보다 유리한 위치로 병력, 장비, 물자 등을 이동시키는 ‘기동’의 정의와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용어인지는 대해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기동성’이라는 용어의 사용 빈도가 매우 높은 것에 비해 아쉽게도 우리 군의 어떠한 교범에서도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sup>2)</sup> 그 이유를 추정컨대, ‘기동’의 의미가 명확히 정의되었으므로 군이 ‘기동성’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기동성을 단순히 물리적인 기동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시켜버리고, 준비된 진지 위주로 정(靜)적인 전투를 수행하는 방어작전보다는 다양한 기동형태를 적용하여 전투를 동(動)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공격작전에서 중요시되는 성격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적으로 기동성은 물리적인 영역과 사고의 영역이 동시에 존재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미래의 군사작전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C4I 체계를 중심으로 정보감시체제와 정밀타격체제가 연동되어 실시간 ‘상황판단-결심-대응’ 과정이 반복적으로 순환되는 전투지휘가 이루어진다. 이 가운데 지상작전은 비선형 또는 분산 상태에서 신속하고 결정적인 기동으로 적을 압도하여 조기에 전쟁을 종결하는 양상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양상 속에서 작전부대가 발휘하는 물리적인 기동성과 지휘관과 참모가 전투를 지휘하는 과정에서 발휘하는 사고의 기동성이 결합되어 상승효과를 창출함으로써 전장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전쟁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sup>3)</sup> 이러한 기동성의 발휘는 현대뿐만 아니라 미래의

---

2) 합동 참고교범 10-2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10차 개정판(‘10.12)에는 다음과 같이 기동성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기동성(機動性, Mobility)은 군부대가 고유의 임무를 완수할 능력을 보유한 채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능력 또는 특성”이라고 제시하고 있으나 정의된 내용은 단순히 물리적인 이동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하지만, ’14. 12. 31부 11차 개정판이 새로이 발간되면서 기동성에 대해 정의한 내용은 삭제되었다.

3) 현재 우리 육군의 부대 수는 점차 감소하는 반면에 어느 한 제대의 작전공간은 과거보다 2~3배 정도 확장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 작전을 수행하는 각 제대는 현재보다 질적으로 향상된 전투수행 능력을 이용하여 확장된 공간을 극복해야 하는데, 이는 부대의 기동능력, 정보와 화력을 결합한 전투수행, 전투지휘의

전장에서도 그 중요성이 변함없이 유지될 것은 분명하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현대 및 미래전장에서 기동성 발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이론적인 기반을 정립하는 데 두었으며, 이를 위해 다음의 두 가지 논점에 주안을 두고 작성하였다. 첫째는 ‘기동성’의 본질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다. ‘기동성’의 의미를 단순히 부대의 물리적인 이동능력 정도로만 받아 들인다면 굳이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성(性)’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능력과 더불어 그 능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나 특성과 같은 무형적인 요소가 결합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동성’을 실천적인 적용이 가능한 개념으로 그 본질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둘째, 방어작전에서도 기동성을 발휘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공격작전과 방어작전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을 보면, 공자가 다양한 기동형태를 적용한 동적인 전투력 운용을 통해 적을 격멸하는 데 반해 방자는 준비된 진지 위주의 정적인 전투력 운용으로 공자의 행위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방향을 이용할 수 있는 능동적인 공자에 대해 방자가 정적인 전투력 운용 위주로 대응한다면 피동적이고 수세적인 상황을 벗어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은 점점 더 요원해 질 것이다. 따라서 비록 방자라 할지라도 기동성을 적극적으로 발휘하는 공세적인 사고와 동적인 전투력 운용을 통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본 논문은 먼저 기동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기초로 기동성의 본질을 규명해 본 후, 방어작전 시 기동성을 발휘해야 할 필요성과 방안을 모색하는 순으로 전개하였다. 특히 논문에서 내용이 개인적인 주장에 그치지 않도록 비전 21모형을 이용한 모의실험을 통해 실제적인 효과를 검증하여 제시했다.

## 2. 이론적 고찰

일반적으로 작전수행 과정에서 ‘기동성’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된다는 것은 군사작전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며, 그만큼 사용자들은 용어의 의미에 대해 동일한 관점과 인식을 가지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기동성의 본질을 도출하는 데 선행하여 ‘기동’의 이론적인 의미를 먼저 고

---

속도 등과 같은 기동성 발휘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미래의 전장환경 하에서도 지상작전부대의 기동성 발휘의 필요성은 더욱 더 증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잘해 보고자 한다.

## 2.1 기동(機動)의 목적

만일 어느 일방의 부대가 일정한 장소에 국한된 상태에서 전투력을 고정적인 방식으로 운용하는 데 반해, 다른 일방의 부대는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방향을 선택하여 자유롭게 기동하면서 전투력을 운용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후자가 보다 유리한 여건에서 능동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이처럼 기동은 군사작전의 원칙이자 전투수행기능의 한 분야로서 군사작전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전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기동(Maneuver)에 대해 우리 군의 교리문헌들에서 정의한 바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기동에 대한 정의

구 분	정 의	비고
일반적인 정의	차후작전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보다 유리한 위치로 병력, 장비, 물자 등을 이동시키는 것	군사용어사전 (2012. 12. 1)
군사작전 원칙	적에 비해 시·공간적으로 유리한 위치로 부대와 자원을 이동시키는 것	지상군 기본교리 (2011. 10. 1)
전투수행 기능	부대를 전개시켜 아군에게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적 부대의 균형을 와해시키며, 대(對)기동으로 적의 조직적인 작전활동을 방해하는 기능	

위의 <표 1>을 통해 보편적으로 기동이란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전투력의 물리적인 이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곧 기동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필요한 시기에 적보다 유리한 장소로 전투력을 기동시켜 이를 점령하거나 전투력을 배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격부대는 공격의 발판이 되는 지역 또는 전투에 유리한 지역을 선점하거나 적절한 공격대형으로 전개하기 위해 수시로 기동하며, 방어부대는 공세행동으로 적을 격멸하거나 보다 유리한 지역에 부대를 배치하기 위하여 기동을 실시한다. 둘째, 화력과 연계하여 적 부대를 격멸하거나 중요지역을 확보하는 것이다. 공격부대는 기동을 통해 적과 접촉할 수 있으며, 적의 약점을 이용하거나 기습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동하고 화력과 연계하여 적 부대를 격멸하거나 적이 점령한 중요지역을 탈취한다. 방어부대는 역습, 파쇄공격, 역공격

등과 같은 공세행동으로 적 부대를 격멸하거나 새로운 전투진지를 점령하기 위해 화력과 연계하여 기동한다. 셋째, 전투에서 달성한 성과를 확대하는 것이다. 공격 부대는 기동을 통해 전과확대 및 추격작전을 전개하여 전투에서 획득한 성과를 확대해 나간다. 방어부대는 적을 격퇴 또는 격멸한 이후 부대를 재배치하거나 공격작전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동한다. 넷째 적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과 속도로 기동을 함으로써 적에게 충격과 압박을 강요하는 것이다. 적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과 적의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기동한다면 적을 혼란케 할 수 있음은 물론 적이 대응할 수 있는 시·공간적 여유를 박탈함으로써 적을 최단시간 내에 물리적·심리적으로 붕괴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기동은 전투에서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고 주도권을 장악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기동 그 자체만으로도 적에게 충격을 가하고 전반적인 상황을 우군에게 유리하게 조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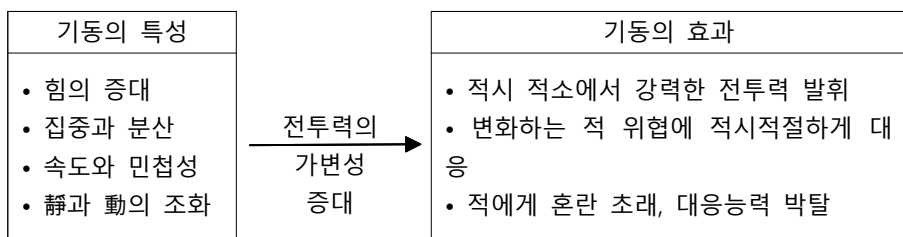
## 2.2 기동(機動)의 특성과 효과

클라우제비츠는 ‘방어는 공격보다 강력한 형태’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공격을 위한 기동에는 분명히 진지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어보다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적에게 노출됨으로써 부담해야 할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게 된다. 이 장점이 바로 기동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이며, 이로 인해 기동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동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기동을 할 때 나타나는 특성과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특성이란 어떤 대상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성질을 의미한다. 부대가 기동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특성은 <표 2>와 같이 힘의 증대, 집중과 분산, 속도와 민첩성, 정(靜)과 동(動)의 조화 등을 제시할 수 있는데, 이러한 특성들이 서로 연계되어 종합적으로 작용하면 기동하는 전투력의 가변성(可變性)<sup>4)</sup>이 증대됨으로써 비로소 기동의 효과가 나타난다.

<표 2. 기동의 특성과 효과>

4) 전투력의 가변성이란 적과 전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성향 또는 능력을 의미한다.



기동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동은 부대의 힘을 증대시킨다. ‘ $E=MC^2$ ’라는 물리학 공식에 전투력 운용을 대입하면 F(힘: 전투력)=M(병력).C(기동속도)<sup>2</sup>가 된다. 부대의 힘은 그 부대가 보유한 병력, 장비, 물자 등과 비례하지만 기동하는 부대의 힘은 정지된 부대에 비해 기동의 속도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대하는데, 만일 적의 측방이나 후방으로 기동한다면 그 힘의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다. 둘째, 기동은 전투력의 적시 적절한 집중과 분산을 가능케 한다. 전투력은 분산된 상태에서도 기동을 통해 결정적인 시간과 장소로 집중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다시 분산할 수 있다. 즉 상황과 여건에 따라 집중과 분산으로의 전환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집중하면 힘이 증대되고, 분산하면 생존성과 민첩성이 향상되며 전투력의 집중과 분산 과정에서 전투력 비율을 적시 적절하게 조절함으로써 작전을 보다 융통성 있게 진행할 수 있다. 셋째, 기동은 속도와 민첩성을 증대시킨다. 적의 예상보다 빠른 기동 속도는 적에게 혼란과 오판을 유도하고, 민첩성은 필요에 따라 작전의 유형이나 형태를 빠르게 전환함으로써 동일한 시간 내에서도 적보다 많은 과업이나 다양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넷째, 기동은 정(靜)과 동(動)을 조화시킨다. 즉 전투력의 정적인 운용으로 적의 강점을 고착하거나 나의 약점을 보강하고, 기동을 통한 동적인 운용으로 적의 약점을 타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전투력을 동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전투력을 단순히 정적으로만 운용하는 것과 비교해서 다양한 이점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는 동적인 운용을 통해 전투력의 가변성(可變性)이 크게 향상되기 때문이다.

전투력의 가변성이 향상된다는 것은 부대가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서, 요구되는 적절한 규모의 전투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증대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통해 부대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된다. 첫째, 적시 적소에서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전장에서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항상 적보다 우세한 전투력으로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필요한 시간과 장소로 부대를 기동하여 집중한다면 전투력의 상대적인 우세 달성이 가능하며, 집중된 전투력이 기동함으로써 증대된 힘은 강력한 타격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처럼 결정적인 시간과 장소에서의 성과를 확대하여 전체적인 국면을 아군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변화하는 적의 위협에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다. 속도와 민첩성을 기반으로 하여 전투력을 자유자재로 집중 또는 분산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면 수시로 변화하는 적의 위협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은 물론 적이 조직적으로 작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적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적의 대응능력을 박탈할 수 있다. 전투력의 정적인 운용과 기동을 통한 동적인 운용을 조화시킴으로써 보다 유동적인 전장상황을 조성한다면 적으로 하여금 아군에 대한 기도 파악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또한 적의 예상보다 빠른 기동속도를 발휘하거나 적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기동하면 적에게 기습을 달성하고 적을 심리적으로 마비시킬 수 있으며, 기동을 통한 양공이나 양동작전으로 적을 기만함으로써 적시적인 대응을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기동의 특성과 효과를 고려한다면 기동은 전투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방법인 동시에 전장을 지배하는 강력한 무기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동의 개념을 기초로 하여 다음 장에서는 기동성의 본질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 3. 기동성의 본질

#### 2.1 기동성의 개념

앞에서 제시한 기동의 개념은 물리적인 성격에 국한된다. 하지만 특정의 부대가 물리적인 기동 능력이 갖추어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동성이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물리적인 기동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와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물리적인 기동 능력은 무의미한 것이나 다름없다. 아무리 훌륭한 명검도 검객이 이를 사용할 의지가 없거나 검술에 능하지 않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부대의 실질적인 기동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부대가 보유한 물리적 기동력은 물론, 기동에 대한 의지와 능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기동에 대한 의지와 능력의 주체는 부대의 모든 구성원으로 볼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부대의 정점에서 전투를 지휘하는 지휘관이라 할 수 있다. 지휘관은 기동에 대한 의지와 능력을 발휘하여 변화하는 상황에 민첩하게 대처해야 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의지와 능력은 임무형 지휘, 전투지휘의 속도, 예측 및 임기응변이라는 방식을 통해 발현되어 부대의 물리적인 기동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되며, 이는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서 적에 대해 상대적인 이점을 확보하거나 확대함으로써 전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표 3. 기동성의 개념><sup>5)</sup>

유형적 요소(물리적인 기동력)	무형적 요소(지휘관의 의지와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동장비 및 물자, 무기체계</li> <li>• 부대원의 교육훈련 정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무형 지휘</li> <li>• 전투지휘의 속도</li> <li>• 예측 및 임기응변</li> </ul>

따라서 기동성은 ‘기동을 통해 적보다 상대적인 이점을 확보 또는 확대하고자 하는 능력 및 특성으로서, 물리적인 기동능력과 기동에 대한 지휘관의 의지 및 능력이 결합된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앞의 <표 3>과 같이 유·무형적인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물리적인 기동력은 부대가 구비하고 있는 무기, 장비, 물자 등과 이를 효과적으로 조작 및 운용할 수 있는 부대원의 교육훈련 정도에 의해 좌우된다. 그러나 기계화 또는 차량화된 부대만이 물리적인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부대가 기계화 또는 차량화된 경우에 기동력이 증대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도보에 의한 기동능력 또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동의 효과는 물리적인 기동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동부대의 전환이 없이도 정보자산과 화력자산을 필요한 지역으로 전환하여 기동을 대체하는 효과의 기동 역시 가능하며, 또한 기동력이 우수한 적 부대를 타격하거나 고착시킴으로써 결정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기동력의 상대적인 우세를 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기동부대는 가급적 정보, 화력, 대기동, 방호기능을 통합하여 편성함으로써 기동으로 인해 적에게 노출되는 취약성을 감소시키고 기동에 의한 타격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부대의 물리적인 기동력은 자동적으로 발휘되지 않는다. 부대가 구비한 기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유동적인 전장 상황을 조성하고 적을 피동(被動)으로 몰아가겠다는 지휘관의 강력한 의지와 기동부대를 능수능란하게 운용할 수 있는 지휘관의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진정한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기동력 발휘를 위한 지휘관의 의지와 능력은 임무형 지휘, 전투지휘의 속도, 예측과 임기응변을 통해 구현될 수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무형 지휘를 적용하는 것이다. 임무형 지휘<sup>6)</sup>는 잘 훈련된 사냥개의 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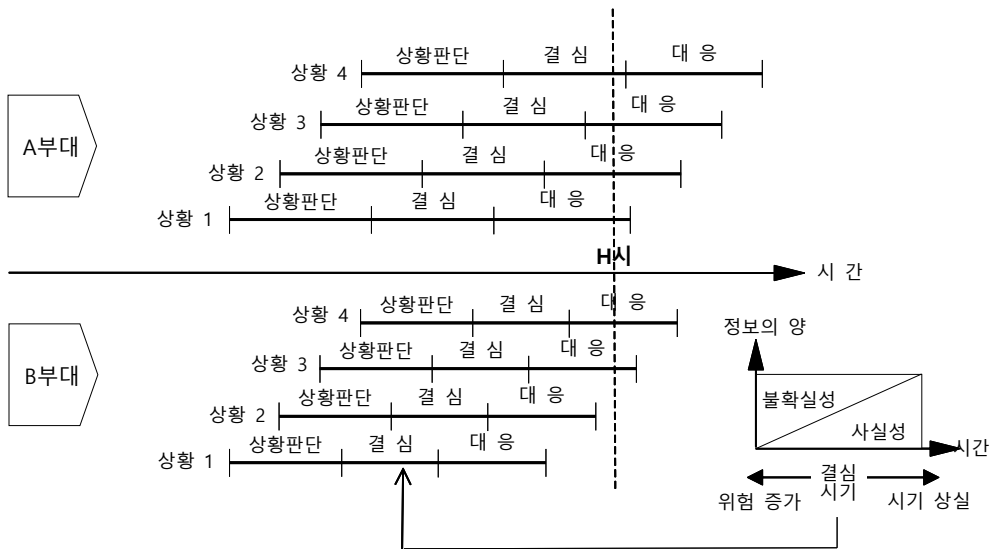
5) 기동성 발휘의 개념은 앞서 재정립한 기동성의 의미가 지휘관의 의지 및 능력을 포함하므로 물리적 기동력과 함께 상승작용을 통해 상대적 이점을 확보 또는 확대하여 전장을 주도할 수 있는 내용을 개념화한 도식이다.

6) 임무형 지휘(Mission Command)란 부여된 임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줄을 풀어주는 것과 같다. 만일 예하부대가 주도적으로 작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정도로 훈련되지 않았거나,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급부대가 예하부대를 신뢰하지 못하고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려 한다면 예하부대는 상급지휘관의 명령만을 기다리거나 지시된 대로만 움직이고 부대를 주도적으로 기동시키지 못할 것이다. 즉 예하부대는 수동적인 입장에 처하게 됨으로써 당면하고 있는 전장 상황에 적시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상급지휘관은 예하부대를 신뢰하고 분권화 통제를 적용해야 하며, 적지중심작전과 작전지속지원활동 등과 같은 상급부대로서의 역할에 집중함으로써 예하부대가 근접전투 수행 간 적극적으로 기동성을 발휘하면서 작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전투지휘관의 속도를 압도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다. 기동성 발휘는 물리적인 작전의 속도와 직결되며, 이것이 적보다 우세한 전투지휘의 속도와 결합된다면 동시다발적이고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반면, 적은 아군의 작전에 대해 적시적인 대응이 어려워질 것이다. 아래의 <그림 1>은 전투지휘의 속도에 따른 효과를 제시한 것이다.

<그림 1> 전투지휘의 속도에 따른 효과



지휘관이 명확한 의도와 예하부대의 임무를 제시하고, 임무수행방법은 최대한 위임하며, 예하부대는 지휘관의 의도와 부여된 임무를 기초로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지휘개념을 말한다.

- 7) 전투지휘관 지휘관이 부여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리더십을 기반으로 전투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지휘관의 의지를 적에게 강요하는 전장에서의 지휘통제로서, '상황판단-결심-대응'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진행된다.

<그림 1>은 상호 전투 중인 A부대와 B부대가 당면하는 상황(상황#1, 상황#2,...) 별로 전투지휘(상황판단-결심-대응)에 소요되는 평균시간을 산술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B부대가 전투지휘에 소요되는 평균시간이 상대적으로 빠르다고 가정하였다. 특정시간(H시)을 기준으로볼 때, A부대는 4개의 상황을 조치 중이지만 B부대는 조치 중인 상황이 2개에 불과하다. 전투가 진행될수록 B부대에 비해 A부대는 조치해야 할 상황이 누적되면서 점점 어려운 상태에 빠져들게 될 것이고, 결국 전투지휘의 속도가 더 빠른 B부대가 주도권을 장악하고 작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이러한 차이의 가장 큰 원인은 지휘관의 적시적절한 결심시기이다. 왜냐하면 불확실한 첩보에도 불구하고 너무 성급하게 결심하거나 확실한 정보를 기다리다 결심이 지연됨으로써 작전을 그르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셋째, 예측과 임기응변을 통해 변화하는 상황에 적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예측은 향후 전개될 상황을 미리 그려보는 것이고, 임기응변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봉착하여 사전 준비 없이 순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이는 기동성이 발휘되는 유동적인 상황에서 매우 절실하게 요구되는 능력이다. 먼저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한 예측은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요구되는 전투력을 기동시킴으로써 적시성과 집중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지휘관은 예측된 상황을 전술적 고려요소(METT-TC)에 입각하여 평가하고, 이에 적합한 대응전투 방법을 사전에 모색해야 한다. 예측과 그에 대한 평가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기동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무의미한 기동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으며, 이는 전체적인 작전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상황이 예측대로만 전개될 수는 없으므로 무방비 상태에서 전혀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경우도 허다할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지휘관의 임기응변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임기응변은 순발력, 창의력, 경험적 요소를 기초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상급지휘관의 의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작전을 조정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다. 만일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여 결심을 유보하거나 작전을 적절히 조정하지 못한다면 작전의 템포를 상실하고, 기동 중인 부대들이 작전의 연속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행동의 공백상태를 맞이하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지휘관의 의지와 능력은 기동성 발휘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휘관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능력 중 기동성을 촉진시키고, 기동성에 의한 작전템포를 유지하는데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중요한 요소를 선별하여 제시한 것임을 이해하여야 한다.

## 2.2 기동성 발휘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이점

부대가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기동력이 지휘관의 의지 및 능력과 결합하여 기동성을 발휘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이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서 필요한 전투력을 운용할 수 있다. 동일한 부대라 할지라도 그 부대가 위치한 지역의 성격이나 형태에 따라 전투의 효율성은 달라진다. 즉 적이 접근하지 않는 곳에 위치한 부대는 단지 유희전투력일 뿐이며, 적이 접근하는 지역에 위치한 부대라도 그 지형이 전투에 유리하지 않다면 전투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어렵다. 또한 아무리 중요한 곳이라도 전투력이 요망되는 시기에 그 곳을 점령하지 못하면 작전의 성공에 기여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기동성을 발휘하여 작전의 성공과 직결되는 시기와 장소에 적절한 규모의 부대를 위치시킴으로써 전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거나 부적절한 장소에 위치한 부대의 일부를 이동시켜 긴요한 장소에 위치한 부대를 증강시키는 것처럼 집중과 절약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기동성을 효과적으로 발휘한다면 변화하는 상황에 부합되도록 적시적소에 적절한 전투력을 운용하면서 보다 경제적인 전투가 가능한 것이다.

둘째, 작전을 보다 능동적·주도적·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아무리 합리적으로 계획을 수립했다라도 작전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의 변화에 모두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작전실시 간에도 계획의 변경은 필연적이다. 기동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어려운 국면을 타개하거나 적을 피동적인 상황으로 몰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격작전 시 진출이 제한되는 여건하에서도 계획된 기동로만을 고집할 수는 없으며, 실시 간 포착된 적의 약점을 그대로 지나칠 수는 없으므로 새로운 방향으로의 기동을 모색해야 한다. 방어작전 시에는 계획된 진지를 무조건 사수하기보다는 진지를 적절하게 변환하고, 경우에 따라 일회성의 결정적인 공세행동보다는 전 중심을 이용하여 습격, 매복 등을 포함한 다수의 공세행동을 가함으로써 적에게 예기치 않은 조우전을 지속적으로 강요할 수도 있다. 이러한 능동적인 작전수행이 가능한 것은 기동성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유동적인 상황을 조성하면서 부대가 능동적으로 작전을 수행한다면 적은 아군의 편성, 배치, 능력, 기도 등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조직적인 작전이 힘들게 된다. 이것이 곧 작전의 주도권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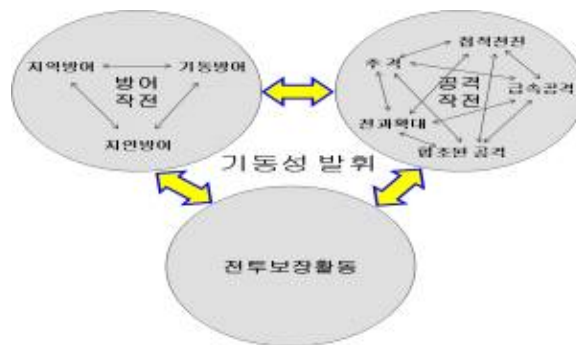
셋째, 적보다 우세한 작전 템포(tempo)를 유지할 수 있다. 템포란 작전의 속도와 리듬을 의미하며, 주도권 장악을 위한 필수요소로서 절대적인 속도의 우세가 아니라 적과의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 전반적으로 속도의 우세를 유지하고, 상황에 따라 그 빠르기를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템포의 우위는 전장에서 전투를 수행하는 부대들의 물리적인 기동속도와 지휘통제본부에서 진행되는 전투지휘의 속도가 조화되어야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상급부대의 추가적인 명령이 없어도 예하부대가 주도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임무형 지휘체계, 장차작전에 대한 예측과



실시간 임기응변 능력도 템포의 우위 달성에 기여한다. 또한 기동은 상황에 적합하도록 작전의 유형이나 형태<sup>8)</sup>를 자유롭게 전환함으로써 작전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템포를 증진시킨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적보다 우세한 템포를 유지한다면 적은 능동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나의 전투행동에 따라서만 대응하게 될 것이며, 전투 지휘의 속도 차이가 계속 누적됨에 따라 점점 피동적인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

넷째, 작전의 유형이나 형태를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 기동성 발휘는 아래의 <그림 2>와 같이 다양한 상황에 부합하는 작전의 유형이나 형태로의 자유로운 전환을 가능케 함으로써 작전의 연속성을 보장하는데 기여한다.

<그림 2> 기동성 발휘와 작전유형 및 형태의 전환



작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부대는 공격작전, 방어작전, 전투보장활동<sup>9)</sup> 등의 다양한 작전유형을 적용할 수 있으며, 특정의 작전유형 속에서도 기동형태와 작전 형태, 작전수행 방법 등을 수시로 변경하면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를 들어 방어작전 시에 특정부대가 최초에 경계부대의 임무를 수행하고 그 이후에는 지연방어와 후방초월을 실시하여 후방지역으로 내려와 예비대로 전환되었으며, 차후에는 전방에 형성된 돌파구에 대한 역습을 실시하고 회복한 지역에서 급편 방어로 전환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어느 한 부대가 이처럼 다양한 과업을 수행하는

8) 공격작전, 방어작전, 후방지역작전, 안정화작전은 전면전시 지상작전의 유형들이며, 각 유형별로 전장상황에 따라 특정의 작전형태를 적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공격작전의 형태는 접적전진, 급속공격, 협조된 공격, 전과확대, 추격으로 구분되고 방어작전의 형태는 지역방어, 기동방어, 지연방어로 구분된다.

9) 전투보장활동이란 전술제대에서 공격작전, 방어작전, 후방지역작전, 안정화작전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작전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부가적으로 실시하는 작전 활동을 말한다. 전투보장활동에는 경계작전, 감시 및 정찰, 부대이동, 집결지 점령, 매복, 습격, 진지교대, 초월작전, 연결작전, 전술적 정보작전 등이 있다.

경우에는 새로운 임무 지역으로 위치 변경하기 위한 기동, 전투력의 배치를 위한 기동, 그리고 공세행동을 위한 기동 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므로 부대의 기동성 발휘 능력은 다양한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제조건과 같다고 볼 수 있다.

## 4. 방어작전 시 기동성 발휘

공격작전이 전투를 적 방향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기동성은 공격작전에서만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자칫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방어작전 시에도 작전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동성 발휘가 필수적이다. 방어작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전투력의 기동과 배치는 전투대형을 유지하고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핵심적인 방법이다. 즉 방어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방어에 유리한 지형에 병력을 배치하고 화력과 장애물을 통합 운용하는 정적인 전투력 운용과 기동을 통해 진지를 변환하거나 사격과 기동을 통합하여 공세행동을 수행하는 동적인 전투력 운용을 조화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동성을 발휘한다는 의미를 공격작전으로 한정시키거나 방어작전을 수행하는 부대가 기동하는 경우에는 지형적인 이점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생존성 측면에서 더 불리해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기동성을 발휘하는 것은 공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방어작전 시에도 기동성을 발휘한다면 작전을 보다 효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은 물론 생존성 측면에서도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 4.1 방어작전에 대한 사고의 전환

방어작전 시 기동성의 발휘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방어작전 시 아무리 강력하게 편성된 진지라도 적이 이를 회피한다면 유희전투력이 되거나, 진지가 노출되어 집중적인 공격을 받는다면 그 이점이 현저하게 감소될 수밖에 없다. 반면, 기동성을 발휘하여 동적인 전투력 운용을 병행한다면 적으로 하여금 방자의 기도를 판단하기 어렵게 하면서 작전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생긴다. 더 나아가 가까운 미래를 보더라도 부대의 질적인 전투력은 증대되는 반면 부대의 수는 감소하기 때문에 어느 한 제대가 작전을 수행해야 할 공간은 지금보다 2~3배 정도로 확장될 것이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각급 제대는 현재보다 질적으로 향상된

전투수행 능력을 활용하여 부대의 기동능력과 정보와 화력이 결합된 전투수행으로 확장된 공간을 극복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들이 곧 방어작전 시에도 기동성 발휘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이유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방어작전 시 기동성을 적극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방어작전에 관한 기존의 수세적인 관념을 탈피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방어작전은 공세를 취하기 위한 일시적인 작전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실제 방어작전은 아무리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더라도 현상 유지 이상의 전과를 획득하기 어렵다. 클라우제비츠가 강조하였듯이 방어는 지형과 시간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기에 공격보다 강력한 형태이지만 공격이 추구하는 가치가 방어보다 크기 때문에 기꺼이 적에게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공세를 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방어에서 공격으로의 전환은 방어에 있어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방어만으로 작전을 일관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언제라도 호기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세적인 행동을 주저치 말고, 여건이 조성되면 즉시 공세로 전환한다는 신념을 견지해야 하는데,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기동성을 발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비록 방자(防者)라 하더라도 작전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사고를 가져야 한다. 이것은 바로 방자가 견지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정신이라 할 수 있다.<sup>10)</sup>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공자는 공격하고자 하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방자는 공자가 취하는 행동에 따라서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수세적이고 피동적인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생각은 은연중에 공자에게 주도권을 허용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준비된 진지에서 적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적에 대한 대응마저도 진지 위주의 정적인 전투력 운용으로 일관하는 것은 아무런 대가도 없이 주도권을 내주는 것과 같으며, 이로 인해 방자는 피동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 비록 방자라 하더라도 작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자 한다면 전투력을 동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공자에게 혼란을 야기(惹起)하고 공격기도를 좌절시켜야 한다. 공자의 입장에서 볼 때 방자가 진지를 이용하여 방어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전투력을 유동적으로 운용하고, 때로는 과감한 공격으로 대응한다면 방자의 행동을 예측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셋째, 방어작전 시 기동성을 발휘하는 것이 결정적인 공세행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2013년도에 『전술』교범을 새로 발간하기 이전까지는 공

---

10) 중국군의 운동전투에는 ‘你打你的, 我打我的’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는 ‘너는 너의 목표를 타격해라. 나는 나의 목표를 타격하겠다’라는 의미로서, 상대의 행동에 따라가지 않고 나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작전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주도적인 사고가 잘 반영되어 있다. 방어작전 시에도 이러한 사고를 견지해야 피동적·수세적인 작전에서 탈피하고 작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다.

세행동을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일회성의 결정적 공세행동으로 적 주력을 격멸하는 방법만을 제시하였다. 이로 인해 자칫 방어작전 시 기동성을 발휘한다는 의미가 적 주력을 격멸하는 결정적 공세행동으로 국한하여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그러나 방어작전 시 준비된 진지를 고집하지 않고 적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진지를 수시로 변환하거나 다수의 공세행동을 동시적 또는 연속적으로 수행하고, 매복이나 습격과 같은 소부대의 공세행동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것 등이 모두 기동성을 발휘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으로 기동성을 발휘한다면 적에게 예기치 않은 조우전을 계속적으로 강요하고, 기습효과를 달성함으로써 작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다.

넷째, 기동성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종심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고이다. 방자는 본질적으로 공자에 비해 시간과 지형의 이점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다. 공자의 진출이 예상되는 지형에 진지를 선정하고, 시간을 이용하여 진지의 강도를 보강하는 동시에 화력과 장애물을 준비함으로써 생존성 보장과 전투력 발휘가 더욱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간과 지형의 이점은 전투지역전단 일대뿐만 아니라 방어지역 전 종심에 걸쳐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투지역전단을 절대적으로 사수해야 한다는 의지와 집념만으로 모든 노력을 전단 상의 전투진지에 투자한다면 전투력 운용은 그만큼 경직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동성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전단 전방으로부터 후방지역에 이르는 전 종심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전단 상으로 지향되는 공세행동 이외에도 전단 전방 또는 종심지역에서의 다양한 공세행동과 적시 적절한 진지의 변환 등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도록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확장해야 보다 탄력적인 작전이 가능하다. 단 종심의 허용범위는 상급지휘관의 의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인접부대와와의 협조된 방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기동성 발휘를 위해 필요하다면 전투지경선을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고이다. 이는 기동성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종심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고와 같은 맥락이다. 한정된 공간에서는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융통성이 제한되며, 인접부대의 책임지역으로 기동할 경우에는 많은 제한사항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역을 명확하게 분할하여 나누어 막기식의 작전을 수행하기 보다는 기동성 발휘를 위한 공간적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전투지경선을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때에는 부대별로 전술적 통제수단<sup>11)</sup>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불필요한 노력을 방지하고 우군 간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11) 전술제대가 수행하는 모든 작전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주요 도구로서 예하부대의 협조를 증진시키고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방책 또는 작전투명도를 작성 시에 사용하는 도식부호를 말한다.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동성을 발휘한다고 생존성이 취약해지는 것은 아니며, 발휘한 만큼 효과는 반드시 나타난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다. 방자가 준비된 진지를 이탈하여 기동할 경우에는 생존성이 취약해지므로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적에게 노출된 진지에서 계속적으로 전투를 수행하는 것은 적에게 고정된 표적을 계속 제공하는 것과 같으므로 진지를 벗어나 새로운 진지로 전환하거나 공세행동을 수행하는 것보다 생존성 측면에서 더 취약할 수 있으며, 전투력 발휘 측면에서 비효과적일 수 있다.

## 4.2 방어작전 시 기동성 발휘 방안

방어작전 시 기동성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대가 구비하고 있는 물리적인 기동력과 이를 촉진시키기 위한 제 전투수행기능의 통합, 그리고 지휘관의 의지와 능력이 결합되어야 한다. 즉 제 전투수행기능의 통합은 물리적인 기동을 촉진하고, 지휘관의 의지와 능력은 물리적인 기동력의 시기와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지휘관의 의지와 능력은 기동성의 본질에서 전술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물리적인 기동력을 발휘하는 측면과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전투수행기능의 통합 측면에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먼저 물리적 기동력을 발휘하는 측면이다. 방어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는 최초의 위치에서 적과의 전투에 유리한 지형을 점령하기 위해 기동한다. 이때에는 경계부대를 운용하고 적과의 조우전에 대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적과의 전투 시에는 화력과 연계한 전술기동을 통해 적 부대를 격멸한다. 적과의 전투 간에 이루어지는 전술기동은 공세행동, 진지 전환, 소부대 공격 등이 있다. 공세행동 부대의 기동은 가급적 적의 약한 측·후방을 지향하고, 배치된 부대의 진지 전환은 적을 계획한 지역으로 유인하거나 적을 지연키고, 공세행동부대의 공세행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다. 또한 소부대 공격은 일부의 소규모 부대를 기동시켜 적의 측·후방 공격이 용이한 지역을 선점하였다가 이 지역을 통과하는 적을 매복, 습격 등으로 기습 타격하거나, 실시간 포착된 적의 약점과 과오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는 것이다. 아울러 자신의 기동력을 발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對)기동을 통해 적의 기동력을 감소시키는 것도 시간 측면에서 상대적인 기동의 우세를 달성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기동력을 발휘하는 주체를 어느 한 지역으로 기동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전투력이 발휘되는 효과를 필요한 지역으로 전환시키는 ‘효과의 기동’ 역시 중요하다. 예를 든다면, 다양한 방향으로 공격하는 적에 대해 가장 중요한 방향에 대해서는 물리적인 기동으로 대처하면서 다른 방향에 대해서는 기동장애물에 의한

저지와 화력자산에 의한 타격 등과 같이 효과의 기동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기동부대를 대체하거나 기동부대 전투력의 양적인 열세를 질적인 우세로 변화시킬 수 있다.

다음은 전투수행 기능을 통합 운용하는 측면이다. ‘기동성’은 기동부대가 물리적인 기동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저절로 발휘되는 것이 아니고 기동성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제 전투수행기능을 효과적으로 통합 운용해야만 비로소 효과적으로 발휘된다. 기동성 발휘를 보장하기 위한 전투수행기능의 통합 운용 측면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동과 정보의 통합이다. 공세행동, 진지변환, 소부대 공격 등 방어작전 시의 전술기동은 적의 약점과 과오를 조기에 식별하여 적의 측·후방을 지향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활한 기동을 위해서는 적시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의 수집과 전파를 통하여 적시적으로 적의 약점과 과오를 탐지해야만 이를 지향한 기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방어작전 간에는 적지중심지역부터 제대별 가용한 정보자산을 통합하거나 중첩 운용함으로써 조기에 적의 기동을 파악하고, 핵심표적을 중점적으로 식별하여 적의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데 기여해야 한다. 또한 작전실시 간에는 적의 과오로 인하여 발생한 부대의 간격이나 노출된 측방 등을 식별하여 기동부대의 전투력을 그곳에 집중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적에 대한 공세행동을 시도할 경우에는 기동로와 돌파구 내의 적에 관한 정보를 적시적으로 수집·전파함으로써 공세행동의 성공 가능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둘째, 기동과 화력의 통합이다. 화력은 아 기동부대의 기동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적의 기동을 방해하거나 저지할 수 있다. 따라서 적지중심지역부터 방어 중심에 이르기까지 화력을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적의 전투력을 약화시키거나 기동속도를 저하시켜 주방어지역의 기동부대들이 적시적인 기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거나, 기동부대들에 의해서 통제되지 못하는 공간지역을 화력으로 우선 통제하고 차후 기동부대들이 기동하여 공간지역을 통제토록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공세행동을 수행할 때에는 기동부대의 전방 및 측방에 엄호사격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동속도를 보장해 주고, 진지를 변환하는 경우에는 적과의 접촉을 단절시키거나 적이 추격을 하지 못하도록 화력을 지원하여 기동을 보장할 수 있다. 셋째, 기동과 지휘통제의 통합이다. 지휘통제 기능은 부대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지휘관의 지휘권 행사를 보좌하고 제 전투수행기능을 통합하는 기능이다. 이는 획득된 정보를 기초로 전장을 가시화(可視化)하여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작전실시 간에는 정확한 판단과 결심, 적시적인 명령과 통제로써 적보다 먼저 결심하고 먼저 행동할 수 있게 한다. 방어작전시 기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휘통제는 공자의 작전기도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적시적인 공세행동이나 진지변환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통제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기동부대가 적시적인 기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 및 감독하고 계획된 기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타 기능을 통제하여 기동을 지원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후방지역에 위치한 지휘소에서는 변화하는 적 상황과 넓은 작전지역에서 분산된 여러 기동부대들의 활동을 실시간대로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제한된다. 따라서 전술지휘소나 핵심적인 지휘통제기능이 포함된 기동지휘조 등을 운용하여 기동부대를 근접하여 지휘통제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기동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넷째, 기동과 방호의 통합이다. 부대가 기동할 경우에는 자신의 전투력이 노출되어 적의 화력이나 매복부대에 의한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위험을 수반한다. 기동부대는 기동하는 목적지까지 임무를 완수할 능력을 유지해야 하므로 기동 간 자신의 전투력을 보존해야 하는데, 이는 기동과 방호기능을 통합함으로써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차후 결정적인 작전에 투입해야 될 예비대나 주요 화력자산들은 기동을 통해 수시로 진지를 변환해야 하고, 기동부대에게는 방공, 화생방 등과 같은 방호자산들을 할당하거나 지원함으로써 생존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다섯째, 기동과 작전지속지원의 통합이다. 작전지속지원은 전투력을 조성하고 유지함으로써 작전지속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능이다. 방어작전 시 작전지속지원 기능이 기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기동로 상에 교통통제소, 노상구난반 등의 전장순환통제 대책을 강구하여 기동부대들이 지체 없이 기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하며, 근접정비 및 근접추진지원과 환자 및 장비에 대한 후송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피해 장비를 현장에서 신속하게 복구하고 작전에 소요되는 탄약 및 물자를 적시에 보급하며, 전투 간 발생한 전상자 등을 후송함으로써 기동부대들이 최대한의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동부대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적시적인 전투력 복원을 통해 기동부대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차후 작전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4.3 방어작전 시 기동성 발휘의 효과 검증

이상에서 제시한 이론적인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Vision 21모델<sup>12)</sup>을 적용하여 두 가지의 모의실험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4.3.1 모의실험#1

모의실험#1의 입력조건은 비교적 단순하게 기동의 효과가 검증될 수 있도록 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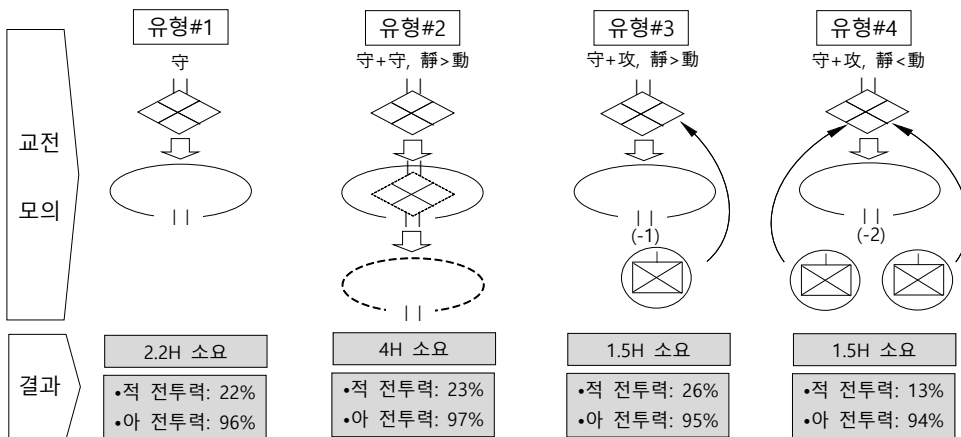
---

12) Vision 21모델은 사단 및 여단급 부대의 작전계획을 모의하고 이에 근거한 객관적인 분석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작전계획 수립단계에서 수립된 방책을 보완하거나 전투발전소요, 무기체계 및 편성 소요 등을 염출할 수 있도록 개발된 모의 분석 모델이다.

아 동일한 보병대대를 1:1로 교전 모의하되, 화력.정보.방호 등의 상급부대 지원자산은 가변요소로서 배제하였다.

교전 모의는 다음의 <그림 3>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유형#1은 대대 전체가 고정된 진지에서 지역방어<sup>13)</sup>를 수행하였으며, 유형#2는 대대 전체가 진지를 변환하면서 지연방어<sup>14)</sup>를 수행하였고, 유형#3은 대대(-1)가 진지에서 방어하고 1개 중대는 집결 보유하였다가 적 측방에 대한 공세행동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유형#4는 대대(-2)가 진지에서 방어하고, 2개 중대는 집결 보유 후 각각 적 양측방에 대해 공세행동을 실시하였다.

<그림 3> 모의실험 #1의 유형과 결과



위의 모의실험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으로 분석을 해 볼 수 있다. 첫째 유형#1과 유형#2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지연방어가 지역방어와 비슷한 전투효과를 달성하는데 더 많은 시간 소요(+1.8H)되었는데, 이는 지연방어가 적에게 공간을 양보하고 시간을 획득하는 목적에 부합되는 결과이나 수세적인 기동으로는 전투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유형#1과 유형#3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공세행동을 병행하여 방어하는 경우(유형#3)에는 지역방어(유형#1)와 비슷한 전투효과를 달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0.7H)되었다. 셋째 유형#3과 유형#4를 비교하면, 다수의 공세행동을 실시할 경우(유형#4)는 일회성의 공세행동을

- 13) 지역방어는 방어에 유리한 지형에 주 전투력을 운용하여 적을 저지, 격퇴, 격멸하는 방어작전의 형태로서 어디에서 결정적작전을 실시하느냐에 따라 전방방어와 중심방어로 수행방법이 구분된다.
- 14) 지연방어는 차후작전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간을 이용하여 적의 공격을 지연시키거나 적과의 접촉으로부터 조직적으로 이탈하기 위한 방어작전의 형태로서 지연과 철수로 수행방법이 구분된다.



한 경우(유형#3)에 비해 동일한 시간 내에서도 보다 강력한 전투효과(적: 26% → 13%)를 나타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의 분석내용을 종합해 본 결과, 방어작전 시에는 진지 위주의 정적인 전투력 운용보다 공세적인 기동을 병행할 경우에 단시간 내에 더 높은 전투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다.

#### 4.3.2 모의실험#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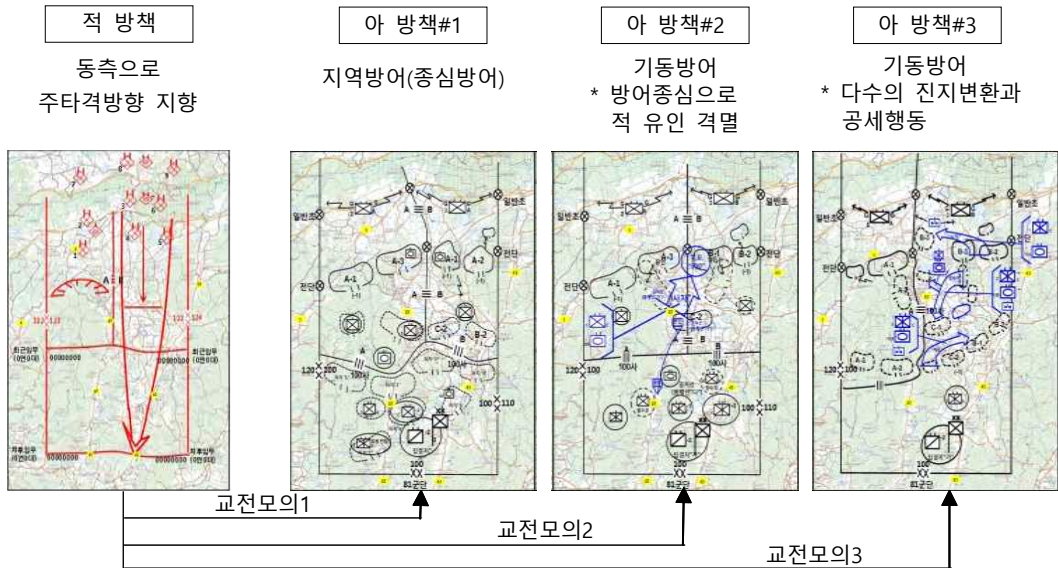
모의실험#2의 입력조건은 북한군 전연 보병사단의 공격계획과 한국군 상비 보병사단의 방어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세밀한 시나리오에 입각하여 교전모의를 실시하였으며, 쌍방의 계획을 알고 있는 입력자에 의해 조작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음을 감안하여 피.아의 포병화력은 배제하였다.<sup>15)</sup>

교전 모의는 다음의 <그림 4>와 같이 세 가지 유형의 한국군 보병사단 방어 방책을 수립하여 각각의 방책을 동일한 적 공격방책에 대응시켜 모의를 진행하였다. 한국군 보병사단의 방책#1은 지역방어로서 중심방어 수행방법을 적용하였고, 방책#2는 기동방어로서 방어지역 중심으로 적 주력부대를 유인하여 격멸하는 방책이다. 방책#3 역시 기동방어이지만 방책#2와는 다르게 다수의 진지변환과 공세행동으로 적에게 예기치 않은 조우전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방책이다.

<그림 4> 모의실험 #2의 교전 모의

---

15) 입력자가 적과 아군의 기동계획을 모두 알고 있는 상태에서 포병운용을 입력할 경우에 포병 운용의 효과가 교전모의 결과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거나, 입력자가 임의로 조작적인 결과를 유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방어부대는 대부분 고정표적인 반면, 공격부대는 대부분 이동표적이기 때문에 공격부대와 방어부대의 배치 및 이동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포병운용을 할 경우에는 방어부대의 피해가 공격부대의 피해에 비해서 훨씬 크게 나타난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모의 실험을 진행한 결과, 적 보병사단이 작전한계점<sup>16)</sup>에 도달하여 더 이상 작전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나타난 모의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적 작전한계점 도달 시기에서의 여건 비교

구 분	작전경과 시간	피.아 전투력 수준	적 진출거리
교전모의1	48H	48.1% : 87.5%	16km
교전모의2	34H	48.6% : 86.3%	8.3km
교전모의3	24H	48.4% : 86.2%	11km

모의실험 결과를 보면, 적이 작전한계점에 도달한 시기에 아군의 전투력 수준은 3개의 방책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그러한 결과에 이르는 데 소요된 시간은 방책#3이 가장 적게 소요되었다. 적이 진출한 거리를 보면, 진지 위주로 전투를 수행한 방책#1에 비해 기동력을 활용한 방책#2와 방책#3이 적에게 종심을 허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 차례의 결정적인 공세행동을 수행한 방책#2에 비해 여러 차례의 진지 변환과 공세행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방책#3이 적에게 약간의

16) 작전한계점(culminating point)이란 부대가 더 이상 공격 또는 방어작전을 지속할 능력이 없게 되는 시점을 말한다.

종심을 더 허용(2.7km)하였지만 적을 작전한계점에 더 빨리 도달(10H)시켰는데, 이는 적에게 종심을 허용했다기보다는 아군의 기동성을 발휘하기 위한 공간을 더 활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방책#3을 방책#1과 비교하면, 적의 전투력을 무력화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절반으로, 적에게 진출을 허용한 거리는 5km를 단축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방어작전 시에도 기동성을 발휘한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요망하는 최종상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다. 더구나 모의과정에서 순수한 기동성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방자에 유리한 화력운용을 배제하였고, 워게임 모델의 한계 상 공자에게 예기치 않은 조우전을 계속 강요함으로써 달성한 기습의 효과가 모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안해 본다면 기동성 발휘의 효과는 실제로 모의실험에서 나타난 결과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 5. 결 론

우리는 한국전쟁 이후 오랜기간 동안 전투지역전단(FEBA)를 연하는 선(線) 개념의 방어작전 체제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미래전쟁의 양상이 컴퓨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모든 작전요소가 연계되어 플랫폼의 위치와 관계없이 전투력을 통합운용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미래 육군의 지상작전도 점차 비선형전과 분산작전의 형태로 변모해 가는 추세이다. 현재의 육군 역시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군 구조와 전투수행 수단과 방법에 대한 혁신을 거듭하고 있지만 이러한 물리적인 변화가 최대한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고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장기간 우리 군은 선 개념의 방어작전을 통해 적을 작전한계점에 도달시키고 그 이후에 공세로 전환한다는 ‘수세 후 공세’ 전략을 유지해 왔다. 따라서 항상 방어작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어느 선에서 공세로 전환할 것인가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는 은연중에 ‘어느 정도 일정 기간만큼은 공자가 주도권을 행사하고 방자는 공자의 행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수세적이고 피동적인 사고가 자리 잡고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로는 능동적이고 공세적인 전투력 운용이 불가피하다. 적에게 일격을 허용하기 전에 선제공격이나 선제타격을 통해 즉각 공세적인 작전을 전개해 나가야 하며, 설령 적에게 기습을 허용하여 수세적인 작전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작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기동성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러한 사고에 기초한 전투수행방법의 적용은 미래의 전장에서 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본 연구는 수세적인 방어작전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공세적.능동적.주도적인 사고

와 실천적인 적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실험을 통해 사실을 검증함으로써 은연중에 고착된 사고를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현재 및 미래의 전장환경 하에서 적용해야 할 방어작전 교리의 ‘기초’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1. 육군교육사령부, 교육회장 03-3-6 「지연작전 수행방안」, 대전, 육군본부, 2003.
2. 육군교육사령부, 교육회장 14-3-1 「작전실시간 전투지휘」, 대전, 육군본부, 2014.
3. 육군교육사령부, 교육참고 90-1 「주도권 장악」, 대전, 육군본부, 1998.
4. 육군교육사령부, 「군사이론연구(용병체계중심)」, 대전, 육군본부, 1987.
5. 육군본부, 야전교범 기본-0 「지상군 기본교리」, 대전, 육군본부, 2011.
6. 육군본부, 야전교범 기준-1-1 「지휘관 및 참모업무」, 대전, 육군본부, 2012.
7. 육군본부, 야전교범 기준-3-1 「전술」, 대전, 육군본부, 2013.
8. 육군본부, 야전교범 운용-3-2 「국지도발 대비작전」, 대전, 육군본부, 2013.
9. 육군본부, 야전교범 참고-1-21 「군사용어사전」, 대전, 육군본부, 2012.
10. 합동참모본부, 합동교범 1 「합동기본교리」, 서울, 합동참모본부, 2009.
11. 합동참모본부, 합동 참고교범 10-2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서울, 합동참모본부, 2010.

## **<Abstract>**

### **A study on the exercise of maneuverability during defensive operations**

Sung, Hyung Kwon (Yeungnam University)

Army ground operations units, which are currently pursuing the reduction of quantitative troops and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combat power through advanced weapon systems, will inevitably perform operations under nonlinear and decentralized conditions on the battlefield, where the density of troops is significantly lower compared to the present. This fact means that units distributed across the battlefield must be able to preempt an advantage over the enemy in a wide space or concentrate their combat power at a decisive time and place, and at the command post of the unit, 'Situation Judgment-Decision-Reaction' It means that combat efficiency can be maximized only by demonstrating combat command ability that can cycle through the process. That is, physical maneuverability and accident maneuverability must be more efficient than the enemy. However, despite the frequent use of the term “mobility” in terms of military terms, military doctrine does not provide a clear definition for it, so it is a common phenomenon to understand mobility only as a simple physical mobility capability. In this paper, we tried to examine the meaning of mobility and to suggest that it is important to demonstrate mobility in defensive operations.

**Key Words: Maneuver, Maneuverability, exercise of maneuverability**



# 육군 초급장교 인력획득 정책의 비판적 평가 연구

## - 군사학과 자유경쟁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

박 효 선\*

### I. 서 론

미래 전쟁양상의 변화와 이에 따른 기술집약형 군 구조로의 전환은 초급간부의 정예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출산을 저하, 군 복무기간 단축 등 사회 인력환경의 변화는 우수한 초급간부의 획득이 더욱 어려워질 것임을 시사한다.

한국은 2002년 신생아 수가 49만 2천 명으로 처음으로 50만 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출산율이 1.17로 급락하였고, 2001년 이후 단 한 차례도 1.3명을 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 추계에 의하면 저출산의 영향으로 18세 남성 인구는 2010년 36만 명 수준에서 2020년 26만 5,000명, 2030년 20만 9,000명, 2040년 18만2,000명으로 계속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sup>1)</sup> 향후 2040년에는 2010년 대비 절반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출산을 저하에 따른 병역자원의 감소는 우수한 인력의 안정적 충원을 점점 더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된다.

병 복무기간 단축은 우수자원 획득에 보다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학군사관(ROTC) 후보생 경쟁률에서 잘 나타난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학군사관 후보생 경쟁률은 지난 2018년 3.41대 1에서 2020년 2.33대 1로 떨어졌다. 특히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주요 대학을 비롯해 지역의 거점 국립대학들의 학군사관 후보생 경쟁률은 현재 미달이거나 혹은 1대 1 안팎에 머물고 있다.<sup>2)</sup> 한해 육·해·공군 장교로 임

\* 청주대학교 군사학과 교수([phs6166@cju.ac.kr](mailto:phs6166@cju.ac.kr))

\*\* 본 발제문은 세미나 발표용으로 연구되었으므로 자료의 인용이나 활용에 제한이 있음.

1)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 [www.kostat.go.kr](http://www.kostat.go.kr).

2) 대한민국 ROTC중앙회, 「우수 초급간부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국회국방위원회 자



관되는 인원이 5천여 명인데, 이 중 학군사관후보생은 4천 5백여 명으로 전체 초급장교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초급장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인원이 학군사관 후보생인데, 이들을 우수한 인원으로 안정적으로 충원하는 문제는 이른 바, ‘창끝 부대’의 전투력 강화와 아울러 정예강군 육성의 초석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현재 문제인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대로 18개월로의 병 복무기간 단축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바, 병 복무기간 단축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장교와 부사관 복무 지원율은 현재보다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처럼 병역자원의 지속적인 감소와 병 복무기간의 추가 단축은 단기복무 장교를 포함한 초급간부의 획득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우수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간부 중심의 병력구조 개편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에서는 학·군 협약체결을 통한 맞춤형 인력확대, 초급간부 장기복무 선발 비율의 단계적 확대, 여군 비율 확대 정책을 추진해 왔다. 육군에서는 2004년부터 협약을 통해 일반군사학과 8개 대학, 사이버국방학과 1개 대학, 기술분야 컴퓨터·정보통신학과 1개 대학 등 10개 대학에 개설되었다. 학·군 협약대학의 교육과정은 매년 육군에서 학사운영평가를 통해 교육훈련의 질을 관리하고 있으며, 각 대학에서는 육군에서 요구하는 우수한 장교양성을 위해 ‘시대상황에 부합하는 군 간부 육성’이라는 목표로 다양한 노력을 해 왔다. 따라서 군사학과 출신의 장교는 일반학과 출신에 비해 초등군사반 등의 교육성적과 야전 임무수행능력 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육군 협약대학 이외의 대학에서도 경쟁적으로 군사학과를 증설하고, 기존 협약대학과의 형평성과 특혜라는 시비를 유발하면서 추가 협약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육군에서는 최근 초급간부(중·소대장)들의 복무부적응 현상이 급증과 함께 일부 군사학과 졸업생들의 부적응 현상을 제기하면서 평가제도와 자유경쟁 체제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목적은 육군 초급장교 인력획득 정책의 현주소와 군사학과와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미래의 급변하는 국방 인력환경에 능동적으로 대

처하면서 창끝 전투력의 최선봉이 되는 소대장을 배출하는 협약대학 군사학과와 자유경쟁제도 도입의 문제점을 밝혀보고자 한다. 더불어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기존 협약대학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육군 초급장교 인력획득 정책과 군사학과 제도 운영실태 분석

### 1. 육군 초급장교 인력획득 정책

국방개혁에 의하면 미래 간부인력은 늘어나야 하나 사회적 인력환경의 변화로 인해 단기복무와 장기복무 인원의 수급이 제한적이다. 특히 단기복무 초급장교의 인원은 20세 남자인구의 감소, 병 복기간의 감축, 실업률 감소로 획득 가능소요가 급격하게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잠재 성장률은 2.9%로 예상되나 KDI(한국개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2026년~2030년의 잠재성장률이 약 1.8%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방비 증가율은 과거 추세를 감안 시 3%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sup>3)</sup>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병력운영비 증가율도 저하될 것으로 전망되고 간부 증원과 인력확보를 위한 예산은 더욱 제한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군의 인력운영 구조는 전체적으로 병의 구성 비율은 73% 수준이며, 부사관은 16%, 장교(준사관 포함)는 11%의 수준이다. 이는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 외국군의 간부비율이 55~65%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간부의 비중이 매우 낮은 편이다. 특히, 우리 군의 장교 비율은 11%로서 외국군의 11~17%에 비해 적지만, 그보다는 부사관의 비율에서 외국군과 차이가 크다. 육군 부사관의 점유비율은 16%이나, 외국군의 경우 부사관의 비율이 40~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 군의 부사관 비율은 특히나 낮은 편이다.<sup>4)</sup>

3) 조관호 외, 「단기복무간부의 적정 의무복무기간 연구」(2016). p.15.

4) 이현지 외, 「인력획득 환경 변화에 따른 간부 확보 확장사업 발전방안 연구」, (2017).

장교와 부사관도 하위 계급 구성비가 매우 높은 완만한 피라미드 형태의 계급별 정원구조를 가지고 있다. 장교는 영관이 30%, 위관이 70% 정도로 이는 선진외국군의 영관급 장교 비율이 40~50%인 점을 감안해 보면, 위관급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부사관은 육군 부사관의 계급별 인력구조 형태가 중사 계급 정원이 가장 많은 다이아몬드 형태이고, 해군이나 공군은 외국군과 유사한 피라미드 형태의 인력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인력구조는 매년 새로운 장교 및 부사관을 대량으로 충원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연간 새로이 충원되는 비율을 순환율이라고 할 때, 선진국의 경우 연간 장교의 순환율은 1% 이하인 반면 우리 군은 15%로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즉 장교의 경우 전체 6.4만 명 중 연간 9천 2백여 명이 새로이 임관하고 있어 15%의 높은 순환율을 보이고 있으며, 부사관의 경우에는 총 11만 5천여 명 중 연간 새로이 임관하는 인원은 1만 9백여 명으로 약 10%의 순환율을 나타내고 있다.

초급간부의 획득관리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장교, 부사관 모두 획득소요가 많다는 것이다. 이는 하위계급의 구성비가 높은 정원구조 특성과 병역의무 수행개념에 의한 초급간부 운영체제에 기인한다. 장교와 부사관의 의무복무 기간이 각각 3년과 4년 이하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단기복무 혹은 중기복무 획득소요가 많다. 이에 따라 연간 정원대비 획득인원 비율은 장교는 15%, 부사관은 10%로서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우리 군은 과거 풍부한 병역자원과 징병제 등에 의해 초급간부 획득에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병역자원의 감소와 병 복무기간 단축 등의 영향에 따라 사관학교를 제외하고는 지원인원이 전반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초급간부의 절대 다수가 단기복무자라는 점도 인력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병사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소위 및 중위의 경우 89%가 단기복무자이다. 중대장 직책을 수행하는 대위의 계급에서도 1/3이 넘는 35.6%가 단기복무자로 구성되어 있다. 단기복무자인 장교는 직업군인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병역의무 이행의 연계선상에서 장교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에게 어렵고 힘든 그리고 위험

한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한이 있다고 본다.

부사관의 경우 병보다 학력수준이 낮다. 병의 경우에는 절반이 넘는 51%가 4년제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으나, 부사관의 경우에는 단 4%만이 4년제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다. 전문대학을 포함할 경우, 사병은 전문대 재학 이상의 학력이 79%인 데 반해, 부사관은 전문대 재학 이상의 학력이 28%로 여전히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병과 함께 생활하고 지도해야 하는 초급 부사관의 경우에는 나이도 병보다 적은 경우가 많다. 학력도 낮고, 나이도 적은 부사관이 병을 실질적으로 통제 및 지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초급간부들이 군에 대해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정갑윤 의원은 2014년 10월 9일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군 간부 인성검사 현황’ (2014년 6월 기준)을 분석한 결과, “전체 8만1037명 가운데 6.7%인 5,411명이 인성검사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인성검사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군 간부 5,411명 가운데 장교는 2만5,230명 중 1,500명인 6%이고, 부사관은 5만5,807명 중 3,910명인 7.0%가 ‘위협 및 관심’ 수준이다”면서 “인성검사에서 문제는 주로 초급간부들의 군 적응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언급하며 초급간부 선발시 인성과 상황판단 능력 등을 충분히 갖춘 간부를 선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주호영 의원도 같은 자료를 근거로 부사관 중에서 병사 가혹행위, 성추행, 복무규율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는 인원이 매년 3천 1백여 명으로 전체 부사관의 4%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자살률 추이를 보면 군 간부 자살자가 전체 자살자의 38.1%에 이르는 등 간부의 복무 부적응, 특히 초급간부의 복무 부적응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획득환경의 악화에 대비해 육군의 인력구조를 ‘대량획득 - 대량손실’의 현 피라미드 인력구조를 ‘소수획득 - 장기활용’이 가능한 항아리형 인력구조로 개선하기 위해 중·소위 정원과 단기복무 장교 획득소요 감축을 추진하는 중이다.

## 2. 군사학과 제도의 도입배경과 변천과정

군사학은 “전쟁의 본질과 성격 및 무력전의 준비와 수행에 관한 통일된 지식 체계”<sup>5)</sup>이며, 전쟁으로부터 국가와 민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 이론체계를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것으로 국가존립을 위한 중요한 학문이다. 이러한 군사학은 2002년 12월 9일에 교육부로부터 군사학과 개설이 승인됨으로써 군의 전유물로 인식되었던 군사학이 민간대학에서 다른 학문과 동일한 영역으로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되었다.<sup>6)</sup> 이에 육군본부는 군사학의 학문체계 정립과 우수 중장기 복무장교 획득 정책을 추진하고자 민간대학과 협약으로 군사학과를 개설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왔다. 더불어 해군(2012년도 충남대학교에 개설)과 해병대(2013년도 단국대학교에 개설)에서도 군사학과를 각각 개설함으로써 군 인재 양성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고 있다. 2013년도에는 군사학과 학·군 협약정책 개선으로 장학금 미지급 대학을 4개 대학을 지정하였다.

이와 같이 민간대학 군사학과의 설립배경은 군사학 학문체계 정립과 더불어 군사전문가의 저변확대와 군사 전문교육을 받은 우수 중·장기복무 장교를 획득하기 위함이다. 육군과 협약된 민간대학의 군사학과는 2020년 현재 <표 1>과 같이 총 13개 대학이며, 이 중에서 2013년 협약된 4개 대학은 장학금을 미지급하는 형태로 협약되었다. 또한 2019년부터 일부대학의 여학생을 남학생과 동일하게 군장학생으로 선발하여 교육하고 있다. 따라서 2020년 기준 육군과 협약 대학의 정원은 580명이다.

<표 1> 민간대학 육군 협약 일반 군사학과 현황

신입생 기준, 단위: 명

협약 년도	'04	'05			'11				'13			
대학	대전 대학	경남 대학	원광 대학	조선 대학	용인 대학	건양 대학	청주 대학	영남 대학	서경 대학	충남 대학	상명 대학	동양 대학
정원 (여학생)	50 (15)	40 (10)	40	40 (10)	40	40 (5)	40 (5)	40	40 (10)	40	40 (10)	40 (10)

※ 2013년 협약대학 : 서경대, 충남대, 상명대, 동양대<sup>7)</sup>

5) 이종학, 「한 군사학도의 발자취」(2006), p.21.

6) 한관수, 「민간대학 군사학 발전방향」(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육군보병학교 주최 2011 군사학술 세미나 자료집, 2011.9.23), p.5.

7) 군에서는 장교인력 획득환경의 변화와 대위정원 증가로 중기복무자 및 군장학생 소요가 증가함에 따라, 군사학과 학·군 협약정책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군

※ 일반 군사학과 외에 사이버국방학과 1개 대학, 기술분야 컴퓨터·정보통신학과 1개 대학도 협약대학으로 개설되었다.

### 3. 군사학과 운영 성과분석<sup>8)</sup>

육군과 협약된 군사학과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운영성과 분석결과 자질면에서 일반대학 군 장학생보다 우수하게 평가되었다. 이들의 평가기준은 입학당시의 성적보다 입관 이후 초군반 성적을 비교해 본 결과 <표 2>와 같이 A등급이 70%로 동기생(50% 내외) 대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재학 중 군 관련과목을 66학점 이상 이수하고 병영생활 체험 등 장교로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 것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졸업인증제에 의한 꾸준한 학습능력과 체력단련 등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군사학과 졸업생 초군반 성적

구 분		계	상	중상	중
학군	전체	3,937	1,991(50.6%)	1,943(49.3%)	3(0.1%)
	군사학과	82	59(72%)	23(28%)	.
학사	전체	879	310(35.3%)	561(63.8%)	8(0.1%)
	군사학과	55	26(47.3%)	29(52.7%)	.

※ 출처: 육군본부 내부자료(2010).

또한 군사학과 졸업생의 야전평가 결과는 <표 3>과 같이 국가관 및 군 인정신이 투철하고 지휘통솔과 교육훈련 지도능력도 월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장교로서 기본자질과 야전에 적응할 수 있는 군사 기초 지식 및 장차 군사 전문가로 발전할 수 있는 기본소양을 구비하고, 투철한 국가관과 건전한 민주시민 의식을 갖추도록 교육과정이 편성되었기 때

장학생 소수의 60%를 군사학과 출신으로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자유경쟁 중앙모집전형에 의한 선발제도이다. 이에 따라 2013년 서경대, 상명대, 충남대, 동양대를 장학금 미지급 신규대학으로 선정하여 2014년부터 2년 간 시범대학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8) 본 내용은 연구자가 ‘군사학과 졸업인증제에 대한 효과 분석’ (2013). 「군사연구」, 제 136집, pp.355-381)에 게재된 내용을 인용하였음을 밝힌다.

문이라는 평가이다. 특히 군사학과 교육은 지적능력과 고결한 품성, 강인한 정신력, 확고한 국가관, 리더십 함양 등에 목표를 둔 학위교육 및 군사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타 양성교육과는 다소 차별화된 과정으로 구분된다고 본다.

〈표 3〉 군사학과 졸업생 야전평가

단위 : %

구분	00년도 졸업생			00년도 졸업생		
	우수	비슷	저조	우수	비슷	저조
평균	64	33	3	70	29	1
국가관 및 군인정신	70	30	.	83	17	0
지휘통솔능력	58	36	6	65	33	2
교육훈련 지도능력	55	43	2	74	26	0

※ 출처: 육군본부 내부자료(2010). 동기생 대비 중·대대장 평가

이와 같은 결과를 가지고 당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 하였다. 첫째, 학위교육-군인교육의 균형여부에 대해 학위교육(2중 학위, 일반학사/군사학사)과 군인화 교육(군사훈련, 체육, 훈육)이 55:45로 적절하지만 군인화 교육의 내실화 차원에서 군사훈련 집중효과 제고방안이 요구되었다. 둘째, 교과과정 개선 및 보완에는 야전에서 요구하는 공통필수 과목을 추가하고, 공통과목 신설로 교육학과 군사학개론, 군사영어회화 등이 제시되었다. 셋째, 최신 선진교육기법 도입에는 국내외 우수대학의 선진 교육기법을 벤치마킹하여 학생 참여형 탐구식 학습과 평가방법의 다양화, 영어강의 확대실시, 인성교육 및 통합훈육 활동과 기타 합동성교육 강화 방안, 교수의 질 관리방안 등이다.

그러나 불과 5년 이후 2016년 육군본부 분석평가단에서 군 가산복무지원금을 수혜 받는 인원 에 대한 자질분석 결과를 보면, 장기선발, 지휘관 평정, 고군반 성적, 체력검정 등 전 분야에서 군사학과의 장학생이 중앙선발된 장학생보다 저조하다는 평가가 나타났다.<sup>9)</sup>

이러한 결과는 군에서 2014년 「국방백서」에 명시한 대로 ‘과거에는 재

9) 육군학생군사학교, 「우수 단기복무장교 확보전략 및 정책 연구서」, (2018).

학생 전원에게 임관과 동시에 장학금을 보장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일반 지원자와 경쟁을 통해 군 장학생으로 선발되어야만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 10)시키려는 의도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에 대해 그동안 기존 협약대학이 함께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이다.

### Ⅲ. 군사학과 운영 및 정체성에 관한 문제

#### 1. 군사학과는 군사학 학문 교육과정인가? 장교 양성과정인가?

민간대학의 군사학과는 군사학 학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이다. 군사학은 국방부와 교육부에서 공식 인정한 학문을 연구하는 학과로서 육군 협약에 의거 졸업 후 장교로 임관하여 7년간 의무복무를 하는 중기복무 장교를 육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문을 더욱 중시하는 교육과정으로 보아 타당하다. 이는 대학생활을 통해 군사학의 학문적 지식을 습득하고 학기 중에는 오직 학문탐구에 전념하고 나아가 군사학 전반에 대한 저변확대를 위한 궁극적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다만, 군에서 요구하는 초급장교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갖추기 위해 학기 중에는 군사학 연구에 전념하고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병영체험훈련과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 졸업인증제를 통해 올바른 국가관과 군인자세를 확립하고 있는 체계이다. 따라서 일부대학의 교수들은 양성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만약 양성과정이라면 왜 군이 민간대학에 의존해서 교육해야 하는지를 묻고 싶다.

그렇다면 군사학과와 사관학교와 학군단과는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가? 사관학교 생도·학군단 후보생과의 차이점은 군사학과 학생은 군인사법 및 병역법 상 후보생 신분이 아닌 민간인(학생) 신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품위유지비 및 전투장구류가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고, 사관학교 생도처럼 영내에서 생활하지도 않으며, 학군단 후보생처럼 입영훈련도 입소하지 않는다. 어찌 보면 장교로 임관한다는 엄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

10) 국방부, 「국방백서」(2014), p.65.



국가적 수혜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군사학과 학생들이 모두에게 후보생의 신분이 주어지면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이 국방부에 있으므로 예산 및 행정적 부담을 떠안게 되고, 나아가 민간대학과 협약에 의한 양성의 의미가 퇴색되는 단점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자발적으로 장교가 되기 위해 지원했기 때문에 원에 의해 특성화 프로그램(병체험훈련, GOP/안보현장 견학 등)에 참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4년 동안 군사학 학문연구와 자기개발, 체력관리를 통해 우수한 장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 2. 민간대학에서 군사학과는 설치 증가는 긍정적 현상인가?

민간대학에서 육군과의 협약 없이 군사학과를 설치하는 것은 대학의 생존을 위한 본능이다. 최근 대학은 학령인구의 저하로 인한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따라서 안정된 취업과 진로문제에 있어 직업군인으로 준비가 빠른 학과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남학생뿐만 아니라 여군 학사장교 선발도 경쟁률이 계속 상승하는 것을 보면 취업에 대한 심각성은 대학생의 현실인 것이다. 따라서 대학의 입장에서는 일단 취업경로가 일반 기업이나 공무원 보다는 군인의 직업으로의 이행이 수월(장교 및 부사관으로 임용)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후죽순으로 난립하는 군사학과 개설에 국방부나 육군에서 방관하고 있는데(다만, 장학금 지급 협약대학을 제한 및 통제)있으나, 불과 수년 전 수많은 대학에서 부사관학과를 개설하였으나, 부실대학이 속출하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결국 군에서는 일정기준에 이르는 인원만을 선정하여 합격한 인원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최종적으로 임관평가제에 의해 선별하겠다는 속셈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군사학과를 개설해 달라고 민간대학에 애걸하면서 협약하던 시절과 협약 후 대학에서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대학의 노력과 신뢰의 문제는 어찌 되는지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군사학과 지원학생의 Pool은 과거 협약 군사학과가 1~4개 있을 때나 지금이나 거의 고정적이며 증가되기보다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더구나 2018년 이후 입시생 절벽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고,

여기에다가 현재의 장교임관 선보장체제가 아닌 자유경쟁제도를 도입한다면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결국은, 입학자원이 하향평준화 되면서 동시에 양적으로도 채울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3. 군사학과 학생 전원에게 주는 군복무가산지원금은 효과적인가?

육군과 협약대학 군사학과의 특성은 협약에 의해 4년 동안 군복무가산지원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군 의무 복무를 4년간 더 하는 개념이다. 일반학과처럼 장학금도 지급하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준비해서 학사·학군장교 후보생이 되려면 군이 합격기준에 비해 가산점이 미미한 군사학과에 와서 고생하면서 장교선발시험에 준비하려는 학생이 있겠는가? 이에 대한 기존 군사학과의 대응 논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자유경쟁제도에 의해 일부 인원만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같은 학과학생으로서 경쟁심이 유발 효과도 있겠지만 학과운영 측면에서 보면 ① 불합격한 인원의 부적응(졸업 이후 진로 불투명), ② 졸업 시까지 학생 상호간 불편한 관계 지속, ③ 자신이 합격하기 위한 이기적인 내재심리로 인한 인성문제 대두, ④ 타 기관으로의 이탈(3사교, 공군/해군 장교) 부정적인 면도 무시할 수 없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 차원에서 장교 인력기준에 의거 중기복무 장교 획득을 위한 재정을 충분하게 확보(단기자원 임용 비율을 감소)하여 전원 군복무가산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군 가산복무지원금은 연간 970명(육군 630명) 중 군사학과 580명(68%), 일반학과 390명(40%)이 지급 대상이다. 육군에서의 평가는 후보생 기간 중 선발할 때 충분한 자질검증이 제한된다는 입장이나, 일부 학군단에서는 오히려 군사학과 선발 시와 비교 시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주장하면서 일반학과로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즉, 현재 ‘4년 장학금 지급 = 4년 복무연장’의 공식은 우수자원을 확보하기에는 맞지 않는 논리공식이다. 복무기간을 1년 정도 줄여주든가 아니면 장학금 이외에 품위유지비 및 전투장구류의 개인지급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육군사관학교의 경우 5년차 전역을 허용하고 있는 것과 는 배치된다. 한편, 현재 대학 입시에서 취업률과 장려금 지원 등의 장점

이 생각보다 크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최근 교육부의 취업률 반영 점수가 낮아졌고, 국가장학금 지급 등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여건에서 군사학과에 대한 전체적인 인기도가 계속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장려금 지원 혜택까지 줄인다면 각 대학 군사학과의 우수 인재 선발은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우수하지 못한 자원으로 선발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 4. 군사학과 운영대학에서 바라보는 육군의 인력획득 정책은?

군사학과 개설은 육군참모총장과 각 대학 총장들의 합의하에 추진되어 온 사안으로 2010년 6월 수정하여 재합의를 체결하였다. 당시에도 신규로 체결한 4개 대학은 아직 졸업생도 배출하지 않았는데 추가 대학 확대에 따른 일방적 수정 체결에 반발한 바 있다. 그동안 협약대학에서는 군사학과 유치 후 약속내용을 충실히 이행해 오고 있다. 특히 군사학과 만을 위한 별도의 독립건물이나 운동장, 체력단련장, 실내사격장, 안보공원 조성 등에 예산을 투자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협약 대학의 군사학 학문발전 및 특성화 노력에 대한 과소평가와 더불어 군사학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비용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립대학을 포함하여 17개 대학으로 확대한다면 몇몇 국립대학만 학생을 확보하고 기존의 사립대학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이를 미끼로 육군에서는 정원을 채우지 못한 만큼 정원을 줄여가면서 결국 사립대학은 도태되고 군사학과 운영을 포기할 것이다. 이는 민군관계 차원의 중차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육군에서 협약 대학과 신뢰를 저버리고 ‘배신행위’ 라는 비난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 합의서의 일방적 폐기로 인한 손해배상 등 법률적 분쟁 가능성 까지도 우려된다.

협약대학에서는 육군에서 이제 와서 협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군사학과의 존폐 문제로 연결될 때 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

## IV. 미래 군사학과 발전 과제

우수한 군사학과 학생 선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저해요인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복무기간과 금전적 혜택 및 직업성 보장은 지원율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불어 사회의 발전과 시민의식 등 대내·외적 환경요인과 국방조직 및 예산 등의 대내적 환경요인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현 상황을 인식하여 문제점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우수 학생의 충원을 위한 선발제도의 개선

선발이란 지원자들 중 임용이후 성과를 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재를 선택하는 의사결정과정이다. 따라서 충원관리는 인적자원을 과학적, 효과적으로 선정하고 그 과정의 타당성, 신뢰성까지 연구하는 총체적 과정 및 활동을 의미한다. 조직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충원, 배치, 교육, 훈련과 같은 다양한 인사 기능들 중에서도 선발 및 충원이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최근 육군은 ‘올바르고 유능하며 헌신하는 전사’에 부합하는 전문성과 품성, 자질을 갖춘 초급간부를 획득하기 위해 초급간부 선발평가체계를 보완하였다. 즉 초급간부 선발 시 면접 배점을 20%에서 50%로 대폭 확대했다. 또 지적능력평가(지필평가)를 2차 평가 대상자 선정에만 적용하기로 했고 체력검정도 점수제로 전환했다. 또한 육군은 학력이나 정량적 성적 위주의 선발 방식에서 탈피해 지원자의 품성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도 개선했다. 우선 국가관·사회성 등 8개의 기존 면접평가 요소에 성실성 등 품성평가 요소를 추가 반영했고, 심리검사 결과와 평가요소별 평가지표 구체화를 통해 신뢰성을 높였다. 또 토론 및 발표면접에 다양한 사고가 가능한 쟁점 있는 주제의 신규 문항을 개발해 지원자들의 논리성과 상황판단 능력, 사회성 등을 검증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에 더해 면

접시간도 기존 40분에서 60분으로 확대하여 지원자들의 품성과 자질을 깊이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적능력 평가는 임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역량을 평가하는 요소라는 기본 취지에 맞게 그 적용 기준을 조정했다. 단순 문제풀이식 학습을 통해 고득점을 한 지원자 때문에 군이 요구하는 직무역량을 구비한 지원자가 탈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평가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적능력평가 결과를 2차 평가 대상 선발의 기준으로만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2박3일의 짧은 기간에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선발 충원한다는 것은 무리한 일정과 변별력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우수 군사학과 학생 모집과 충원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사회의 인력환경 변화 관점에서 초급간부 획득환경을 분석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현행 사관학교 및 일반 군사학과와 지원현황을 검토하여 학력, 지원동기, 지원의사결정 영향요인, 잠재적 경쟁대상인 중복지원 직업군 등에 관한 세부내용을 분석하여 향후 군 인력정책 및 인력모집 홍보를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어 육군과 대학이 공유해야 한다.

둘째, 선진 외국군의 초급간부선발제도 및 선발도구, 국내 공공기관 및 민간 대기업의 채용제도, 잠재적 경쟁대상 중복지원 직업군인 경찰·소방직의 선발제도를 분석하여 우리 군의 초급간부 선발을 위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셋째, 현행 KIDA 초급간부 선발도구가 신분별(장교, 부사관), 군별, 선발 단계별로 초급간부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넷째, 초급간부 선발제도 차원에서 1차 필기평가, 2차 면접평가 등의 세부내용 및 과목, 절차, 방식의 개선소요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획득환경 변화에 따른 초급간부 선발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고 새로운 개선안을 시행하는데 따르는 법적·제도적 제한사항을 식별하여 극복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2. 대학주도의 군사학과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현재 육군은 학·군 협약체결에 의한 장교양성을 위해 총 12개 대학(정원

450명)에 군사학과를 개설하였으며, 총 14개 학교(정원 520명)로 확대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학에서는 대학 자체적으로 군사학과를 운영하여 대부분의 학생들이 군 장학생으로 임관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들 대학은 육군뿐만 아니라 해군, 공군, 해병대 등 다양한 군을 선택하거나 군무원으로 임용되는 등 진로의 폭이 넓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민간대학에 군사학과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은 현행처럼 별도의 학과로 운영하거나 교양학부의 성격으로 설치하여 모든 대학생에게 수강 기회를 부여하고 ‘임관자격인증제도’를 통해 유자격자를 임용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후보생 선발시기 조정 및 상시모집 제도화 도입이다. 현재 년 1회의 모집으로 편입생이나 학기제 졸업생들에게 불리한 제도로써 선발시기를 탄력성 있게 운영하고, 나아가 상시모집제도를 군 장학생을 희망할 경우 언제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3. 적정복무 기간의 재설정과 보상지원이 확대

군 가산복무지원금의 근본적인 취지는 ‘우수한 중기복무 장교 확보’를 목표로 고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군사학과를 선발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육군에서는 단기복무 장교로 선발된 후보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전형을 거쳐 우수자를 임관 전에 장기복무자로 선발하여 복무의욕을 고취시키자는 의견이다. 더불어 군 가산복무지원금을 받는 인원은 단순히 지원금 수령만큼 상대적으로 양성교육의 내용과 수준을 교육과 연계하여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최근 국회에서 ROTC 복무기간이 병사들과의 차이로 인해 우수자원이 기피한다는 데에 문제점을 확인하고 52년 만에 복무기간을 재검토하고 있다. 이제 군사학과와 복무기간도 차별화 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군 가산복무지원금이 우수자원을 유인하는 데 활용되었으나, 그에 대한 실효성은 그다지 크게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적정복무 기간의 검토와 더불어 금전적 보상책에 대해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ROTC 복무기간의 재설정과 더불어 군사학과 졸업생의 60% 이상이 학군장교로 임관하는 현상을 고려할 때 선제적으로 복무기간 재검토가

필요하다. 최초 협약 당시 장학금 수혜기간을 포함하여 7년의 복무기간을 학군장교와 학사장교 등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또한 ROTC 장교들의 병복무기간보다 학군장교의 복무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지면서 사회진출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은 장기선발이 안되어 제대하는 인원들의 관점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육군사관학교처럼 5년차 전역제도를 적극 도입해서 형평성 유지와 더불어 군 복무에 부적응하는 인원들이 조기에 사회로의 전환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군사학과 학생들에게도 의무복무기간 격차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본다. 2007년 신 병역제도의 시행에 따라 병 복무기간의 단축으로 인한 단기복무 장교의 유인을 위해, 2009년 군 인사법을 개정하여 2011년부터 예비장교 후보생과 ROTC후보생에게 장려금 및 매월 5만원의 교보재 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학과 학생들의 경우 군인사법 상의 신분 미보장으로 인해 수혜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 육군 장교양성의 큰 틀에서 보면 장려금과 장학금 지급을 현실화해야 한다. 단기복무 장려금은 등급수를 차별화하여 지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의무복무기간과 복무기간 차이에 대한 보상의 개념으로 정액제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본다.

#### 4. 군사학과 졸업생들에 대한 취업 인센티브 부여

군사학과 제도가 출범한 이후 야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수 있었던 것은 대학 4년 동안 군사학 학문을 토대로 문무를 겸비하여 소대장으로서 부하를 거느리고 지휘통솔을 익힌 리더십역량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 된 이후 예상했던 장기복무 비율보다 저조하고, 여군의 경우 중위에서 남군의 경우는 대위에서 어쩔 수 없이 제대하는 인원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과연 군사학과 제도에서 전역하는 이들에 대한 취업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할 때이다. 이러한 환류 시스템이 원활하게 지원되지 않는다면 우수자원들의 확보는 당연히 어려워 질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우수 근무자에 대한 취업 지원 정책이 요구된다.

첫째, 군사학과 단기복무 장교의 취업지원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들에 대한 취업지원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 대부분 ROTC장교나 학사장교로 단기복무하고 전역하는 이들에 대한 전직지원 정책은 부재하다. 따라서 후보생으로 선발되었을 때부터 개인의 포토폴리오를 작성하여 관리 및 지도하고, 나아가 개인의 의식성향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의 적용과 상담이 필요하다.

둘째, 단기복무 장교들의 전직지원을 위한 전역예정 간부들의 경력목표 설정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는 개인의 노력이나 일부 전역예정간부 취업박람회를 이용하는 수준정도이며, 전직 준비단계에서 경력목표설정을 위한 교육적 지원과 개입이 전혀 없다. 따라서 전직준비단계와 전직지원 교육단계는 명확히 구분될 필요가 있으며 전직준비단계에서 전역예정 간부들이 자기이해와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경력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군 복무를 하면서 전역 2~3년 전이 되면, 컨설팅과 상담을 통하여 전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지원이 시행되어야 한다.

셋째, ROTC중앙회 및 관련 단체와 군사학과 운영협의회(필요시 군사학과충동문회도 결성되어야 할 시기임) 등과 연계한 취업지원센터의 설립·운영이 필요하다. 이것이 진정한 후배사랑이며 우수한 후배들이 선순환되어 전통을 이어가는 방안이라고 감히 제언한다.

## V. 결론 및 제언

투르크의 명자 톤유크는 ‘성을 쌓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고 하였으며, 로마인 이야기 저자 시오모 나나미는 ‘길을 만드는 자는 흥하고 성을 쌓는 자는 망한다.’고 하였다. 군사학 발전에 모태가 된 민간대학의 군사학과도 새겨볼 이야기이라고 본다. 군사학과 스스로 미래 육군의 인재를 육성하는데 앞장서서 노력하기 보다는 협약대학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변화하는 육군의 인력정책에 방어의 논리만으로 대처하지 않는지를 성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국방부와 일부 대학에서는 우수 간부 육성과 공정성 등의 이유로 지금과 같은 협약대학의 고수는 현실적 여건상 매우 어렵다는 의견이다. 이와 맞물려 우수 자원들의 군사학과 지원 기피는 물론, 머지않아 많은 대학이 모집정원의 미달사태까지도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국방인력 환경 변화에 따른 인력정책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군사학과와 정체성 유지와 우수한 학생들을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육군 초급장교 인력획득 정책 중에서 군사학과 자유경쟁제도 도입제도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통해 군사학과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미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육군 차원에서는 우수 인재를 모셔온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하기 위해 먼저 육군과 더불어 군사학과 협약대학도 상생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더불어 공동의 노력으로 우수인력 충원을 위한 홍보전략 개발과 예산의 뒷받침, 충분한 훈련시간 편성과 표준화된 교육훈련, 초급 지휘자로서의 자질에 기초한 리더십 개발 등이 요구된다.

앞으로 민간대학의 군사학과는 현재의 안보상황과 시대적 소명을 직시하고 미래의 유능한 장교와 국가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진지한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연구노력을 통해 오늘의 위기가 군사학과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고, 나아가 우리 군 초급간부의 질을 향상하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한다.

# 지도자 리더십과 국가발전에 관한 연구

김 정 수<sup>1)</sup>

---

## 순 서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사례위주의 국가 지도자 리더십 분석
  4. 지도자 리더십과 국가발전
  5. 결론
- 

2020년의 세계는 대규모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미증유의 혼란사태를 겪고 있고 그 혼란사태의 종점은 아직도 정확히 예측이 안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사태의 영향으로 예외 없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의료, 교육, 고용, 국민의 삶의 질 등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고 아직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코로나가 발생되기 이전의 정상적인 삶과는 너무나 다른 패턴의 비정상적인 생활 영위가 지속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에 다가올 수 있는 위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적의 외침으로 인한 전쟁과 테러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고 각종 재해재난과 대형 안전사고 및 현재의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을 들 수 있겠다. 이러한 위협에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국가의 위기관리인데 그 위기관리의 승패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국가지도자의 리더십이라 할 수 있겠다. 우리 역사 속에도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 지도자들의 리더십에 따라서 국가의 흥망과 부침이 존재하였다. 대규모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전 세계의 혼란이 지속되는 전환기를 맞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국가를 발전시키는 지도자 리더십에 대해 생각해 보고 또한 미래의 대한민국이 그 지도자들의 리더십으로 인해 국가가 발전하고 그 결과 세계사에 우뚝 서는 조국 ‘대한민국’을 기대 해본다.

키워드 : 지도자, 리더십, 국가발전, 전환기

---

1) 영남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mingee99@ynu.ac.kr

## 1. 서 론

2020년의 세계는 대규모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미증유의 혼란사태를 겪고 있고 그 혼란사태의 종점은 아직도 정확히 예측이 안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사태의 영향으로 예외 없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고용, 국민의 삶의 질 등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고 아직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코로나가 발생되기 이전의 정상적인 삶과는 너무나 다른 패턴의 비정상적인 생활 영위가 지속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에 다가올 수 있는 위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적의 외침으로 인한 전쟁과 테러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고 각종 재해재난과 대형 안전 사고 및 현재의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을 들 수 있겠다. 이러한 위협에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국가의 위기관리인데 그 위기관리의 승패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미국을 보면 자명하게 알 수 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민주국가이고 1등 국가이며 세계의 경찰국가로 군림해왔고 지금도 그러하다. 뉴욕의 무역센터가 9.11테러<sup>2)</sup>로 알 카에다에 의해 폭파되는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사태를 수습하고 피해를 재건하였고 이라크전쟁과 아프간 전쟁을 치르면서 테러의 본거지와 테러범을 소탕하고 다시 우뚝 선 나라가 미국이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는 세계에서 최고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많이 발생<sup>3)</sup>한 국가의 오명을 얻었다. 또한 코로나 상황에서 함께 불거진 인종차별 문제로 인한 일부의 소요사태도 발생하였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여기서 논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 유럽 등 주변국의 전염병 확산 상황에서 사전 대응조치와 초기대응, 마스크 사용 문제 등에서의 의사결정, 전문가의 의견 청취 등에서 일관성이 없었고 조기 경제 활동 재개를 우선시 하면서 사태가 심해지는 악순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볼 때 국가 지도자의 올바른 판단과 시기적절한 조치 등의 위기관리 능력이

2) [https://ko.wikipedia.org/wiki/9.11\\_%ED%85%8C%EB%9F%AC](https://ko.wikipedia.org/wiki/9.11_%ED%85%8C%EB%9F%AC)(검색일: 2020.10.1.\*) 9.11 테러(한국어: 구일일 테러, 九一一 terror, 영어: September 11 attacks 셉템버 일레븐 어택스[\*], 9/11 attacks)는 약칭 9/11으로도 불리며, 2001년 9월 11일에 미국에서 발생했던 항공기 납치 동시다발 자살 테러이다. 이로 인해 뉴욕의 110층짜리 세계무역센터(WTC) 쌍둥이 빌딩이 붕괴되고 버지니아주 알링턴 군의 미국 국방부 펜타곤이 공격받아 일부가 파괴되었으며, 약 2,996명의 사람이 사망하고 최소 6천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이는 2002년 조지 W. 부시가 발의한 국토안보법에 의거, 미국 국토안보부 개설의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3) 2020년 10월18일 미국 코로나-19 확진자 수 : 8,342,665명, 사망자 수 : 224,282명

얼마나 중요한 가를 알 수 있다. 우리는 지금 매우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국가 전 분야에 전환기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어쩌면 이번 변화는 단기적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코로나 사태 이후의 새로운 시대로 나가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시기에는 더욱 더 국가지도자의 현명한 리더십이 필요할 것이다. 즉 국가위기 발생 시 국가 지도자는 냉철한 상황 판단과 빠르고 적합한 의사결정을 한 후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조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가용한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투사(projection)하여 위기를 조기에 해소하도록 위기관리 능력의 발휘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sup>4)</sup>.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위기를 호기로 활용하여 국가발전의 기회로 삼는다면 더욱 더 바람직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기후, 환경, 재해재난, 전염병 등의 자연재해와 인공지능 및 4차 산업혁명의 현대기술로 인해 모든 것이 바뀌고 시대의 근본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전환기에 필요한 지도자상은 과연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역사 속의 성공과 실패의 지도자 리더십 사례를 통해서 교훈을 분석한 후 이 시대의 바람직한 국가 지도자 상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리더십의 정의

리더십(leadership)정의에 대한 학자들 각자의 견해를 보면 Fiedler(1968)는 공통 과제를 이행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작용이라고 하였고, Rauch & Behling(1984)은 체계화된 공동체의 목적달성을 위한 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Richard & Palus(1986)는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세부과제들을 선정하며 그 속에서 과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여건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제시 하였으며, Jacobe & Jaques(1990)는 과업을 부여하고 과업달성에 들이는 헌신적 노력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 정의하였다. Drath & Palus(1994)는 구성원들이 인지하고 희생하도록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우쳐 나가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House(1999)는 다른 구성원들로 하여금 공동체의 필요성과 성공을 위해 영향력을 보여주고 동기를 느끼고 헌신을 할 수 있게 하는 지도자 개인의 영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처럼 리더십을 정의하려고 노력한 학자들의 인원수만큼 다른 리더십의 정의가 존재할 수 있다.<sup>5)</sup>

4) 정찬권, “정치지도자의 국가위기관리 리더십에 관한 연구,” 『국가위기관리학회보』, 제2권 제1호(2010.03), p83.

5) 윤종성, “대통령 국정과제 수행 리더십 연구”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p.8.

이렇게 수많은 학자들의 상이한 리더십의 정의가 있으나 종합해보면 리더십은 구성원들이 공동체의 목적을 이룩하기 위하여 자발적이고 헌신적으로 임하도록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부여하는 일련의 과정이나 기법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구성원들이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열과 믿음을 가지고 과업에 임하도록 하는 자발성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더욱 훌륭한 리더십일 것이다. 국가와 사회에는 수많은 종류의 리더와 지도자가 있다. 그중에서도 한 국가를 볼 때 국가지도자 리더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국가지도자 리더십은 그 국가의 운명과 많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 2.2. 리더십 이론의 발전경과.

국가지도자 리더십의 중요성을 논하기 위해 전통적 리더십 이론의 발전경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전통적 리더십 이론은 ‘특성 이론(trait theory)’(1930~1940년)으로 리더의 유능한 능력, 즉 리더의 개인적 특성이 효과적인 리더십과 연관이 있다는 이론과 리더가 어떤 모습을 보여 주는가에 따라 리더십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하는 ‘행동 이론(behavioral theory)’(1950~1960년), 리더는 주어진 현상에 맞게 가장 적절한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이론인 ‘상황 이론(situational theory)’(1970년 이후)으로 변화했다.

### 2.2.1 버나드 바스(Bernard Bass)의 특성 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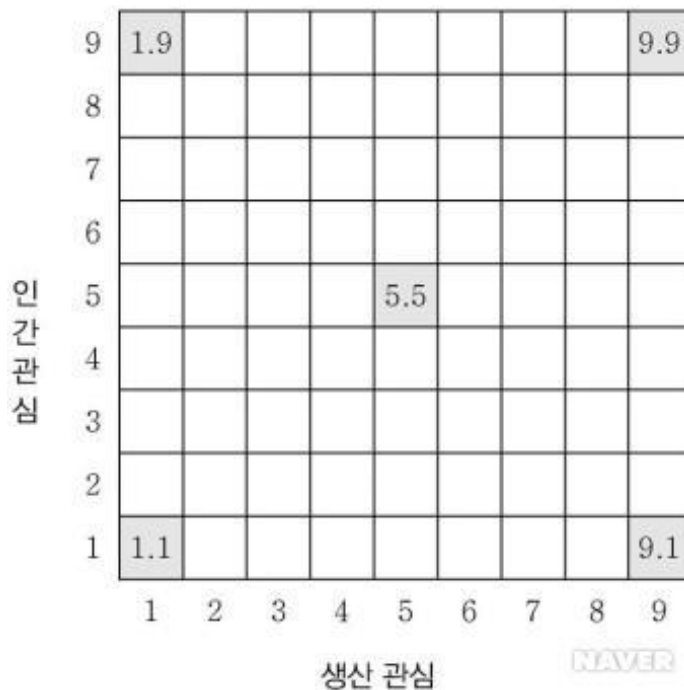
특성 이론은 리더십 연구의 초창기 이론으로서 리더의 개인적 특징과 자질에 초점을 둔 연구 이론이다. 즉, 리더는 고유의 우수한 성격, 기질, 지능, 신체의 특성을 갖고 조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이다. 즉 성공한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traits)을 연구한 이론으로 위인들이 평범한 사람보다 어떤 우수한 개인적 특성이 있는지를 찾아내어 이론화 하였다.

버나드 바스(Bernard Bass)는 특성 이론 내용을 연구하여 체계화한 특성을 육체적 특징(physical characteristics), 성질(personality), 사회적 환경(social background), 사회적 특징(social characteristics), 인지 능력(intelligence and ability), 업무 관련 특징(task-related characteristics) 등 6가지로 나누었다.

### 2.2.2 로버트 블레이크, 제인 머튼(Robert R. Blakes & Jane S. Mouton)의 행동 이론

---

1940년대 말부터 초창기 리더십의 특성 이론을 단순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많은 학자들이 리더의 행동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하였다. 리더란 특성 이론의 리더처럼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갖추어진 것이 아니고 후천적인 경험과 교육을 통해 성공적인 리더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이론이다. 이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미국의 대학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실행되었는데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 아이오와 대학, 미시건 대학의 연구를 배경으로 로버트 블레이크와 제인 머튼(Robert R. Blakes & Jane S. Mouton)이 함께 정립한 경영 격자(managerial grid) 이론이 대표적이다. 즉, 일 중심의 생산에 주된 초점(concern for production)을 표시하는 X축과 사람 중심 즉 인간에 대한 것에 초점(concern for people)을 보여주는 Y축으로 나누어 리더의 행동형태를 계량화했다. 성공적인 리더의 종류를 제시했다기보다는 리더십의 형태를 분류하기 위한 기준을 정립했다고 할 수 있다.



### 2.2.3. 피들러의 상황 이론

피들러의 상황이론은 리더 및 구성원의 행동적 특성, 업무와 집단구조, 조직요소를 중심으로 리더십 유형을 형상화하고 리더십 집행과정에서 이들 각 요소의 기

능과 작업의 종류, 환경등의 상황요인에 따른 리더십의 결과를 유추하려는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처음으로 리더십 이론에 상황요인을 적용하여 리더와 상황과의 부합 관계가 리더십의 효과성에 긴요함을 강조하였고, 또한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거나 리더십 형태를 상황에 맞도록 변경시킴으로써 공동체의 업무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음을 정립하였다.<sup>6)</sup>

#### 2.2.4. James Burns 의 거래적 리더십(transactional leadership)

리더가 구성원들의 생산성에 적절한 보상으로 교환을 해 준다는 이론이다. 대표적인 리더십 유형으로 정해진 목표를 완성하기 위해 구체화된 행동유형을 정하고 동기를 제공한다. 교환(교류)적 리더십 이론'이라고도 하며 지도자와 구성원들 간에 각자 요구하는 것의 교환(거래)를 통해 효율적인 리더십을 추론해낼 수 있다는 이론이다. 즉, 리더는 공동체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구성원들로부터 노력을 유도해내는 대가로 구성원들에게 여러 가지 형태의 보상을 제시하여 구성원들의 필요사항을 충족시켜 주면서 리더와 구성원이 거래 관계를 성립하면서 공동의 목적을 달성시킨다는 이론이다.

#### 2.2.5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

베버(Weber, T.)가 처음으로 제시를 한 이후에 번스(Burns, J. M.) 및 바스(Bass, B. M.)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정립된 리더십 이론이다.

리더가 구성원들에게 조직의 비전(vision)을 제시하고 그 목표완성을 위해 모두 함께 매진할 것을 호소하여 구성원들의 생각과 태도의 변화를 통해 성취를 만들어 내려는 리더십에 관한 이론이다. 즉 리더는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 구성원들 각자가 스스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해결할 다른 방식을 찾도록 지원한다. 변혁적 리더십은 자신의 구성원들에게 높은 기대감을 부여하고 확신감을 불어 넣어주며 또한 개별적인 배려를 하여 줌으로써 그의 부하들을 변화시켜 나간다.(House,1977; Woycke & Foder,1988). 구성원들은 리더가 제시한 임무에 강한 공감을 하며 리더의 믿음을 자신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거나 수용한다. 또한 리더의 신뢰로 인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강해지고 리더에게 신뢰받고 있다는 일체감을 가지게 된다.

즉 구성원들의 욕구수준을 리더의 높은 수준의 리더십 행동으로 인한 감화를 통해 매슬로우(Maslow, A. H.)의해 제기되었던 고도의 수준으로 향상시킴으로써 구성원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리더십 이론이다. 따라서 변혁적 리더십은 거래적 리더

---

6) 윤종성,전계서,pp.12-15

십보다 효과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 즉 일반적으로 거래적 리더십을 구사하는 리더는 ‘기대했었던 성과’만을 구성원들로부터 이끌어 내는 반면, 변혁적 리더십을 구사하는 리더는 구성원들로부터 ‘기대이상의 성과’를 얻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sup>7)</sup>

이처럼 시대 경과에 따라 리더십 이론도 발전되었다. 위에 제시한 모든 이론들이 리더십이론으로 적용되고 활용될 수 있으나 오늘날 보편적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유용한 리더십으로 여겨지는 리더십은 변혁적 리더십일 것이다.

## 2.3 지도자 이론의 발전경과

국가지도자 리더십의 중요성을 논하기 위해 전통적 리더십 이론의 발전경과를 살펴보았다. 역사속에 수많은 지도자들이 탄생되었다. 지도자들의 행적을 보면서 리더십이론과 접목된 지도자 이론이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지도자 리더십의 중요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리더십 이론의 발전경과에 추가하여 지도자 이론의 발전 경과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마키아벨리(Niccolo Machiavelli)는 권모술수와 공작정치의 원조로 각인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권모술수의 대가이며 공작정치로 권력을 가까이 한 인물만은 아니었다. 그는 정치 사상적으로 중세에 살면서도 근대적 사상을 피력한 위대한 사상가로 기록되고 있다. 중세시대에는 정치사상이나 정치철학이 도덕적이고 규범적인 측면에서만 논의되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규범적 담론의 틀을 깨고 현실에 기반하여 정치사상을 논의한 최초의 사상가이다. 이런 관점에서 평가할 때 마키아벨리아말로 정치사상사에서 가장 걸출한 지도자 이론가로 불려지고 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군주의 통치술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데 그것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지도자론을 의미한다. 그는 사분오열되어 있던 분단국가인 조국 이탈리아를 통일하고 부국강병의 강대국을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전략으로 매우 수준 높은 지도자론을 전개 시키고 있다. 마키아벨리아는 지도자를 논함에 있어서 개인적 덕목으로서 비르투(virtu=virtue=능력)와 지도자의 외적조건으로서 시대적 필요를 의미하는 니세스타(necessita=necessity=시대조건)를 제시한 바 있다. 그는 훌륭한 지도자는 결단력과 판단력을 겸비한 사람으로서 올바른 품성과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도자는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 국가적인 과제와 시민들의 열망을 이해하고 그것을 표출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다. 마키아벨리 이후 전개된 지도자 이론은 다음의 세가지로 들 수 있다.

첫째는 지도자의 개성이나 지도자 개인이 갖추어야할 자질에 초점을 맞춘 ‘특성론’(trait approach)이다. 둘째는 지도자가 처해있는 상황에 초점을 맞춘 ‘상황론’

---

7) 윤종성,전계서,pp.26-28



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도자의 개성 및 자질과 상황과의 상호작용, 즉 특성론과 상황론의 상호작용을 다룬 입장으로 ‘상호작용론’(interactional approach)이다. 자질론이 인간의 능동성을 강조한 영웅론적 접근이라면 상황론은 시대적 상황이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숙명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리고 상호작용론은 지도자 및 추종자의 퍼스널리티와 지도자가 처한 시대상황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리더십을 이해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시대가 영웅을 만드는 가? 영웅이 시대를 이끄는 가? 하는 문제는 역사적으로도 오랜 논쟁이었다. 영웅이 시대를 이끌었다고 본다면 특성론에 입각하여 리더십에 접근하는 것이고 시대가 영웅을 만들었다고 본다면 상황론을 기초로 리더십에 접근하는 것이다<sup>8)</sup>. 지도자 개인, 시대 여건 등의 변수에 따라 특성론과 상황론에 의한 지도자가 나타날 수도 있으나 현대에는 상호작용론에 의한 지도자 형성이 일반적일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국내외적 상황변화가 발생하는 전환기에 지도자 리더십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본고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리더십의 일반적 정의와 리더십 이론의 발전경과 및 지도자 이론의 발전경과를 토대로 전환기에 바람직한 지도자 리더십에 관해 논해보고자 한다.

### 3. 사례위주의 국가 지도자 리더십 분석

#### 3.1 지도자의 역할과 중요성

##### 3.1.1 지도자의 역할

지도자는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면 지도자는 어떤 그룹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국가나 사회의 관점에서 지도자의 종류는 다양하게 있다. 국가 지도자, 종교 지도자, 마을 지도자 및 운동선수의 감독과 같은 스포츠 지도자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다. 그렇다면 지도자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사람과 사람, 국가와 국가, 사회 내부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발생 되는 갈등과 문제를 리더십을 바탕으로 조정하고 해결해주며 때로는 통합하면서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국가와 사회와 조직을 발전시키는 사람을 보통 지도자로 인식한다. 이런 관점에서 지도자의 필요성은 인정 된다 할 수 있겠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국가와 국가 간에 갈등이 없는 조용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면 지도자가 필요 없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sup>9)</sup>

그러나 인간사회는 항상 갈등과 문제가 상존하며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경제, 인종, 종교, 문화, 안보, 빈부차이 등으로 인해 세계는 이와 관련된 전쟁과 테러, 무

8) 황주홍외, 『지도자론,한국의 리더와 리더십』(건국대학교 출판부, 2002), pp.57-59.

9) 이진호, 『지도자론,지도자가 갖추어야할 자질과 리더십』(아담, 2011), p21.

역경쟁 등으로 인한 민족과 국가 간의 수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과 모순을 인위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인 법률과 규정이 시행된다. 그러나 강력한 법률과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갈등을 완전히 없애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도자는 이러한 갈등과 모순을 최소화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참여하도록 요구된다. 그러한 시간과 장소에서 지도자는 또 갈등을 해소하고 혁신적인 미래를 위해 생산적으로 국가나 조직을 이끌고 있다. 이것이 지도자가 필요한 이유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지도자는 집단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면 집단이나 국가 또는 어떤 조직 내에서의 지도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지도자의 역할은 리더십 발휘를 통해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을 선도하여 문제를 해결하며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등 리더십 발휘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지도자는 집단이나 사회조직의 유지관리, 성장기반 마련, 변화의 선도,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통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발전을 위해 지도자는 자신은 물론 구성원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게 하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한계를 극복하며 주어진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sup>10)</sup>

시드니 후크(Sidney Hook)는 세계의 역사에서 지도자의 역할의 중요성을 가장 잘 보여준 사례로 다음의 두가지를 들었다. 하나는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1945년에 일본에 원자폭탄 투하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때 그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연합국의 2차 대전 승리는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세계의 역사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 갔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하나는 1933년에 독일의 힌덴부르크가 인기와 세력이 침체해가던 히틀러를 권력의 중심부로 불러 들이지 않았다면 나치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고 유럽과 인류의 운명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 되었을까? 하는 사례를 들었다.<sup>11)</sup> 그밖에도 역사속에서 지도자의 역할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수많은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즉 한 나라를 망하게 하거나 퇴보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하는 데는 지도자 몇 사람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퇴보의 나락에 빠져 있는 나라를 건져내고 또 다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것도 지도자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로 좁혀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현대사에서 많은 대통령이 있었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예를 들어보고자 한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발전의 기여도에서는 긍정적이나 장기집권에 따른 민주화의 관점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고에서는 그러한 긍정부정의 관점을 논하기보다는 국가발전의 관점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즉 박정희는 6.25 전쟁의 폐허 위에서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외국의 원조를 받던 대

10) 상계서, p.22

11) 황주홍외, 전계서, pp.19-20.

한민국을 새마을 운동과 중화학 공업 육성으로 세계 일류국가가 되게 하는 초석을 만든 지도자이다. 이에 반해 북한의 지도자들은 국민을 잘살게 하는 것보다 군사력 증강에 치우친 결과 오는 날 2017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sup>12)</sup>에서 대한민국은 3198만원, 북한은 146만원으로 22배차이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지도자가 국민경제와 국민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친 또 하나의 사례는 한국과 필리핀의 비교이다. 1960년대 초에 한국은 6.25 전쟁의 폐허에서 재건을 시도하고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 중의 하나였다.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 미만이고 농업생산과 미국원조에 의존하는 전형적인 후진국이었다. 박정희와 마르코스가 1960년대에 비슷한 시기에 통치를 시작 할 당시 필리핀은 1인당 국민소득이 268달러이고 한국은 93달러<sup>13)</sup>였다. 대한민국 대통령 박정희는 대한민국이 필리핀 정도만큼만 되면 좋겠다고 하였다. 박정희는 필리핀에 차관을 구하러 갔다가 마르코스가 만나 주지를 앓아 그냥 돌아가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2020년 현재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1431달러, 필리핀 1인당 국민소득은 3294달러<sup>14)</sup>이다. 40년 전에 차관을 얻으러 가서 거절당한 나라보다 10배 정도 더 잘 살고 있는 대한민국, 이것은 무엇으로 해석이 가능한가? 국민의 근면성, 시대적 환경, 국가의 운명, 전략적 선택 등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해 볼 요소는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 일 것이다. 필리핀의 지도자 마르코스는 부인과 함께 사치와 부정부패 및 각종 스캔들로 인해 외국으로 망명하는 신세가 되었고 대한민국의 대통령 박정희는 못사는 나라를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보겠다는 일념 하에 중화학공업을 비롯한 국가 기간산업육성, 농촌새마을 운동,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을 추진한 결과 오늘날 부강한 대한민국의 초석을 쌓았던 것이다. 두 지도자 리더십 극명한 대비는 후손들이 물려받는 오늘날의 대한민국과 필리핀의 국민소득 차이의 큰 요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1960년대 아시아의 최빈국 한국은 박정희 시대의 근대화로 이른바 ‘보릿고개’로 상징되던 절대빈곤을 탈피하고 수출입국의 기치를 내세워 세계가 부러워하는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직전 영국의 이코노미스터지는 한국을 ‘경제발전의 교과서적인 모델국가’라는 찬사를 보내었다. 한국의 국민들이 역대 지도자 중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의 국가봉사의 정신자세에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임종 시 평범한 세이코 시계를 차고

12) <https://www.yna.co.kr/view/AKR20171215059700002>(검색일:2020.10.18)

13)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66851&C\\_CC=AC](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66851&C_CC=AC)(검색일: 2020.10.18.)

14)

[https://search.daum.net/search?DA=DKL&https\\_on=on&q=%EA%B5%AD%EA%B0%80%EB%B3%84%201%EC%9D%B8%EB%8B%B9%20GDP%20%EC%88%9C%EC%9C%84&w=tot&ie\\_redirect=Y](https://search.daum.net/search?DA=DKL&https_on=on&q=%EA%B5%AD%EA%B0%80%EB%B3%84%201%EC%9D%B8%EB%8B%B9%20GDP%20%EC%88%9C%EC%9C%84&w=tot&ie_redirect=Y)(검색일: 2020.10.18.)

있었고 넥타이핀의 도금이 벗겨 있었으며 혁대도 헤져 있었다.<sup>15)</sup>라는 일화는 유명하다. 그만큼 그는 평소에 검소했고 개인적인 치부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생각했던 지도자였다. 한나라의 흥망성쇠가 지도자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는 것이라면 역사발전과정에서 지도자의 역량과 그 역할이 일반 대중들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빛과 그림자’처럼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지도자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지도자의 시대에는 그 시대 일반 대중들의 삶과 그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할 것이다. 반면에 유능하고 현명한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의 시대에는 그 시대 일반 대중들의 삶과 그 사회에 찬란한 빛을 밝혀준다. 결국 한나라의 흥망성쇠는 지도자의 비전, 그리고 행동방식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역사발전에서 지도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하나의 정설이라 할 것이다. 이처럼 지도자의 역할은 리더십 발휘를 통해 새로운 변화와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 리더십 발휘의 결과에 따라서 인류에게, 국민에게 긍정과 부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인류와 국가와 집단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이고 현명하고 좋은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훌륭한 지도자가 될 자질요건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그것은 리더십이다. 지도자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결과를 창출해야 한다. 그래야 집단이나 사회를 발전시키고 구성원들의 존엄성 실현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다. 리더십은 그것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적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결과를 창출할 때 가치가 생성된다. 리더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리더십 발휘를 통해 구성원이 당면하거나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를 창출해 존엄성을 실현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켜야 한다. 리더십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권력과 권한이 리더십 발휘의 전제조건인 것처럼 생각한다. 권력과 권한이 리더십 발휘의 중요요소이나 전제조건은 아니다. 같은 권력과 권한을 가져도 발휘하는 리더십 역량은 각자 다르다. 작은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도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고 큰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도 잘못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뛰어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은 성과를 창출하고 구성원의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스스로 권력과 권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 그러므로 리더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리더십 역량 제고이지 권력과 권한의 크기나 확대가 아니다.<sup>16)</sup>

### 3.1.2 사례를 통해서 본 지도자의 중요성 분석

터커(Robert Tucker)는 지도자는 세가지의 기능을 수행하는 존재이므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첫째는 집단이 처한 상황을 판단해 직면했거나 다가올 문제점을 진

15) 황주홍외, 전게서,p.227

16) 이진호, 전게서,pp.22-23.

단해주는 ‘진단적 기능’, 둘째는 집단이 직면한 문제에서 그 문제를 제거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하고 그 해결 방법을 만들어내는 ‘처방적 기능’, 그리고 셋째는 그 집단이 직면해 있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집단이 운용할 수 있는 가용 리소스를 이용해 모든 자원을 총 동원하고 사용하는 ‘동원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다. 따라서 지도자는 사회적 문제의 진단과 처방, 그리고 문제해결의 핵심적 수단까지 동원할 수 있는 기능 수행자인 것이다.<sup>17)</sup> 이같은 지도자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지도자는 다음 두가지 관점에서 중요하다. 하나는 정치 실천적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 이론적인 측면이다. 즉 하나는 현실적인 것이고 하나는 이론적인 면으로서 세부적으로는 지도자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겠다. 지도자의 중요성은 첫째로 지도자를 통해서 국가운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동서고금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나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국가는 다원주의, 자유주의, 개인주의가 환경과 복지문제와 결합하고 있다. 시민, NGO, 거버넌스의 시대이며 가상공간의 시대이다. 또한 인공지능과 로봇, 빅데이터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되었다. 국가공동체의 구심력보다 국경을 뛰어넘는 IT산업과 스마트 관련 기술 등의 원심력으로 인해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슈퍼마켓’이 되었다. 이럴 때 일수록 더욱 더 지도자가 중요하다. 다양한 목소리와 다양한 분야를, 다양한 첨단 기술을 그리고 다원적 가치관을 하나의 오케스트라처럼 아름다운 화음을 낼 수 있는 조화로운 공동체로 이끄는 지도자의 리더십이 더욱 필요하다. 둘째로는 보다 이론적이고 정치학적인 이유로서 기성의 정치학적인 입장과 접근방법에 대한 반성 입장에서 출발한다. 기존의 정치학에서 권력이라는 개념은 주로 권력소유자와 권력희망자 사이이 갈등관계로 설정했다. 즉 선거나 정당체제나 집권등 일련의 과정을 주로 정치엘리트들간의 게임과 거래와 교환과 갈등이라는 관점에서 바라 보았다. 그러나 권력 소유자와 권력 추구자 사이의 갈등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관점은 권력의 객체인 시민과 국민을 논의과정에서 간과하거나 과소평가할 수도 있다. 반면에 ‘지도자론’의 시각은 권력 소유자인 지도자와 권력부여자인 시민들간의 상호관계를 보다 역동적으로 표현해주게 된다. 지도자의 능력과 비전과 자질이 시대적인 요구와 국민들의 기대와 변증법적으로 교차하고 상호수용하는 가운데 형성된다고 보는 것이다. 즉 시대와 국민을 외면한 지도자란 애당초 불가능한 것이며 시대와 국민을 부정하는 지도력 또한 있을 수 없다. 세정대왕의 한글 창제는 당시 조선의 문화적 수준과 조건, 당시 민중들의 필요와 발전이라는 차원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 박정희의 경제 개발계획 구상 또한 한국전쟁 이후의 피폐한 한국의 경제 상황과 신생국가 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17) 황주홍외, 전게서, p.8

의해 비로소 가능할 수 있었다. 지도자의 성공과 실패는 개인의 성공과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국가와 국민의 성공과 실패 실패로 이어진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많은 사례를 볼 수 있다. 먼저 조선 시대의 지도자의 대표적인 실패사례로는 조선 제 14대왕 선조와 제 16대왕 인조의 예를 들 수 있겠다. 선조는 일본의 침략 징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비를 게을리하여 1592년 임진왜란<sup>18)</sup>의 참화를 백성들이 겪었다. 임진왜란 이후에라도 사태를 수습하고 일본의 재침에 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결과 백성들로 하여금 1597년 정유재란<sup>19)</sup>을 겪게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인조도 비슷한 경우이다. 중국 대륙에 명과 청이라는 두 강대국이 등장하여 패권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갈등이 언제 조선으로 여파가 미칠지 모르는 국제상황에서 지도자로서 대응을 못한 결과 정묘호란<sup>20)</sup>을 겪게 된다. 정묘호란은 정유재란이 일어난지 30년 만에 발생한 전란임을 감안하면 정유재란을 겪고 난 이후 외침에 대비한 국방력 강화에 대해 지도자의 고민이 없었던 점을 반증한다. 여기서 전란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조시대에 청나라가 다시 재침해 9년 만에 병자호란<sup>21)</sup>을 겪게 되는 것은 ‘국가지도자로서의 왕이 백성들의 안위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하지 않았던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한다. 또한 조선왕조의 제 26대로서 마지막 황제인 고종은 밖으로는 당시에 조선을 주변으로 일어나고 있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안으로는 본인의 정치 지도력 부재와 부국강병을 소홀히 한 결과 외세 일본으로부터 36년간 식민통치를 받게 되어 백성들이 일본으로부터 고난을 받게 만들었다. 이에 반해 조선 제4대 국왕인 세종대왕은 재임 기간 부국강병의 기반을 마련하고 대마도를 정벌하였으며 측우기와 훈천의 등을 제작하여 과학을 발전시키고 한글을 창제하여 백성들이 쉽게 쓰고 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군시대를 열었다. 우리나라의 현대사에서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의 지도력 실패로 북한의 남침을 받아 6.25 전쟁의 참화를 겪게 되었고 반대로 박정희는 6.25 전쟁 이후의 잿더미 한국을 오늘날 세계 10위의

18) 임진왜란(壬辰倭亂) 또는 임란(壬亂)은 1592년(선조 25년) 일본 도요토미 정권이 조선을 침략하면서 발발하여 1598년(선조 31년)까지 이어진 전쟁이다.

19) 정유재란(丁酉再亂)은 1597년 8월 도요토미 정권 일본군이 임진왜란의 정전회담이 결렬됨에 따라 재차 조선을 침공하여 이듬해인 1598년 12월까지 지속된 전쟁이다.

20) 정묘호란(丁卯胡亂)은 1627년(인조 5년)에 후금이 침입해 일어난 전쟁이다. 인조 즉위 후 집권한 서인의 친명(親明) 정책과 후금 태종의 조선에 대한 주전(主戰) 정책의 충돌에 기인한 싸움이며, 이로 말미암아 후금은 명나라와는 불가능 하였던 교역의 타개책을 조선에서 얻게 되었다.

21) 병자호란(丙子胡亂)은 1636년(인조 14년) 12월 28일(음력 12월 2일)부터 1637년 2월 24일(음력 1월 30일)까지 조선과 청 제국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다. 병자란, 병란, 병자노란(丙子虜亂), 병정노란(丙丁虜亂), 만주의 조선 침공, 청의 조선 침공이라고도 부른다.

경제 대국으로 도약하는 초석을 만들었다. 또 외국의 지도자 리더십 실패사례는 월남을 들 수 있다. 월남이라는 나라는 티우 대통령의 지도력 실패와 부패로 1975년 4월30일에 월맹에 의해 공산화되어 당시 많은 월남 국민들이 공산 월맹에 의해 죽거나 보트피플<sup>22)</sup>이 되어 망망대해를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으며 오늘날 월남이란 나라는 지구상에서 없어지고 현재의 베트남이 탄생 되었다. 앞에서 제시한 사례들은 지도자의 실패가 국가와 국민의 실패로 이어진 경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 제시한 많은 실패 사례들은 국제적, 국내적 전환기에서 국가 지도자가 그 리더십 발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데서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성공사례는 지도자가 백성과 국민을 사랑하고 오직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로 설명할 수 있겠다. 그만큼 지도자는 국가와 국민에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현대사 한국의 성공사례인 박정희의 사례를 전환기 국가지도자 리더십의 성공사례로 정의하고 국가발전의 관점에서 박정희 리더십의 교훈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 3.2 박정희의 리더십 분석

### 3.2.1 박정희 리더십의 주요 특징

박정희 리더십을 카리스마 리더십, 권위주의적 리더십 등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국가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친 실용주의적 리더십과 창조적 리더십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 3.2.1.1 실용주의적 리더십

박정희는 평소에 늘 “우리들의 후손들이 우리 세대에게 당신은 조국을 위해 어떠한 일을 했느냐고 물었을 때 우리는 서슴지 않고 조국 근대화의 신앙을 가지고 일하고 또 일했다고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게 합시다”라고 말했다. 이부분에서 국가 근대화와 경제개발에 관한 그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비서실장으로 오랜기간 동안 박정희와 함께한 김정렴에 의하면 박정희는 경제부국, 즉 경제를 국정의 기본으로 설정하고 ‘무엇보다도 먼저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국민들이 배불리 먹고 등 살아야 국가의 안정과 국가방위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이러한 지도자로서의 목

---

22) 투옌년비엡남(Thuyền nhân Việt Nam, 베트남 선인, 船人) 또는 딘년비엡남(Đình nhân Việt Nam, 베트남 정인, 艇人)은 베트남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1970년대 초반부터 해로(海路)로 베트남을 탈출하던 난민들을 가리킨다. 보트피플은 월남과 월맹이 통일되기 전인 베트남 전쟁 때 부터 속출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베트남 공화국이 베트남 민주 공화국 수중에 떨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불길함 때문이었다.

표와 비전, 즉 국가발전과 민족의 중흥을 이룩하는 일, 이것을 위해 경제개발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실용주의적이고 합리주의적이었다. 목적의 이행을 위해서는 이념이나 규칙, 가치판단 등에 있어 유연성을 가지는 박정희의 실용주의적 리더십은 각종 사례를 통해 나타난다. 5·16 직후 부정부패 등으로 처벌하려 했던 삼성 등 재벌 기업들을 특별히 사면하고 그들을 경제개발에 동참시킨 경우라든가, 반민족적·친일 정권이라는 비판을 들으면서 경제개발 자금 획득을 위해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맺었던 경우라든가, 반공을 표방한 군사정권이 7·4 남북 공동성명을 통하여 북한과 협상에 나서 이를 성사시킨 일 등은 더 큰 국가적 목표를 위해서는 이념과 정치적 입장에 관계없이 실용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과학자는 아니었지만 과학과 기술을 중시하는 지도자였다. 또한 내외의 술한 반대를 극복하고 경부고속도로의 건설을 추진 하였는데, 이를 보면 그가 얼마나 실용적인 지도자인지를 알 수 있다. 그는 청와대에 ‘전투상황실’을 설치했고 공식 일정이 없는 날이면 공사현장으로 달려갔다. 특히 불도저 같은 추진력과 현장주의로 포항제철 건설 시에는 현장을 13번이나 찾았다. 또한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부총리가 현장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를 해임시켜 버렸다. 그만큼 그는 현장을 중시한 실사구시의 리더십 소유자였다. 23)

### 3.2.1.2 창조적 리더십

박정희 리더십의 다른 특징은 창조적 리더십이다. 그는 창조적 리더십을 ‘조국 근대화’, ‘새마을 운동’ 등의 사업에 많이 보여주었고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들을 보면서 “하면 된다”의 정신이 범국가적으로 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1962부터 1978년 사이에 한국경제는 9.4%의 고성장을 달성하였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되었다. 특히 ‘새마을 운동’에서 창조적 사고방식이 두드러지는 데 박정희는 “스스로 노력하고 주민 협동을 잘하는 마을은 정부 지원으로 도와주되 노력하지 않거나 협력하지 않는 곳은 돕지 않는다. 이곳이 오랜기간동안 지녀온 의타심을 물리치고 근면자조하는 마을을 만드는 길이다.” 라고 했다. 새마을 운동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농촌을 발전시키자는 것, 그것도 농민 구성원들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운동으로 전개하는 전략적 정책개발이 창조적이며 실시방법에서도 잘하는 마을에게는 시멘트와 철근 등을 추가 지원하는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등 시행 면에서도 매우 독창적이었다. 24)

### 3.2.1.3 위기관리 리더십

23) 안정주, “동아시아 지도자들의 리더십 유형 비교”영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59.

24) 상계서, p.60.



1968년 1월 21일 김신조를 비롯한 북한 무장 남파공작원 31명이 청와대 습격을 기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1월 23일 미국의 군함인 푸에블로호<sup>25)</sup>가 북한지역 해안에서 나포가 되었다. 이후 미국의 닉슨대통령은 1969년 7월 아시아 국가들은 해당국 안보에 대한 우선 방어책임을 담당한다는 “닉슨독트린”을 발표하였다. 이 중요한 정세변화는 박정희로 하여금 1970년 1월 국방부 방문에서 자주국방을 향한 방위산업발전과 국방과학기술 개발에 체계적인 지원을 지시하게 만들었다. 박정희는 1973년 4월 자주적 군사력 건설지시<sup>26)</sup>를 필두로 1974년 1월 군장비발전 계획안 조정 및 그해 2월에는 제1차 전력 증강계획(육곡사업)을 확정한다. 그 후 박정희는 독자적인 방위산업 정책을 시행하는데, 그 방법은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을 함께 발전시킨다는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의 투트랙 추진전략 방법이었다. <sup>27)</sup>

이처럼 북한의 위협과 우방국의 정책변화에 따른 안보불안 발생에 박정희는 자주국방과 육곡사업 확정 등의 대비를 시작한 결과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고 오늘날 국군 현대화의 초석을 다지게 되었다. 시대적 상황은 다르지만 조선시대 재임기간 중 2번씩 외침을 당한 선조와 인조, 일제 식민지를 상황을 맞게된 고종과 6.25전쟁을 겪는 이승만 대통령 시대의 상황과 대비되는 점이라 하겠다.

### 3.2.2 박정희의 개인적, 국가적 리더십

윤종성은 박정희의 개인적 리더십과 국가적 리더십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하였다. 먼저 개인적 리더십 면에서 첫째, 박정희는 개인적 축재를 멀리하는 청렴한 성품(Be)이었다. 한 나라의 경제를 크게 발전시켰으나 그는 싸구려 시계를 차고 다녔고 자식들에게는 어떠한 유산도 남겨주지 않았다.

둘째, 그는 항상 국가발전의 확고한 의지(Do)와 신념, 희생, 헌신의 자세를 보여주었다. 군인정신의 특성이 가미된 ‘하면 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임하였고 이는 자신의 참모들과 국민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셋째, 국가지도자로서 그는 해안과 통찰력, 그리고 치밀한 조직력과 반드시 목표를 이룩하고자 하는 실천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리더십을 가지고 그는 가난한 국가의 현실을 냉철하게 진단하였다. 이렇게 시대적 명제를 인식한 그는 국가발전 과제의 순서를 경제발전, 민주주의, 조국통일에 두었다. 즉 먹고사는 문제를 국가의 최고 과제로 고려한 그는 국가차원의 리더십을 다음과 같이 구사하였다.

---

25)1968년 1월 23일 북한 원산항 앞 공해상(公海上)에서 미국의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Pueblo號)가 북한의 해군초계정에 의해 납치된 사건

26)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02&pn=1&num=10069](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02&pn=1&num=10069)(검색일:2020.10.20.)

27)안정주. 전개서.p.47

첫째, 그는 ‘조국 근대화’ 라는 국가적 목표를 제시하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하면 된다’하면서 국민들의 의욕을 이끌어 내었다. 그는 국민적 공감대를 위해 지식인층에게는 ‘민족중흥’으로 일반 서민에게는 ‘잘 살아 보세’로 설득하고 자연스럽게 동참시키고자 노력했다. 둘째, 박정희는 잘 살아야하는 주체인 국민들이 지녀야할 올바른 마음자세로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가치(Value)'를 제시하고 장려하였다. 이는 이후 새마을 운동의 3대정신으로 발현 되었다. 셋째, 박정희는 목표달성을 위해 경제개발 5개년계획, 수출 제일주의, 중공업 육성, 새마을 운동 등의 국가발전전략(strategy)을 선정하고 우선 순위를 두어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여 추진 하였다. 넷째, 한일협정, 월남파병, 경부 고속도로건설, 포항제철 건립 등 국가적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 하였다. 국가 발전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다른 반대의견이 있어도 신념을 가지고 추진하였다. 다섯째, 그는 인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였다. 그는 자신과 다른 의견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국가발전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과감히 발탁하였다. 그리고 유능한 인재를 발탁한 후 그를 신뢰하고 일을 시켰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해 왔던 남덕우를 재무장관으로 발탁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여섯째, 박정희는 현장(spot)을 매우 중시했다. 포항제철을 공사 중인 시기에는 13번이나 방문했고 경부고속도로건설 시에도 공사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인부들을 막걸리로 격려하였다. 그리고 월남전 전쟁터를 방문, 파병 장병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직접 보고 확인하였으며 매년 해마다 시행되는 정부부서와 지방의 연두순시는 반드시 다닐 정도로 그는 현장을 우선시하는 지도자였다. 일곱째, 그는 평가(evaluation)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예로서 수출 진흥 확대회의 시에는 해외 대사들을 불러 수출유치 결과를 평가했다. 이에 따라 수출실적이 양호한 대사들은 진급했고 미진한 대사들은 좌천되었다. 이처럼 평가를 중시했고 인사원칙을 정하는 기준으로 고려하였다. 여덟째, 그의 의사소통(communication)기술은 매우 뛰어났다. 그의 언어는 간단하고 명확했다. 군더더기가 없는 정확한 언어와 표현을 사용했으며 중요한 내용에 관해서는 강조하여 청중과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정희는 집권 18년 5개월 기간에 걸쳐 연평균 9.3%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였고 1인당 국민소득을 집권 초기 87달러에서 집권 말기에는 1242달러로 14배로 증가시켰다. 연간 수출액은 집권 초기 5430만 달러에서 '1970년도에 10억 달러, 1977년도에는 100억 달러를, 이후 1978년도에는 127억1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이렇게 박정희는 대통령으로서 재임하면서 숫자상으로도 놀라운 경제적 업적을 이룩하였고 세계 사람들은 독일의 발전을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하듯이 박정희의 리더십 하에 달성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한강의 기적”이라 불렀다. 28)

28) 윤종성, 전계서, pp.147-150.

### 3.2.3 박정희 리더십 분석

상기의 박정희 리더십 특징과 그의 개인적, 국가적 리더십을 종합하면 박정희는 국민들에게 “하면 된다(Can do spirit)”의 정신을 일깨워 주어 “잘살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긍정의 리더십을 불어 넣었다.

인재 경영에서 보면 남덕우의 경우에서처럼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던 인사도 국가에 필요하면 폭넓게 등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또한 비서실장을 경제 전문가인 김정렴을 임명한 후 “나는 국방과 외교로 경제를 잘 들여다 볼 시간이 부족하니 당신이 경제문제를 세밀하게 봐 주시오”라고 하며 9년 3개월간 그를 비서실장으로 활용하였다. 포항제철을 만들어 박태준을 사장으로 임명한 후 “세상에서 이 일을 맡을 사람은 당신 한 사람 밖에 없소. 힘들지만 나와 함께 힘을 합쳐 끝까지 함께 해 봅시다” 라고 하였다. 위에서 본 인재활용의 사례들을 통해서 신뢰와 권한 위임의 임파워링 리더십을 찾아볼 수 있다 하겠다. 또한 “우리의 삶은 일순간이지만 조국은 영원하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은 오늘 잘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미래의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면서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동기부여의 리더십을 보여 주었다. 군 출신의 특징을 벗어나지 못해 통치 스타일이나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때로는 권위주의적이었던 그는 반대로 국민들에게는 친밀하게 대해주는 대중 친화적인 지도자였다. 그는 때로는 일반 서민들의 이웃처럼 행동하였다. 대표적인 예로는 그가 농촌을 방문할 때는 농촌의 서민들과 함께 바지를 걷고 모내기를 하고, 일이 끝나면 논두렁에 함께 앉아 막걸리를 마시기도 하였다. 또한 자신이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농촌 서민들과 공감대 형성을 이루었다. 이처럼 소탈하고 대중 친화적인 그의 이미지는 국민들에게 감성적으로 다가갔고 일상생활 속에서 그는 아래와 같이 서민적 생활 태도를 보여주기도 했다. 예를 들어 구명난 런닝셔츠를 입고 다녔고 낡은 허리띠를 사용하였으며 한여름에도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틀지 않았다고 한다.<sup>29)</sup>다. 이러한 점에서 국민들은 박정희를 서민의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처럼 그는 출선수범의, 그리고 국민을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서번트 리더십을 지녔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1968년 1월 21일 북한 남파공작원 31명의 청와대 습격사건, 1968년 1월 23일 미국 군함 푸에블로 호(USS Pueblo AGER-2)의 북한 나포사건, 이후 “닉슨독트린” 발표, 1973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sup>30)</sup> 등 일련의 위기상황에서 정확하면서도 신속한 상황 판단과 의사결정을 한 후

29) 황주홍외, 전게서,p.227

30) 판문점 도끼 살인 사건(板門店-殺人事件, 영어: Korean axe murder incident) 은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인근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조선인민군 군인 30여명이 도끼를 휘둘러 미루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감독하던 주한 미군 장교 2명

우방국과 국제사회의 협조를 얻으면서 국민들의 여론을 모으고 가용한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투사(projection)하여 위기를 조기에 해소 시켰고 오히려 이를 통해 향후 안보 불안 발생에 근본적인 대비를 시작한 결과 오늘날 국군 현대화의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 4. 전환기의 국가 지도자 리더십

### 4.1 전환기의 국가 지도자 리더십 요건.

전환기의 국가 지도자 리더십 요건은 어떤 점이 중요한 가? 먼저 전환기의 국가지도자는 위기에 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기란 속성상 위협과 위험의 의미도 있지만 기회의 의미도 있다. 우리는 오늘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 시켜야 한다. 그것이 시대가 우리에게 부여한 과제이다. 아무리 시대 상황이 어렵더라도 영명한 지도자가 국민의 단합을 이끌어내면 위기는 기회로 반전될 수 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하듯이 오늘날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미래 지향 가치를 가진 지도자가 나올 수 있다. 풀어야 할 과제가 얹히고설켜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지도자의 역할이 크다. 지도자는 오늘의 시대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현재적 대응과 함께 미래까지 생각해서 풀어나가야 한다. 미래의 방향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문제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 한다. 북한의 연이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며 자연재해나 인재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국민안전을 우선해야 한다. 국가지도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로써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은 민심이 불안하고 주어진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 중요하다.<sup>31)</sup> 김호중은 바람직한 지도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이상적 지도자상은 창조적인 개혁 의지를 바탕으로 국가목표를 올바르게 제기하고 국민들의 폭넓은 동의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의욕적으로 그것을 추구하는 민주지향적이며 개혁 지향적인, 아울러 통일과 복지도 중시하는 기능형 선도자이다. 존 F 케네디가 60년대에 쿠바혁명과 소련의 팽창으로 크게 위축된 미국국민에게 뉴프런티어 정신을 외치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활력을 불어넣었던 것처럼 우리의 미래 국가지도자도 민족의 역사 앞에 번영과 복지, 부강과 통일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진취적 기상을 일깨워 주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이 있을 것이다.<sup>32)</sup> 한편으로 한반도 선진화재단에서는 향후의 지도자의 과제

---

을 살해하고 주한 미군 및 대한민국 국군 병력 절대다수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이다. 판문점 사건,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8·18 도끼 만행 등으로도 불린다.

31) 한반도 선진화 재단, “대통령의 조건”, 선진화 정책시리즈 31.p.29

32) 김호중, “90년대 국가지도자의 조건과 리더십”, 세미나 중계.P.45

를 첫째,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처,

둘째, 경제문제에 대한 해법 제시 셋째, 공동체발전에 대한 대안 제시, 넷째, 국민 안전을 위한 대안을 마련, 다섯째 사회변화에 적극 대처 등 다섯가지로 제시하였다.<sup>33)</sup>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초유의 강력한 위협 앞에 많은 혼란과 갈등의 시기를 겪고 있다. 오랫동안의 국제경제 침체기에 코로나 바이러스 의 확산으로 인해 세계의 무역과 교류는 단절되어 특별한 부존자원 없이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 오고 있다. 여기에 상존위협인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큰 ICBM<sup>34)</sup>과 4000~5000급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북극성-4형 SLBM<sup>35)</sup>을 선보이면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안보를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미래 국가지도자들은 통일이 될 때까지 상존하는 북한의 위협과 통일 이후에도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에서 발생 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에서 위기를 관리하고 해결하며 나아가서는 국민통합과 사기진작을 위한 고도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박정희의 리더십에서 그런 예를 우리는 볼 수 있다.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에 적절한 대응과 자주국방 대비로 이를 막아 내면서 때로는 7·4 남북공동성명등 북한과 대화에도 나섰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한 경제발전 계획 제시, 새마을 운동을 통한 공동체 발전 대한 제시 등의 사례를 보았다. 그러나 국가발전은 지도자 한사람의 노력으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길에는 고통을 감내하고 미래로 가는 길에 동참해 나갈 수 있는 구성원, 즉 팔로워로서의 국민들의 의식수준과 역할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

33) 한반도 선진화 재단, 전게서.p.33

34) 대륙간탄도유도탄(大陸間彈道誘導彈, 영어: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문화어: 대륙간탄도미싸일)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大陸間彈道-)은 사거리가 5,500 km 이상인 탄도유도탄으로, 주로 핵탄두를 탑재하기 위하여 개발되는 탄도 유도탄이다. 또한 기존의 화학 무기와 생물학적 무기도 대륙간 탄도 유도탄을 통해서 탑재 될 수 있다. ICBM을 운영하는 기술을 가진 국가들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35) 잠수함발사 탄도유도탄(영어: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SLBM)은 탄도유도탄을 전략 핵 잠수함에서 발사가 가능하도록 개량한 탄도유도탄이다.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물이 본국보다 해안에서 더 가까울 때에는 잠수함을 해안에 근접시켜 발사할 수 있으며, 조기에 모든 미사일을 탐지하기가 어렵다는 장점이 있다. 전략핵잠수함은 미소의 냉전 시기 핵 균형을 이룬 근본이었다.

## 5. 결론

우리는 2020년 한해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금까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상황을 겪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산업, 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영향을 받지 않은 분야가 없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위협은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미래 국가의 지도자의 역할은 국가발전과 국민복지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우리나라 역사에서의 성공과 실패의 지도자 사례를 제시 하였다. 물론 그 성공과 실패가 지도자 한 사람의 문제로 인한 결과라고는 전적으로는 말 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시대의 국내,외 상황과 여건에 좌우 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지도자의 국가발전에 대한 마음가짐과 국민에 대한 봉사의 자세에 대해서 논해 보았다.

그런 관점에서 미래의 국가 지도자는 지도자의 기능<sup>36)</sup> 면에서 국가경영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먼저 진단적 기능으로 국가의 현 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혼란과 위기가 나타날 때 그 이유를 규명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확히 진단하여야 한다. 진단이 잘못되면 문제의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국가는 오히려 오류와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처방적 기능으로 지도자는 국가가 마주한 혼란과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맞는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셋째로는 동원적 기능으로 지도자는 처방한 계획에 대해 국민의 지지를 획득한 후 국민의 동참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동원적 기능에는 21세기 4차산업과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이후에 새롭게 부각되는 신성장 분야 등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미래의 바람직한 국가지도자상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해보고자 한다. 미래의 국가지도자는 첫째, 변화하는 국내외 상황에서 진단적, 처방적, 동원적 지도자 기능을 잘 수행할 능력이 있는 지도자이어야 한다. 박정희는 못사는 나라의 현상을 진단하고 경제개발계획, 새마을 운동이라는 처방을 내리고 역량을 총동원하여 국가를 발전시켰다. 둘째, 어떤 역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민족과 국가에 헌신하는 지도자여야 한다. 지도자에게는 많은 역경이 다가온다. 간디, 넬슨 만델라, 김구 등의 훌륭한 지도자들에게는 수많은 역경과 시련이 다가 왔었지만 그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한 일념으로 그 역경을 이겨 냈다 셋째, 미래에 대한 해안으로 비전을 제시하는 통찰력을 지녀야 한다. 지도자는 국가 백년대계의 비전을 설계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박정희는 ‘잘 살아보세’의 비전을 제시하였고 그것은 국민에 의해 이루어졌다. 넷째, 위기를 호기를 바꾸어 국가를

---

36) 황주홍외, 전게서,p.51

발전시킬 능력을 보유한 지도자이어야 한다. 인조와 선조, 고종과 이승만 사례와 같은 지도자의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즉 지도자는 국내, 외 정세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위기를 극복, 국가의 발전으로 연결 시켜야 한다.

본고를 마무리 지으면서 한 유명 가수가 “왕도 대통령도 목숨 건 적 있나, 국민이 이 나라 지켰다”<sup>37)</sup>는 말이 생각 난다. 앞에서 제시한 우리 역사 속의 성공과 실패의 지도자들도 모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자 하는 마음은 다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지도자에 따라서 너무나 다르게 나타났다. 미래의 대한민국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진정으로 목숨을 거는 지도자가 많이 탄생되어 그 지도자들의 리더십으로 국가가 발전하고 그 결과 세계사에 우뚝 서는 조국 ‘대한민국’을 기대하여 본다.

---

37) <https://news.joins.com/article/23884618>(검색일:2020.10.19.)

## 참고문헌

1. 김호중, “90년대 국가지도자의 조건과 리더십”, 세미나 중계
2. 안정주, “동아시아 지도자들의 리더십 유형 비교” 영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3. 윤종성, “대통령 국정과제 수행 리더십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 이진호, 『지도자론,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과 리더십』 (아담, 2011)
5. 정찬권, “정치지도자의 국가위기관리 리더십에 관한 연구”, 『국가위기관리학회보』, 제2권 제1호(2010.03)
6. 한반도 선진화 재단, “대통령의 조건”, 선진화 정책시리즈
7. 황주홍외, 『지도자론, 한국의 리더와 리더십』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2)
8. [https://ko.wikipedia.org/wiki/9.11\\_%ED%85%8C%EB%9F%AC](https://ko.wikipedia.org/wiki/9.11_%ED%85%8C%EB%9F%AC)(검색일 : 2020.10.1.)
9. <https://www.yna.co.kr/view/AKR20171215059700002>(검색일:2020:10.18)
19.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66851&C\\_CC=AC](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66851&C_CC=AC)(검색일: 2020.10.18.)
11. [https://search.daum.net/search?DA=DKL&https\\_on=on&q=%EA%B5%AD%EA%B0%80%EB%B3%84%201%EC%9D%B8%EB%8B%B9%20GDP%20%EC%88%9C%EC%9C%84&w=tot&ie\\_redirect=Y](https://search.daum.net/search?DA=DKL&https_on=on&q=%EA%B5%AD%EA%B0%80%EB%B3%84%201%EC%9D%B8%EB%8B%B9%20GDP%20%EC%88%9C%EC%9C%84&w=tot&ie_redirect=Y)(검색일: 2020.10.18.)



<abstract>

## Research on national leader's leadership and national development

Kim, Jung Su (Yeungnam University)

The world of 2020 is experiencing an unprecedented chaos caused by the massive Corona-19 pandemic, and the end of the chaos is still unpredictable. Korea also suffered a lot of damage in politics, economy, society, culture, medical care, education, employment, and along with social distancing,

an abnormal life pattern that is too different from the normal life before the coronavirus outbreak continues.

There are many possible threats to the country in which we live today, wars and terrorism caused by the invasion of the enemy can be representative among them, also various disasters, major safety accidents, and infectious diseases such as the present Covid-19 can be included. It is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that responds appropriately and promptly to these threats, and it can be said that the leadership of the national leader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victory or defeat of the crisis management.

There were many leaders in our history, and the rise and fall of the country existed according to the leadership of those leaders. Considering the national leader's leadership that transforms the crisis into an opportunity and develops the country in a transition period in which the global confusion caused by the massive COVID-19 pandemic continues. Also we look

forward to fatherland Korea, a country that stands tall in world history.

Keywords: leader, leadership, national development, transition period

# 군 복무기간 단축이 초급간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과 그 해결방안

김 군 기<sup>1)</sup> 나 유 석<sup>2)</sup>

---

## 순 서

1. 서론
  2. 군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논란
  3. 높은 병력순환율에 따른 초급간부 스트레스 분석
  4. 군 초급간부 스트레스 해결방안
  5. 결론
- 

## 요 약

국방부는 ‘병 복무기간 6개월 단축계획’을 2007년 7월에 발표하였다. 2020년 6월 15일 입대하는 병사부터는 육군 복무 기간을 기준으로 18개월만 복무하게 된다. 군 복무기간 단축은 현대전 양상의 변화에 발맞춰 과학기술군으로 정예화 하는 국방개혁의 일환이다. 국방부는 병사들이 전투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비전투 임무를 최소화 하는 등 종합적인 개혁을 통해 전력은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특기의 경우 숙련 병사의 활용기간 단축으로 인해 부대 임무수행이 곤란하게 됨으로서 전투력 저하가 우려된다. 높은 병력순환율에 따른 낮은 직무숙련도가 고스란히 초급간부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군 복무기간 단축으로 생기는 초급간부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고찰하고 분석된 결과를 기초로 스트레스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키워드 :** 국방개혁, 병력순환율, 직무숙련도, 초급간부 스트레스, S-OJT

---

1) 영남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kkkim@ynu.ac.kr

2) 육군 칠성부대 수색소대장, fkrms12@naver.com

## 1. 서 론

### 1. 연구의 목적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전군지휘관 회의('18.7.27.)에서 “국방개혁2.0의 비전과 목표는 명확합니다.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강한 군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국방부는 7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국방개혁 2.0<sup>3)</sup>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확정했다. 그 내용에는 지상군을 11만 8000명으로 줄이고 병사 복무 기간을 2~3개월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육군의 전체 사단은 현행 39개에서 33개로 조정될 예정이다. 이 중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는 최전방 사단은 11개에서 9개로 약 20% 줄어들게 된다. 사단별 담당 전선이 약 1.2배 정도 증가하는 셈이다. 병사들의 숙련도도 60% 이상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병 복무 기간은 21개월에서 2021년 12월까지 18개월로 줄어들게 된다. 야전부대의 한 지휘관은 “현재에도 입영 대기 및 훈련기간(5주), 이병 복무기간(4개월), 휴가기간(약 1개월) 등을 제외하면 병사가 실제 전투력을 발휘할 기간은 15개월 남짓.”이라고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들면 이들을 데리고 전투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또 다른 육군 지휘관은 “현재 군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도움병사 및 배려병사는 통계상 약 10% 정도라고 하지만 체감상 25% 되는 것 같다.”며 군 복무기간 단축과 병력감축을 결정했을 때 이 같은 상황을 고려했는지 의문이라고도 말했다.

과거부터 이어진 군 복무기간 단축은 ‘국방개혁 2.0’과 같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요구되어 질 것이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육군의 경우 구조적 특성상 병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일부 특기의 경우 군 복무기간 단축은 부대 임무 수행에 차질을 야기할 수 있다. 군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지속되는 반면 복무기간 단축 시 숙련 병사의 활용기간 단축으로 인해 부대 임무수행이 곤란하게 됨으로서 전투력 저하가 우려된다. 높은 병력순환율에 따라 병사들의 숙련도는 점점 더 낮아질 것이고 그들을 관리하는 육군 초급간부의 스트레스 또한 여러 방면에서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군 복무기간 단축으로 생기는 초급간부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고찰하고

---

3) 국방부는 ‘국방개혁2.0기본계획’ 수립 시 3대 추진 기조 중의 하나로 “자원제약 극복과 미래 전장환경 적응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 적극 활용”을 선정하여, 우리 국가 수준과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선진화된 국방운영, 병영문화, 방위사업을 구현하기 위한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과학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반영하기 위한 스마트국방을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다.

분석된 결과를 기초로 스트레스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논문에서는 군 복무기간 단축이 육군 초급간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스트레스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군 복무기간은 그동안 총 8차례 조정되었다.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시행된 군 복무기간 단축을 ‘국방개혁 2.0’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군 복무기간 조정 정책결정 시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이었으며, 이 중 어떤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해 보았다. 또 그에 따른 육군 초급간부의 스트레스의 여러 가지 요인을 찾아내고 해결방안까지 모색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의무복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역병과 간부 즉 소위, 중위 등과 같은 육군 초급간부만을 연구범위로 한정하였다.

## 2. 군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논란

### 2.1 병역과 군 복무기간

가. 병역의 개념 및 의무

#### 1) 병역의 개념

병역이란 ‘국방력 구성에 필요한 병력을 충원하기 위한 국민의 인적 부담’이고, ‘국방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의 일원으로 일정기간을 군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한다.<sup>4)</sup> 또한, 병역은 국가의 복무명령이 있을 경우 국민은 군의 구성원으로 군에 복무할 의무를 뜻한다. 즉 이는 국방목표 달성을 위해 국방력 구성에 필요한 병역을 국민의 일원으로 일정기간 군에 복무하는 것이다.

그러나 병역 의무는 단순한 노동력 제공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기반이나 삶의 공동체인 국가에 대한 충성의 의무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병역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바탕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 및 육체적 능력 모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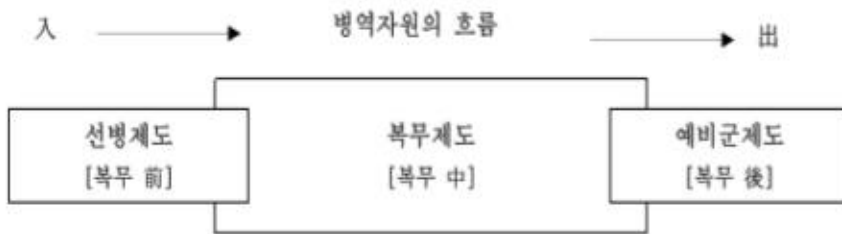
4) 명송식, 「兵 복무기간 조정 정책결정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대학원, 2013. p.20

를 국가에 헌신한다는 숭고한 정신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민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sup>5)</sup>

병역의 광의의 개념은 군사력 구성을 위한 국민의 인적부담으로 보는 견해로, 실정법상 현역복무자 이외에도 제1국민 역, 징집대체자인 제2국민 역, 과거 병역제도의 하나였던 방위소집 제도 등도 포함되며, 비군사적 분야에서 국가 및 사회봉사 활동이나 경제발전을 위해 산업체를 지원하는 요원도 병역에 포함한다는 개념이다. 그 이유는 실정법상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이나 산업체에 근무하는 산업기능 요원도 국방의무를 이행하는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요원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 헌법 제 39조 제 1항의 ‘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또, 제2항에서도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병역의무의 이행과정을 그림으로 도표화 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1> 병역의무 이행 과정<sup>6)</sup>



대한민국 국민 남성은 18세부터 제1국민 역에 편입되며 이때부터 징병검사 대상자가 된다. 선병은 18세에 도달한 병역의무 대상자가 특기나 학력, 가정 등 제반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징병검사를 통해 군 복무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확인하여 소집 통보서를 발령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이 선병과정은 징병을 선발하여 군에 입대시키는 중요한 업무로 병역의무 이행방향이 결정되는 시기이고, 병역 의무자 또한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며 병역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과정으로 병무행정의 기본이 된다. 병역의무 대상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해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및 일시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sup>7)</sup>

5) 김두성. 「한국 병역제도의 결정요인에 관한 역사적 고찰」. 한남대학교 대학원. 2002. p.25

6) 김두성. 「한국 병역제도의 결정요인에 관한 역사적 고찰」. 한남대학교 대학원. 2002. p.22

징병검사 시에는 신체검사, 사회 전공분야 확인, 인성검사 등을 실시하며 이는 소집장병의 체격 검정과 건강 정도, 군의 편제구조상 소요되는 병과 및 주특기 등을 분류하기 위해 병행 검사한다. 인성검사는 외관상 식별되지 아니하고 본인도 자각 증세를 느끼지 못하는 정신질환, 이상성격 등을 식별하기 위함이며, 이 인성검사 결과는 본인이 근무하게 될 실무부대에 통보되어 병력관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된다.<sup>8)</sup>

## 2) 병역 의무

국민의 기본적 의무이며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는, 병역법 제3조 제 3항에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병역의 참여를 금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병역의무는 신성한 의무로 국민의 존엄성을 의미하며, 과거에도 노예나 천민은 병역의무를 행사할 수 없었다.

병역의무는 국가에서 부여하는 법적 의무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하고 고도의 충성심과 윤리의식이 내재되어 있어야만 복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징집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희망한다 해서 모두 그 의무를 이행 할 수 없는 윤리성이 내재되어 있다. 또, 자신이 의무를 이행 할 수 없다고 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금이나 대가를 지불하고 대신하여 입영시키거나 복무할 수 없다. 즉, 병역의무 자체를 경제적 부담 또는 대리입영 시킬 수 없는 특징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책무라는 윤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이는 군 복무를 필한 자들에게 존경과 찬사를 보내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병역의무는 인적부담으로 이는 국방력을 구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인원들에게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병역법에 제한이 없는 한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부여되는 의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특징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sup>9)</sup>

### 나. 군 복무기간

#### 1) 군 복무기간의 의미

군 복무기간이라 함은 만 19세 이상의 남자가 징병검사 결과 현역복무, 전환복

---

7) 병역법 제11조 1항

8) 명송식. 「兵 복무기간 조정 정책결정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광운대 대학원. 2013. p.22

9) 정주성. 「한국 병역정책의 바람직한 진로」.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3. p.153

무 또는 대체복무로 판정되어 입영통지서를 받고 입대한 날부터 전역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군 복무기간은 병역법 제 18조 제 2항에 명시되어있다. 본래 군 복무기간은 법령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나 국방상 필요에 의거해 국방부장관이 건의하고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 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다.

현재 현역 병사의 의무복무를 3개월까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이 9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0월 전역예정 병사부터 제대가 앞당겨진다. 정부는 4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방부는 지난 7월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복무기간 단축안이 의결됨에 따라, 육군·해병대·의무경찰·상근예비역은 21개월에서 18개월, 해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은 23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 상근예비역과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 요원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복무기간이 줄어든다. 이것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도표가 나타나 있다.

<표 2-2> 군 복무기간 단축

□ 육군·해병대 병/의무경관/상근예비역

입대일자		단축일수
~부터	~까지	
2017-01-03	2017-01-16	1일
2017-01-17	2017-01-30	2일
2017-01-31	2017-02-13	3일
2017-02-14	2017-02-27	4일
2017-02-28	2017-03-13	5일
2017-03-14	2017-03-27	6일
2017-03-28	2017-04-10	7일
2017-04-11	2017-04-24	8일
2017-04-25	2017-05-08	9일
2017-05-09	2017-05-22	10일
2017-05-23	2017-06-05	11일
2017-06-06	2017-06-19	12일
2017-06-20	2017-07-03	13일
2017-07-04	2017-07-17	14일
2017-07-18	2017-08-01	15일
2017-08-02	2017-08-14	16일
2017-08-15	2017-08-28	17일
2017-08-29	2017-09-11	18일
2017-09-12	2017-09-25	19일
2017-09-26	2017-10-09	20일
2017-10-10	2017-10-23	21일
2017-10-24	2017-11-06	22일
2017-11-07	2017-11-20	23일
2017-11-21	2017-12-04	24일
2017-12-05	2017-12-18	25일
2017-12-19	2018-01-01	26일
2018-01-02	2018-01-15	27일
2018-01-16	2018-01-29	28일
2018-01-30	2018-02-12	29일
2018-02-13	2018-02-26	30일

입대일자		단축일수
~부터	~까지	
2018-02-27	2018-03-12	31일
2018-03-13	2018-03-26	32일
2018-03-27	2018-04-09	33일
2018-04-10	2018-04-23	34일
2018-04-24	2018-05-07	35일
2018-05-08	2018-05-21	36일
2018-05-22	2018-06-04	37일
2018-06-05	2018-06-18	38일
2018-06-19	2018-07-02	39일
2018-07-03	2018-07-16	40일
2018-07-17	2018-07-30	41일
2018-07-31	2018-08-13	42일
2018-08-14	2018-08-27	43일
2018-08-28	2018-09-10	44일
2018-09-11	2018-09-24	45일
2018-09-25	2018-10-08	46일
2018-10-09	2018-10-22	47일
2018-10-23	2018-11-05	48일
2018-11-06	2018-11-19	49일
2018-11-20	2018-12-03	50일
2018-12-04	2018-12-17	51일
2018-12-18	2019-01-01	52일
2019-01-02	2019-01-14	53일
2019-01-15	2019-01-28	54일
2019-01-29	2019-02-11	55일
2019-02-12	2019-02-25	56일
2019-02-26	2019-03-11	57일
2019-03-12	2019-03-25	58일
2019-03-26	2019-04-08	59일
2019-04-09	2019-04-22	60일

입대일자		단축일수
~부터	~까지	
2019-04-23	2019-05-06	61일
2019-05-07	2019-05-20	62일
2019-05-21	2019-06-03	63일
2019-06-04	2019-06-17	64일
2019-06-18	2019-07-01	65일
2019-07-02	2019-07-15	66일
2019-07-16	2019-07-29	67일
2019-07-30	2019-08-12	68일
2019-08-13	2019-08-26	69일
2019-08-27	2019-09-09	70일
2019-09-10	2019-09-23	71일
2019-09-24	2019-10-07	72일
2019-10-08	2019-10-21	73일
2019-10-22	2019-11-04	74일
2019-11-05	2019-11-18	75일
2019-11-19	2019-12-02	76일
2019-12-03	2019-12-16	77일
2019-12-17	2019-12-30	78일
2019-12-31	2020-01-13	79일
2020-01-14	2020-01-27	80일
2020-01-28	2020-02-10	81일
2020-02-11	2020-02-24	82일
2020-02-25	2020-03-09	83일
2020-03-10	2020-03-23	84일
2020-03-24	2020-04-06	85일
2020-04-07	2020-04-20	86일
2020-04-21	2020-05-04	87일
2020-05-05	2020-05-18	88일
2020-05-19	2020-06-01	89일
2020-06-02	2020-06-15	90일

출처 : 병무청, 2018

## 2) 군 복무기간의 중요성

현역병 복무기간은 한 국가의 병역정책과 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군 복무기간 단축은 단순히 국민의 병역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차원의 효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책 변수들과 상호 연쇄 반응을 일으킴으로써, 현행 병역제도의 개선과 미래 전쟁에 대비한 군 구조의 개편 방향에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병역의무 이행은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희생이지만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할 사람의 입장에서는 의무의 경감을 요구하는 것도 당연한 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군 복무기간 조정 요구는 향후에도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언제든지 논쟁이 될 수 있는 쟁점이므로, 앞으로 어떻게 지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한 가운데 올바른 병역정책을 결정해야 하고 더 이상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거나 무분별하게 거론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sup>10)</sup>

## 2.2 군 복무기간 단축배경 및 논란

### 가. 군 복무기간 단축배경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이 10월 1일 전역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단축기간은 3개월이며, 공군만 2개월이다. 군 병력은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되고, 이에 비례해 군 장성수도 76명(17%)으로 줄어든다. 국방부는 7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국방개혁 2.0 기본방향’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 했다. 현재 61만 8천 명인 상비 병력을 육군에서 11만 8천명 감축해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병력을 50만 명으로 줄이는 방안은 애초에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안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현역병 복무 기간을 4개월 줄이되 2개월씩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정책을 제시하였다. 인력 집중형인 군 구조를 디지털 정보과학 기술군으로 전환하면 군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단계적으로 4개월까지 단축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특히, 육군의 경우 복무 기간을 2개월 단축할 경우 대학 재학생의 경우 4학기만 휴학한 뒤 곧바로 복학할 수 있어 사회 진출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이다.<sup>11)</sup>

### <표 2-3> 국방개혁 2.0 주요내용

10) 명송식, 「兵 복무기간 조정 정책결정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대학원, 2013. p.32

11) 이훈, 「군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효율성 분석」,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2004. p.41

군구조	국방운영 분야	병영문화 분야	방위사업 분야
지상작전사령부 내 년1일부로 창설	장군 436명에서 360명으로 감축	관할관 확인조치 권, 영창제도 폐지	비리행위 가중처 벌
공군 경찰비행단 창설	문민기준 전역 후 2~7년	병장 월급 4만 6천 원에서 67만 6천원 으로 인상	획득전문교육기 관 설립 등 전문 인력 양성
킬체인, KAMD, 대 량응징보복 등 3축 체제 추진	여군 5.5%에서 8.8%로 확대	일과 후 휴대폰 허 용, 외박 확대	절충교육 제도개 선
병력 61만 8천명 에서 50만 명으로 감 축	예비군 동원기간 4 년에서 3년으로 축 소	제초작업 등 잡무 민간용역으로	방산진흥원 신 설, 방산진흥법 제정 추진
민간인력 5%에서 10%로 확대	합참 직위 육:해:공 1:1:1 비율로	의무후송헬기 8대 배치 등 응급조치 강화	

출처 : 국방부, 2018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2011년 3월 한 해 전 일어난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 등 을 이유로 병력 감축 목표를 52만 2천명으로 늘린 바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상 비병력은 줄이되 국방 업무의 민간인 비중을 5%에서 10%로 두 배 늘려 이들이 비 전투분야의 군인 직위를 대체하도록 하고, 그동안 비전투분야에 근무하던 군인 들은 전투부대로 전환해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체 예비군 규모 는 275만 명으로 유지하되, 동원 예비군은 현재 130만 명에서 95만 명으로 줄어 들었다.

군 복무기간 단축의 변화를 살펴보면 병역 외부환경과 내부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병역 외부환경은 북핵 등 안보불안 요인과 주한미군 재배치 등 한국군의 독자적인 안보부담 증대 및 세계 경제의 불투명 등으로 단기간 내 전력 투자비 대 폭 증액이 필수적이다.<sup>12)</sup> 또 어려운 안보, 국방환경, 인구 구조적 특성상 청소년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학력화 추세로 군 인력 획득 환경의 변화, 첨단 군사 과 학기술의 발전으로 미래 전장양상 변화 및 우수 숙련 병력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다. 국민의 가치관에서 병역이 낮게 평가되고 형평성 및 선택성이 강조 되고 있고, 그 리고 부조리에 매우 민감한 청소년의 태도 등은 안보 국방 환경상 병력 감축이 어

12) 이훈, 「군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효율성 분석」,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2004. p.42

려운 가운데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환경 개선이 필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병역 내부환경은 병역 제도와 병력 수급현황을 주로 말한다. 현역 복무제도는 위에서 보았듯이 국민부담 완화 차원에서 복무기간을 지속적으로 단축시켜왔다. 형태별 복무부담 수준이 대체 복무제도에 비해 현역 복무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형평성과 효율성 등 이념 간 상충이 지속되어 국민의식도 병역 형평성, 병역 비리에 민감한 실정이다. 입영대상자의 병역 의무 기피성향이 강하고 병역제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대부분 국민들이 병역제도에 형평성 없음(56%), 여건이 된다면 병역기피를 원함(79%), 대체복무 제도의 다양성으로 인한 비리발생 개연성 인식(56%)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sup>13)</sup>

군 복무기간 단축은 군 창설 이래 점진적으로 단축되어 왔는데 단축기간이 파격적이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국방안보 특성상의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었고 이제는 정보, 과학군의 달성을 위해 무기체계 및 장비를 원활하게 운용하는 우수인력 확보가 급선무로 현 안보상황과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지 않는 한 남북한 군사력 감축과 더불어 심사숙고해서 군 복무기간 단축은 시대적 변화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 나. 군 복무기간 단축 논란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거 각 정당의 단골 공약은 군 복무기간 단축이었다. 90년대까지는 병역자원이 풍부하였고 군 복무기간도 지금보다 약 6개월 이상 길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군 복무기간이 1개월 단축될 경우 전체 군 병력은 약 1만 명 정도가 더 필요<sup>14)</sup>하게 되는데 병역자원이 풍부한 잉여자원이 많았던 이때까지는 복무기간 단축은 추진이 가능한 공약이었다.

하지만 그 이후 사회변화에 따른 저 출산 문제는 이 정책에 많은 논란을 불러오게 되었다. 미혼여성의 증가, 맞벌이 부부 증가 및 출산 기피현상 등 2000년도 이후 사회현상들이 출산율을 급격히 감소시켰고 이에 따라 미래 병역자원 감소 예측으로 2009년부터 군 복무기간 단축안(육군 18개우러) 재검토에 대해서 국방부, 국회, 언론에서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게 되었는데, 현재 군 복무기간 단축이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군 복무기간 단축 방안은 올 상반기 동안만 하더라도 임기 중 시행이 어렵다는 예상이 나왔었다. 북핵문제와 국제정세의 변화와 기무사 존속 논란

13) 이훈. 「군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효율성 분석」.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2004. p.42

14) 2010.12.22. 국방부 보도자료 「군 복무기간 21개월로 확정」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찬반 양론이 위에 표에 보이는 것과 같이 팽팽히 맞섰기 때문이다.

이 사항에 대해 현재 찬성과 반대 입장이 나타나고 있는데 정리하면 다음 장의 <표 2-4>와 같다.

<표 2-4.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의 찬·반 입장><sup>15)</sup>

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건이 허락될 경우 국민의 병역의무부담을 완화해야 한다.</li> <li>● 해군 및 공군의 경우 병사획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li> <li>● 군인의 숫자가 전투력 측정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li> </ul>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무기간 단축 시 숙련병의 활용기간이 짧아져 전투력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li> <li>● 복무기간이 짧아지면 특정 임무 및 특기분야의 기술과 기능 발휘가 어려워진다.</li> <li>● 병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육군의 경우, 부대 임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li> </ul>

복무기간 단축을 반대하는 사람은 적어도 국방정책만큼은 포폴리즘에 영합되지 않아야 하며, 군사력 감축이라는 우려를 이유로 내세웠다. 이와는 달리 복무기간 단축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전투력이 군인의 숫자만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라며 국방력 강화를 위한 후속방안이 마련된다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분단조국이라는 현실 앞에서 병역 의무를 짊어지고 있는 젊은이들을 위한 정책이 국민 모두의 폭 넓은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 하루 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3. 높은 병력순환율에 따른 초급간부 스트레스 분석

#### 1. 스트레스

15) 김종철. 「兵役政策의 衡平性과 效率性 提高方案에 한 研究」.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2011. P.75

## 가. 스트레스의 개념

스트레스는 라틴어 “잡아끌다”라는 의미를 가진 stringere에서 유래되어 14세기에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17세기에는 곤란, 역경, 고통, 또는 고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18세기 후반부터는 사람의 신체기관이나 정신력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힘, 압력, 긴장 및 노력의 정도가 강한 효과로 인식되었다.<sup>16)</sup>

스트레스는 생리학자 Cannon(1914)이 최초로 명명한 용어로 심리학, 사회학, 정신 병리학과 교육학 등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며, 이후 Selye(1956)의 생활스트레스에 기원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는 ‘개인의 적응이 필요한 어떠한 자극, 사건, 상황, 사람 또는 대상’을 스트레스 요인이라 하고, ‘그 자극을 받았을 때 이에 적응하는 개인의 생리적, 심리적, 형태적 반응’을 스트레스라고 정의한다. 스트레스는 인간의 신체적, 심리적 적응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이다.<sup>17)</sup> 스트레스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지만, Sorensen(1993)에 의하면 크게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 역동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스트레스 등 3가지 시각으로 정리할 수 있다.<sup>18)</sup>

첫째,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는 비교적 초기의 개념으로 신체적, 생리적, 감정적 또는 행동적 평형 상태의 붕괴나 변화에 대해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반응으로 정의한다(Sorensen, 1993). 또한 적응을 요구하는 모든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보는 입장으로 스트레스를 종적 변인으로 이야기한다(Selye, 1982). 그러나 외부 사건에 대해 반응만 하는 인간을 수동적인 존재로 보고 있으며,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둘째,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는 심리학자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보는 개념으로 행동주의 이론에 기초하여 개인을 부정적으로 자극하는 환경요인을 스트레스로 보는 입장으로 스트레스를 독립변인으로 본다(Cox, 1991). 이는 각 개인에게 유해한 환경이나 생활 사건이 갖는 객관적인 스트레스 정도를 규명하고자 하였으나 같은 스트레스라도 개인차 즉, 개인의 지각, 주관, 대처능력의 정도에 따라 느끼는 수준과 반응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셋째, 역동적 상호작용으로서 스트레스는 상황에 대한 주관적 지각에 의해 변화하는 과정으로 보고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적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인이 가지

---

16) 조현우. 「육군 초급간부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직무만족도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2013. p.13

17) 이남순. 「군 병사의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평택대학교 대학원. 2010. p.36

18) 최유경. 「애니어그램 성격유형에 따른 유아교사들의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대처 방식」.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2009. p.25

고 있는 자원의 한계를 넘어서 자신의 안녕을 위협한다고 평가되는 개인의 환경의 역동적 관계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과정으로 해석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단지 스트레스 앞에 무기력해지는 존재가 아니라 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대처행동을 하며, 스트레스의 문제는 스트레스의 경험여부가 아닌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해 나가느냐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sup>19)</sup>

#### 나. 스트레스 대처 방식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은 다양하여 각 개인의 대처방식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스트레스 대처가 중요한 이유는 스트레스 자체가 부정적 혹은 문제행동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그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가 매개되어 개인의 적응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생각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이다.

즉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똑같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해도 반응은 다르게 나타난다. 어떤사람은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서 스트레스를 내면화 시키면 편두통으로 발전되기도 하며, 또한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므로써 긴장을 외면화시키기도 한다.<sup>20)</sup> 이는 스트레스를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정도에는 개인차가 어느 정도 존재함을 의미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의 정도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적정한 대처방식에 따라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sup>21)</sup>

스트레스 대처 방식 유형은 <표 3-1>과 같이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다. 많은 스트레스 대처 방식 중에서도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대처방식을 문제 중심적 대처, 정서 완화적 대처, 소망적 사고 대처,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로 분류하였다.

문제 중심적 대처는 스트레스 유발 상황을 만든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과 환경 그 자체를 바꾸려는 즉, 스트레스의 근원에 작용하는 노력이다.

정서 완화적 대처는 스트레스와 관련되거나 스트레스로부터 초래되는 감정 상태를 통제하려는 노력으로 정서적 고통의 조절을 통해 삶과 환경의 관계에 변화를 가져 오려는 노력을 일컫는다. 소망적 사고 대처는 스트레스 유발 상황이나 사건과 거리를 두고 바람직한 상황을 생각하거나 상상함으로써 대처하는 방식을 말한다.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방식은 스트레스 사건이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누군가의 도

19) 최유경. 「애니어그램 성격유형에 따른 유아교사들의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대처 방식」. 숙명여대 교유대학원. 2009. p.26

20) 양재도. 「육군 간부의 스트레스 대처, 회복탄력성과 군 생활 적응과의 관계 연구」. 배재대학교 교육대학원. 2016. p.22

21) 반자검. 「한국과 중국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요인 및 대처방식에 관한 비교」. 우석대학교 대학원. 2010. 37

움을 요청하는 대처방식이다.<sup>22)</sup>

이 네 가지 대처방식들 중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대처 노력이 외부로 투여되는 문제 중심적 대처와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는 적극적 대처방식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자신의 감정이나 사고 등 내부로 투여되는 정서 완화적 대처와 소망적 사고 대처는 소극적 대처로 볼 수 있다.<sup>23)</sup>

<표 3-1. 스트레스 대처 유형 분류><sup>24)</sup>

학 자	스트레스 대처 유형
Lazarus & Folkman(1984)	문제 중심적 대처, 정서 중심적 대처
Billings & Moos(1981)	문제 지향적 대처, 정서 지향적 대처, 평가 지향적 대처
Pearlin & chooler(1976)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반응, 의미를 변화시키려는 반응
Brown & Heath(1984)	회피대처, 비회피 대처
Pargament(1997)	자기중심적 대처유형, 의존적 대처유형, 협력적 대처유형

## 2. 높은 병력순환율

### 가. 육군병의 최소 복무기간

육군병의 최소 복무기간은 개인측면 및 조직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도출되었다. 개인측면의 측정은 복무기간별 임무수행도, 숙련 기간에 대한 계층별 인식 등에 중점을 두었고, 조직측면의 측정은 숙련병 구성비, 병력순환

22) 양재도. 「육군 간부의 스트레스 대처, 회복탄력성과 군 생활 적응과의 관계 연구」. 배재대학교 교육대학원. 2016. p.23

23) 장경문.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심리적 성장환경의 관계」. 한국청소년학회. 2003. p.147

24) 김성중. 「병사의 스트레스에 대한 종교적 대처가 군 적응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목회상담적 접근」. 총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을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조직측면의 변수인 숙련병 구성비 및 병력순환율은 부대 운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변수이다. 즉, 숙련병을 일정수준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병력순환율이 너무 높을 경우 부대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유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숙련병 구성비 및 병력순환율의 계산은 신 고참병의 구성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상태를 가정하여 자대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하였다.<sup>25)</sup>

각 병과별 개인별 숙련수준 및 상급수준을 보면 <표 3-2>와 같이 보병의 경우 9개월에 숙련수준에 도달하며, 숙련도는 그 이후에도 계속 상승하다가 16개월 이후에는 상급수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병의 경우에는 11개월에 숙련이 되며, 상급수준은 보병보다 1개월 늦은 17개월에 도달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통신은 숙련수준 및 상급수준 도달기간이 포병보다 각각 1개월씩 늦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갑 및 정비는 타 병과와 달리 숙련수준이 15개월 정도 지나야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급수준도 21개월에나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2. 육군병의 최소복무기간><sup>26)</sup>

관련요소	보병	포병	기갑	통신	정비
숙련수준 (개월)	9	11	15	12	15
상급수준(개월)	16	17	21	18	21
숙련병 구성비 (50% 이상)	18개월 이상	20개월 이상	25개월 이상	20개월 이상	25개월 이상
병력순환율 (60%이하)	22개월 이상	22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23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병과별 최소복무 기간(개월)	22	22	25	23	25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측면과 조직측면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육군의 각

25) 김종구. 「한국 병역제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2004. p.103

26) 김종구. 「한국 병역제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2004. p.104



병과별 최소복무기간은 보병 및 포병은 22개월, 통신은 23개월, 기갑 및 정비는 25개월로 도출되었다.<sup>27)</sup>

이렇게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군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해 높은 병력순환율이 형성되었는데, 이에 따라 낮은 숙련수준의 병사들의 안전사고나 전투력 손실은 현재 육군 초급간부 스트레스 형성 원인 중 하나이다.

의무복무 중인 병사뿐만 아니라 군 간부들도 예외가 아니며 군 간부들의 경우도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 높은 스트레스를 형성하여 정신장애를 유발하거나 자살·폭행·탈영과 같은 범죄를 초래할 수 있다.<sup>28)</sup>

## 제4장 군 초급간부 스트레스 해결방안

### 1. 전력 약화 방지를 위한 대체인력 획득제도 강화

현역병 복무기간의 단축 효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즉 병역의무대상자에게는 병역부담 완화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이지만, 군의 측면에서는 전투력 약화라는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군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투력 약화, 또 그 속에서 육군 초급간부의 스트레스를 야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군 복무기간 단축으로 문제시 되는 직위에 대해 부사관으로 대체하는 방안, 유급지원병제를 도입하는 방안, 군무원으로 대체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 가. 부사관 대체제도

각 군 본부는 대체적으로 병 복무 단축으로 문제가 되는 병 직위에 대해 부사관으로 대체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실무부대의 경우 육군은 대부분 부사관으로 대체하기를 원하나, 차선택으로 유급지원병 도입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즉 기갑의 경우에는 부사관 대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보병, 포병, 통신, 정보 등은 차선택으로 유급지원병 활용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활용 등 기타 측면을 살펴보면, 부사관으로 전원을 대체할 경우 부사관 대폭 확대에 따라 단기 활용하는 부사관 규모가 대폭 증대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27) 정주성의 3인 공저. 「한국병역정책의 바람직한 진로」. 한국국방연구원. 2003. p.123~125

28) 문호석. 「육군 병사 및 간부의 고수준 스트레스 원인 분석 및 관리 방안 연구」. 국방연구 제60권 제3호 2017. p.146

이는 투자 대 효과에서 비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즉 유급지원병보다 활용은 1년 정도 추가되는데 비해 투자는 4~5배 정도가 되기 때문이다. 한편 유급지원병의 도입은 젊은이들에게 학비 등 경제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게끔 하는 의식을 확대시키는 계기를 제공해 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전투력 측면에서는 부사관 대체가 가장 바람직하나, 획득환경, 예산 측면 등에서는 유급지원병 도입이 유리하다. 이러한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볼 때, 육군은 부사관 대체 및 유급지원병 도입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나. 유급지원병 복무제도

유급지원병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인력 확보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다. 유급지원병의 확보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유인요인은 추가복무기간, 경제적 혜택 수준, 선발시기, 부여계급, 추가복무 후 혜택 등이 될 것이다.

추가복무기간은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 기간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되, 긴 기간을 희망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가복무 수당은 6개월 추가 복무 시에는 총 600~7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며, 12개월 추가복무시에는 1,500~1600만원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급방법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매월 일정액 또는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선발은 입대 전 또는 의무복무기간 중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부여계급은 간부 대부분이 제시하고 있는 일반하사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 복무 후의 혜택은 추가복무기간 만큼 예비군 동원훈련을 면제하는 방법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유급지원병제의 도입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입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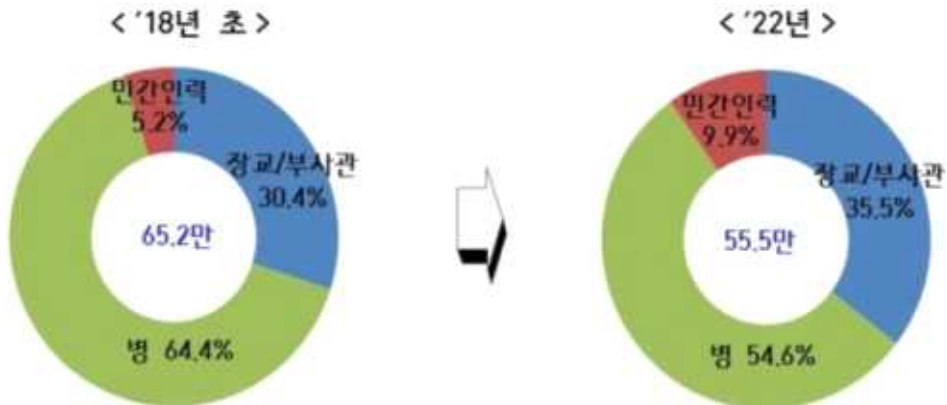
#### 다. 군무원 대체제도

국방인력은 장교·부사관·병 같은 군인과 군무원·민간근로자 등의 민간인력으로 구성된다. 국방인력 중 민간인력 비율은 우리나라가 5.5%에 그친 반면, 미국 52%, 영국 38%, 프랑스 30% 등으로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국방부는 1990년대 이후 급격한 저출산으로 간부 충원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2006년 국방개혁 추진부터 6만 4,000명의 상비병력을 감축하고 숙련도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부사

관 위주의 간부 증원을 추진해 왔다. 저출산 흐름이 2020년대 중반 이후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간부 증원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향후 비전투 분야에서 운영비가 적게 들면서도 전문성이 높은 민간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기존의 간부 증원 중심의 병력 구조 개편 계획을 수정했다. 앞으로는 군무원 등 민간인력을 중심으로 증원하고 군내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계획을 수립 및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국방인력 구조 개편이 2022년에 완료되면 상비병력은 현재 61만 8,000명에서 50만명으로 11만 8,000명으로 감축되고, 간부는 현 수준으로 유지된다. 군무원 등 민간인력은 현재 3만 4,000명에서 5만 5,000명으로 21,000명이 증원된다. 전투부대는 숙련된 장교·부사관 중심으로 개편돼 간부 비율이 현재보다 대폭 증가되며, 비전투부대는 전문성을 갖춘 군무원 등을 중심으로 보다 효율화될 전망이다.

<표 4-1. 국방인력 구조 개편에 따른 2022년 비율 변화>



출처 : 국방부

한편, 국방부는 군인 직위를 군무원 등 민간인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직자의 인사상 불이익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감축된 군인이 군무원으로 재채용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예비역에 대한 경력직 채용이나 임기제 비율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며, 군무원의 교육·근무여건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방부의 이번 계획은 미래 전장환경 변화, 가용 병역자원 감소, 상비병력 감축 등 상황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민간인력 활용 및 효율적인 재배치를 통해 예산소요 증가는 최소화하면서 전투력은 오히려 보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군무원 증원은 정부의 일자리 만들기 노력에 부응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2. 구조화된 현장 직무교육(S-OJT) 체계를 적용한 초급간부와 특기병 숙련도 향상

### 가. 구조화된 현장 직무교육(S-OJT) 체계 적용 필요성<sup>29)</sup>

현재 우리 군은 '국방개혁 2020'<sup>30)</sup>을 위해 기술집약적 인력구조의 추구, 병 의무복무기간의 단축, 민간 인력의 확대채용, 선진 병영문화의 발전 등과 같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기술집약형 인력구조는 간부 비율을 현재 25% 수준에서 군별 40% 이상 수준으로 대폭 상향하는 것이며 간부의 직무교육 소요가 증대함을 의미한다. 병 의무 복무기간을 2020년까지 육군 기준으로 24개월에서 18개월로 점진적으로 단축하고, 우수 숙련병을 확보하기 위해 모집 분야를 확대해 나가고 있어 병 의무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투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인력획득 및 직무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장병의 인력 순환비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어 전투기술 숙달 후 활용기간 부족으로 전투력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최단시간에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야전의 직무교육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군은 군의 전투력을 유지 관리하는 초급 및 중급 지휘관, 참모 등의 보직교체시 마다 공식적인 권한과 책임 인수인계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새로운 직무적응을 위한 개인과 부대의 추가소요에 따른 직무공백 위험이 적지 않다. 즉, 지휘관 개개인의 특성과 노력에 따라 부대의 성패와 전투력의 차별화가 클 수 밖에 없고, 부대관리 노하우 등의 체계적인 리더십 교육이 미흡하여 군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소위 취약부대에서는 안전사고 등의 비전투손실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전군적으로 볼 때 부대관리에 쏟는 지휘관심 등의 비용 대비 효과의 지속성이 감소하는 소모적인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군은 고성능 무기와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문 기술인력 중심의 구조로 전환해야 할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따른 기술인력 확보 및 효율적 야전 직무교육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9) 김군기, “기술집약형 군조직의 야전직무교육향상방안, S-OJT체계 적용”, 군사평론, 제 404호, 2010, pp.290-308.

30) 국방개혁 2020(Military Reform Plan 2020)은 대한민국 국방부가 2005년 9월 13일에 공식 발표한 미래 선진정예 국방을 위한 장기적 국방 개혁안으로 2006년 12월 28일「국방개혁에 관한 법률」(법률 제8097호)이 국회를 통과하고 2007년 3월 29일 시행에 들어갔다. 2009년 10월 일부 국회의원들에 의해 개혁 수정안이 발의되어 국방개혁 2.0으로 변화되었다.

나. 구조화된 현장 직무교육(S-OJT<sup>31)</sup>)이란?

① S-OJT란 근무시간에 새로 들어온 사원이 모르거나 부족한 지식과 기술을 질문함으로써 진행되는 훈련방법이 아니라 숙련된 조직구성원이 실제 진행되는 현장에서 혹은 그 근처의 장소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신입사원에게 일대일의 방법으로 지도하는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훈련방법이다.(김선희, 1996)

② S-OJT는 경험있는 사원이 신입 사원을 직업 현장이나 직업 현장과 비슷한 장소에게 가르치는 계획된 과정이다.(Jacobs, 2003)

즉, S-OJT는 신입직원 뿐만 아니라 조직의 구성원들의 보다 나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체계화된 과정(Process)을 통해 이루어지는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훈련방법이라 정의할 수 있다. S-OJT는 글로벌 경제의 난관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들을 돕기 위해서 로널드 제이콥스 교수<sup>32)</sup>에 의해 1980년대에 처음으로 소개되었으며, 신입사원들이 일을 독립적으로 더 빠르고 더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다. 또한 S-OJT는 계획된 과정의 사용이라는 점에서 비구조화된 기존의 OJT<sup>33)</sup>와는 차이가 있는데, 세부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기존의 OJT	구조화된 OJT(S-OJT)
•체계적인 접근을 사용하지 않는다.	•체계적인 접근을 사용한다.
•결과를 미리 정의할 수 없고 예견할 수 없다.	•결과를 미리 정의하며 예견할 수 있다.
•OJT리더가 되기 위해 별다른 교육을 받지 않는다. 즉 의사소통 기술에 의존한다.	•OJT리더가 되기 위해 교육을 받는다.
•단순히 훈련 프로그램으로 인식된다.	•수행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인식된다.

31) S-OJT : Structured-on the job trai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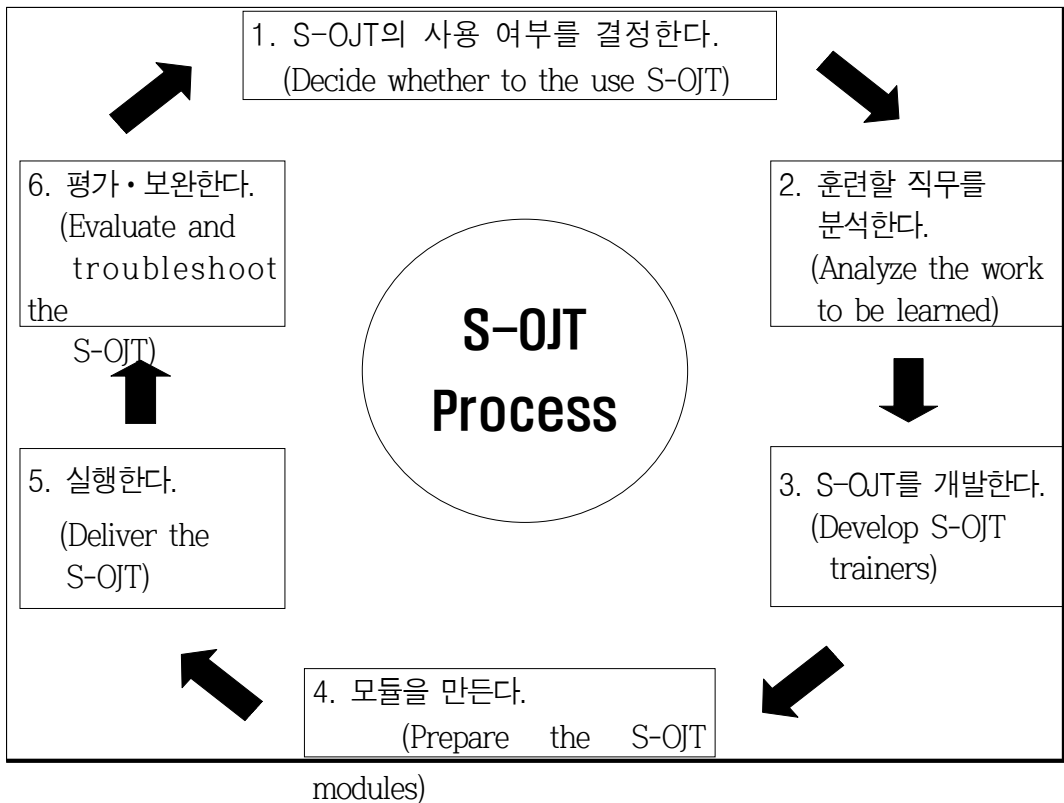
32) 로널드 제이콥스(Ronald L. Jacobs, Ph. D) :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정교수. OJT의 세계적 권위자로서 체계적 OJT의 개념을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우리나라에는 월간「HRD」에 S-OJT를 연재(1997년 2월 ~ 1998년 3월)하여 한국에 처음으로 S-OJT를 소개하였음

33) OJT(On the job training) : 일상적인 직무를 통하여 실시하는 부하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방식으로 모든 관리자는 업무를 수행할 때 지휘·감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하의 능력을 향상시킬 책임도 있다는 발상에서 비롯되었음

즉, OJT가 실제 업무 현장에서 상사와 후배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것인 반면, S-OJT는 정형화된 모듈(module)<sup>34)</sup>을 통해 훈련이 이루어지는 체계화된 현장학습으로써 이를 통해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기술을 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다. 여기서 OJT와 구분되는 S-OJT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숙련된 선배에 의해 만들어진 매뉴얼을 통해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S-OJT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된다. <표 2>와 같이 S-OJT 설계, 착수, 검토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과정이 필요하며 위의 6단계 과정을 따를 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표 2>



현재 군에서도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들을 통하여 조직화된 상황에서의 리더십이나 구조화된 현장 직무교육의 제한적 묘사는 가능하지만 군 리더십과 군 조직, 특

34) 모듈(module) : 사전적으로는 ‘규격화된 구성 단위’ 등의 뜻으로 사용되나, 본문에서는 S-OJT 수행과정(Process)의 일부로 ‘체계화된 학습자료’를 의미함

히 기술집약형 야전부대에서의 구조화된 현장 직무교육 실행과 영향을 묘사하는 연구는 거의 없다. 현재 학교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 역시 일반적인 개념 위주의 학습으로 부대별 각기 다른 야전현장에서 개별적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술, 일정한 패턴, 세부 교재 등을 제공하기에는 제한되는 실정이다.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한 교육은 바로 야전부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다 구조적이고 체계적일수록 그 성과가 극대화 되는 군 특성을 고려시, S-OJT 개념을 적용한 야전부대 현장 직무교육은 일반 기업보다 더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다. S-OJT의 특징 및 효과

S-OJT의 대표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시간 단축을 통하여 신입 직원은 학습한 내용을 가능한 한 빨리 활용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다.

둘째, 훈련장소가 곧 직무장소와 일치함에 따라 신입 직원들은 그들이 배운 바를 직무에 더욱 성공적으로 전이할 수 있다.

셋째, 하나의 계획된 체계적인 프로세스이므로 구조화된 OJT 실시 전에 시간과 노력의 투자가 요구된다. 그 결과로 신입 직원은 자신들이 요구한 내용과 조직이 바라는 내용을 배울 수 있고, 의도했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

넷째, S-OJT는 직무 중 과제수준에 초점을 둔다. 즉 S-OJT는 전체 직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직무의 단지 한 작은 부분에 관한 것이다.

다섯째, S-OJT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OJT리더인 경력자에 의해 지도된다.

여섯째, 기존의 OJT와 S-OJT의 근본적인 차이는 계획된 프로세스를 갖추는 일이다. 계획된 프로세스는 시스템 접근 방식에서 연유된다.

이처럼 S-OJT는 직무현장에서 교육하므로 직무에 활용도가 높고, 소규모 학습자대 교육자로 교육이 되므로 강의식의 OFF-JT<sup>35)</sup>보다 효율적이다. 또한 매뉴얼을 사용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학습이 가능하고,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훈련받은 선임직원들이 신입사원을 교육함으로써 직원들 간의 유대를 증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훈련 후 즉각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신입사원의 이해 정도를 즉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세계적으로 OJT를 구조화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국가는 일본이다. 그리고 일본의 기업들 중에서 도요타 자동차의 사례는 일본 국내에서는 물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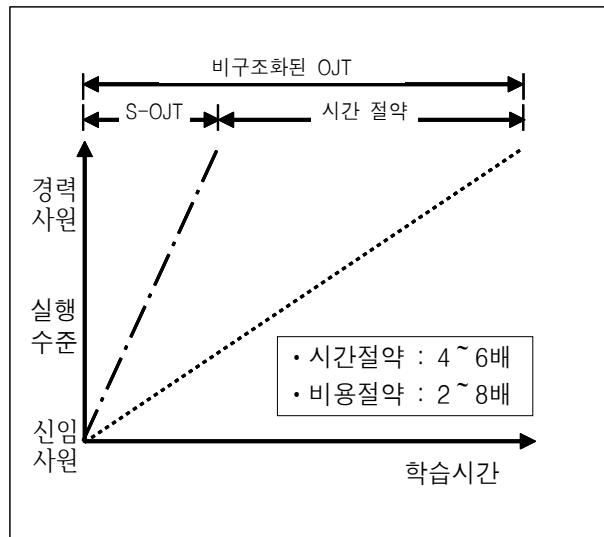
---

35) Off-JT(Off the job training) : OJT와는 대조되는 개념으로, 직무수행을 중단하고, 또는 직장배치 전에 다른 장소에서 실시되는 직장 외 교육훈련 방식

고 미국을 비롯하여 많은 국가들에서 벤치마킹의 사례로 활용되었다. 도요타 자동차는 전사적인 차원에서 OJT를 기획, 운영하고 있다.

현장에서 볼 때 OJT가 얼마나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은 현장 감독자가 작성한 ‘작업훈련계획표<sup>36)</sup>’이다. 도요타 자동차에서는 현장 감독자가 작업훈련계획표를 작성하여 작업자의 기능을 4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이 작업훈련계획표에 의해 OJT는 체계적, 구조적으로 진행된다. 제조업체와 서비스 분야에서도 S-OJT를 적용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컴퓨터로 유명한 애플사에서는 고속련의 조립공을 대상으로 S-OJT 교육을 실시한 결과 교육훈련 시간이 단축되고 조립불량이 감소되는 성과를 보였다.

<표 3>



또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인 델파이의 배선불량이 줄었고, 네덜란드 항공은 승무원들이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의 컴퓨터 회사, 쿠웨이트의 정유회사 등에서도 S-OJT를 실시하여 불량률 감소, 순환근무를 마치는 데 필요한 시간 단축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제이콥스 교수는 이러한 성과를 연구·분석한 결과, 위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S-OJT를 실시할 경우 초보자가 업무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4~6배, 비용은 2~8배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이콥스 교수는 “S-OJT는 저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인적역량을 높이는 효율적 방법”

7) 도요타의 대표적 교육훈련 제도인 직무순환 방식(노동자를 특정업무에 고정시키지 않고 작업 전반에 유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직무를 순환하는 방식)에 따라 새로운 부서에 배치된 노동자가 자신의 임무에 최단시간 적응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훈련계획표, 앞서 언급한 모듈(module)의 한 형태라 할 수 있음



이며, “조직 내에서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인 동시에 그 기회 자체를 늘리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9년 9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개최한 2009 HRD<sup>37)</sup> 컨퍼런스에서 포스코의 OJT 사례 발표<sup>38)</sup>가 눈길을 끌었는데 ‘스텝직원 육성 로드맵(Road-Map)’, ‘현장사원 육성 로드맵(Road-Map)’, ‘부서 자체 OJT 활동’ 등의 자체 세부 S-OJT 적용방법을 소개하였으며, 특히 기존의 업무 인계인수의 차원을 벗어난,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문제해결형 OJT’와 신입사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닌 리더 후보자(예를 들어 공장장후보 등)를 육성하는 ‘리더십 강화 차원의 OJT 적용 방안’을 제시하여 그 성과에 대한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기도 하였다.

## 5. 결 론

과거부터 이어진 군 복무기간 단축은 ‘국방개혁 2.0’과 같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요구되어 질 것이다. 군 복무기간 단축으로 국방부는 군 전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다른 국민들은 군 복무기간 단축으로 군 전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방부는 “군 복무기간 단축은 21세기 현대전 양상의 변화에 발맞추어 과학기술군으로 정예화 하는 국방개혁의 일환”이라며 “첨단전력을 증강하고, 숙련도가 필요한 보직은 부사관으로 대체하며, 병사들이 전투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비전투 임무를 최소화 하는 등 종합적인 개혁을 통해 전력은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작은 실수로 생명이 좌우되는 군대 화기의 특성상 숙련도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높은 병력순환율에 따른 병사들의 숙련도 저하수준은 고스란히 그들을 관리하는 육군 초급간부의 스트레스와 직결된다. 계속해서 군 안전사고 관련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시점에서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병사들의 숙련도 저하는 충분히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또한 장병의 인력 순환비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어 전투기술 숙달 후 활용기간 부족으로 전투력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최단시간에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야전의 직무교육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군은 군의 전투력을 유지 관리하는 초급 및 중급 지휘관, 참모 등의 보직교체시 마다 공식적인 권한과 책임 인수인계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새로운 직무적응을 위한 개인과 부

37) HRD : Human Resources Development(인적자원개발)

38) 박세연(포스코 인재개발원, 리더십교육그룹장)

대의 추가소요에 따른 직무공백 위험이 적지 않다. 즉, 지휘관 개개인의 특성과 노력에 따라 부대의 성패와 전투력의 차별화가 클 수 밖에 없고, 부대관리 노하우 등의 체계적인 리더십 교육이 미흡하여 군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소위 취약부대에서는 안전사고 등의 비전투손실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전군적으로 볼 때 부대관리에 쏟는 지휘관심 등의 비용 대비 효과의 지속성이 감소하는 소모적인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군은 고성능 무기와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문 기술인력 중심의 구조로 전환해야 할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따른 기술인력 확보 및 효율적 야전 직무교육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군 복무단축에 따른 전투력 약화 방지대책은 위에서 말한 부사관 대체제도 또는 유급지원병, 군무원 대체제도가 바람직 할 것이다. 고도의 숙련도가 요구되는 전차 및 자주포 등의 조종수는 부사관으로 대체하고, 상당수의 분대장 요원, 사단 정비 요원, 근접지원 정비요원 등은 유급 지원병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즉, 정비 및 수리분야의 정비병은 전원 유급지원병화하고, 병 분대장 요원도 전원 유급지원병화해서 조금이나마 그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초급간부의 스트레스를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병 의무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투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인력획득 및 직무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앞에서 제시된 정형화된 현장직무교육체계를 직무유형별로 잘 정립하여 활용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최종섭, 홍종희, 송용준, “한미 정보화기술(ICT) 협력 종합 발전 전략 연구”, 한국국방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19-22쪽, 2008.
2. 안영수, 장원준, 『방위산업의 글로벌 환경변화와 경쟁력 평가』, 서울, 평화출판사, 43-44쪽, 2011.
3. 무인기 로드맵, 미국 국방성 홈페이지 : <http://www.defense.gov/> (검색일: 2014. 7. 30)
4. 북한의 동정, 중앙일보 2014. 7. 31일자, 12면
5. 김군기, “기술집약형 군조직의 아전직무교육 향상방안, S-OJT체계 적용”, 군사평론, 제 404호, 2010, pp.290-308.
6. 김관식. 『초급간부의 의사소통 유형,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아탄력성이 군 복무 적응에 미치는 영향』, 동신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2013.
7. 김두성. 『한국 병역제도의 결정요인에 관한 역사적 고찰』. 한남대학교 대학원. 2002.
8. 김성중. 『병사의 스트레스에 대한 종교적 대처가 군 적응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목회상담적 접근』. 총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9. 김종구. 『한국 병역제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2004.
10. 김종철. 『병역정책의 형평성과 효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2011.
11. 문호석. 『육군 병사 및 간부의 고수준 스트레스 원인 분석 및 관리 방안 연구』, 국방연구 제60권 제3호. 2017.
12. 명송식. 『군 복무기간 조정 정책결정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대학원. 2013
13. 반자검. 『한국과 중국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요인 및 대처방식에 관한 비교』. 우석대학교 대학원. 2010.
14. 양재도. 『육군 간부의 스트레스 대처, 회복탄력성과 군 생활 적응과의 관계연구』, 배재대학교 교육대학원. 2016.
15. 이남순. 『군 병사의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평택대학교 대학원. 2010.
16. 이훈. 『군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효율성 분석』.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2004.
17. 조현우. 『육군 간부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직무만족도와 심리 소진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2013.
18. 장경문.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심리적 성장환경의 관계』. 한국 청소년학회. 2003.
19. 정주성외 3인 공저. 『한국병역정책의 바람직한 진로』. 한국국방연구원. 2003.
20. 최유경. 『애니어그램 성격유형에 따른 유아교사들의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대처

- 방식』.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2009.
21. Cummings, T.G., & Worley, T. Organization development and change. Cincinnati, OH : Southwestern, 2008.
22. Dejon, J.A. Structured on-the-Job training at Hoogovens Ijmuiden, Journal of European Industrial Training, 1992.
23. Dejong, J.A. Structured on-the-job training in the Netherland. paper presented at the European Conference on Educational Research. Enschede, the Netherlands : EUROFORUM, 1992.
24. Gilbert, T. Human competence, 1997.
25. Gilley, J., Eggland, S., Gilley, A. Principles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Cambridge, MA : Perseus. ISBN 0-7382-0604-0, 2002.
26. Jacobs, R., Jones, M. and Neil, S. A case study in forecasting the financial benefits of unstructured and structured on-the-job Training. Human Resource Development Quarterly, 1992.
27. Jacobs, R. Case studies that compare the training efficiency and product quality of unstructured and structured OJT, in J. Philips (ed.) The Return on Investment in Human Resource Development: cases on the Economic Benefits of HRD, Alexandria, VA : American Society for Training and Development, 1994.
28. Jacobs, R. and Jones, M. Structured On-the-Job Training: Unleashing Employee Expertise in the Workplace. San Francisco : Berrett - Koehler, 1995.
29. Jacobs, R. Developing S-OJT trainers. A program to qualify experienced employees. Presentation to New Paradigm Center, South Korea., 2004.
30. Lee, C. & Yun, Y-S. Using the Six-sigma Approach to Structured OJT, in R. L. Jacobs(Ed.) Implementing On-the-job Learning. Alexandria : American Society for Training and Development, 2002.
31. Lohman, Margaret. Deductive and Inductive On-the-job Training Strategies. San Francisco : Sage, 2001.
32. Moore, R, Blake, D., Gorman, P., Phillips, G.M., Herczeg, C. & Shipley, D. The Role of Structured On-site Training in ETP, ERIC #CE084814. Sacramento : California Employment Training Panel, 2002.
33. Noe, R. Employee training and development. McGraw-Hill, 2007.
34. Pious, J. On-the-job Training in Singapore: Towards 2000, Republic of Singapore : National Productivity Standards Board, 1994.

35. Rothwell, W. and Kazanas, H. Structured on-the-job training (SOJT) as perceived by HRD professionals. performance Improvement Quarterly, 1990.
36. Rummler, G., & Brache, A. Improving performance: how to manage the white spaces on the organization chart. San Francisco : Jossey-Bass, 1995.
37. Swanson, R.A., & Holton, E. Human resource development research handbook: linking research and practice. San Francisco : Berrett - Koehler, 1997.
38. 시사포커스, 『국방개혁 일환...내달 1일부터 ‘군복무단축’ 단계적 본격화』, 2018-09-29.
39. 뉴스핌, 『군 복무기간 3개월 단축, 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혜택』, 2018-07-27.
40. 충청일보, 『군복무기간 단축, 보완책 제시해야』, 2018-09-04.

<abstract>

**The Effects of the Shortening of Military Service  
Period on the Stress of Beginner Executives and Its  
Solutions**

Kim, Koon Ki (Yeungnam Universit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nounced a 'plan to shorten the service period by six months' in July 2007. Starting with soldiers who will join the army on June 15, 2020, they will serve only 18 months based on their service period.. The shortening of the military service period is part of the defense reform that will be formally established as a science and technology force in line with changes in the aspect of modern warfare.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has made comprehensive reforms, including minimizing non-combat missions so that soldiers can concentrate solely on combat missions so that soldiers can concentrate solely on combat missions. However, it is feared that the fighting power will deteriorate, because some specialties are difficult to perform due to the shorter period of use of skilled soldiers. Low job proficiency due to high troop circulation is causing stress for beginner executives actually. Therefore, stress solutions were sought based on the results considered and analyzed various stresses caused by the shortening of the military service period.

**Key Words : Nation Defense Reform, Force circulation rate, Job proficiency, Junior leaders stress, Structured-On the Jop Training**



## 부상하는 군사과학기술의 개발 추세

김 종 열<sup>1)</sup>

---

### 순 서

1. 서 론
  2. 부상하는 군사과학기술에 대한 경쟁
  3. 미·중·러의 군사과학기술 개발 추세
  4. 시사하는 점
  5. 결 론
- 

### 요 약

군사과학기술은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기반으로 한 국가의 군사력과 직결되고 국가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나아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현재 미국과 중국 러시아에서 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군사과학기술이 어떠한 것들인가를 분석하였다. 부상하고 있는 첨단 군사과학기술은 6가지 분야로 요약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2) 자율 무인무기체계, 3) 극초음속 무기체계, 4) 지향성 에너지(레이저) 무기, 5) 생물학 무기, 6) 양자(quantum) 기술이다. 첨단과학기술에 대하여 경쟁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과학기술 발전 수준을 비교 평가해 보면, 미국은 새로운 군사과학기술의 개발이나 무기체계의 생산 능력이 자체적으로 가능한 수준이고, 과학기술이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창의성, 조직문화 등과 결합하여 새로운 군사과학기술의 창출이 가능한 수준이다. 중국은 자체적인 군사과학기술의 창출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은 부상하는 군사과학기술을 수용하고 이를 활용하는 수준이다. 러시아는 이미 존재하고 가용한 군사과학기술을

---

1) 영남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jrkim1201@yu.ac.kr



복사하거나 재생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군에 요구되는 첨단 군사과학기술이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이를 군사 전략적 이점으로 활용하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키워드 : 군사과학기술, 인공지능, 자율무인무기, 극초음속무기, 지향성에너지무기, 생물학 무기, 양자기술

## 1. 서 론

군사과학기술은 군에서 사용하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과학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영역이 현대 과학기술의 대부분이 해당하여 매우 광범위하다. 또한, 무기체계 성능의 우수함은 그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군사과학기술의 탁월함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첨단 군사과학기술은 전쟁 승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알렉스 케슬러는<sup>2)</sup> 근현대사에 발생한 전쟁과 분쟁들을 분석한 결과에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변수들(군사과학기술, 리더십, 훈련, 사기, 전략전술 등)중에서 고도화된 군사과학기술에 의한 무기체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9. 5월,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2020년 국방수권법안'을 공개하였는데, 그 법안은 경제 부문의 관세 전쟁에 이어 안보에서 중국의 도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중국군이 미국의 첨단 군사기술을 탈취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국방·군사연구와 연계된 러시아 중국 학술 연구기관 목록을 작성하도록 했다.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관된 대학·연구소에서 미국 교수·연구자들이 부당한 압력을 받아 첨단 과학기술을 탈취당하는 일을 차단하겠다는 의도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공지능을 포함해 민간 첨단 과학기술을 중국군 현대화에 접목하는 '민·군 융합' 프로젝트를 앞장서 지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상원 군사위는 "중국·러시아와 벌이고 있는 장기적·전략적 경쟁이 미국의 번영과 안보에 대한 중심적인 도전"이라며 "국방수권법은 미국의 비교 군사 우위를 회복하고 침략을 억제하는데 국방 투자의 우선순위를 뒀다"고 명기했다. 그러면서 모든 영역에서 러시아보다 중국을 의식하여 중국과의 첨단 무기 경쟁에서 우위 확보를 중시했다. 레이저포와 같은 지향성 에너지 무기, 극초음속 무기 등 혁신 무기개발을 위한 연구·시험 예산도 대폭 늘렸다.<sup>3)</sup>

---

2) Alex Kessler, "Do Better Weapons Win Wars? The Role of Technology in Warfare" Feb 2, 2011 (<http://triplehelixblog.com/2011/02/do-better-weapons-win-wars-the-role-of-technology-in-warfare/>, 검색일: 2020.7.21)

3) 중앙일보 2019.5.24.(금), 美 '국방수권법안'서 첨단기술전 선포…"중국군 연계 연구소 명단 내라"

이처럼 미국 중국을 비롯한 각국이 자국의 이익과 안보를 위하여 군사과학기술의 개발과 확보에 국가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2020년 현재, 미국과 중국 러시아에서 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군사과학기술이 어떠한 것들인가를 분석하는 것은 우리 한국의 국가이익과 안보에도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미·중·러에서 현재 부상하고 있는 첨단 군사과학기술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 이들 3개국, 미국과 중국 러시아는 군사과학기술의 국가적 수준이 어느 정도이며, 3국이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가에 대한 추세를 분석하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 그 내용이 인용되고, 분석 자료로 사용된 문헌은 미국과 나토(NATO)의 공식적인 기관에서 발간된 다음과 같은 자료임을 밝혀둔다 : 1) “부상하는 군사과학기술에 대한 전략적 경쟁” 미 국방대 논문, “Strategic Competition for Emerging Military Technologies, Comparative Paths and Patterns”, by Michael Rask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Prism Vol 8, No 3, Jan 2020, 2) “부상하는 군사과학기술”, 미 의회 보고서, “Emerging Military Technologies :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August 2020,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R46458, Kelly M. Saylor. 3) “2020-40 과학기술 발전 추세”, 나토 과학기술기구, “Science & Technology Trends: 2020-2040”, NATO Science & Technology Organization, March 2020. 이상의 3가지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본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문헌의 일부 자료는 본 논문에 재인용 되었다는 것도 밝힌다.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모든 과학기술을 군사과학기술 (Military Technology or Military Science & Technology)이라는 용어와 국방과학기술(Defense Science & Technology)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군사적 용도로 사용되어 무기체계로 실체화 되었을 경우에 막대한 전략적 이점이나 전술적 이득을 가져와 전장의 승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과학기술을 일컫는다. 최근에는 민간 상용과 군사용으로 동시에 적용되고 활용되는 민군겸용기술(dual-use technology)로도 불리 운다. 본 논문에서는 군사과학기술이라는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하고자 한다.

## 2. 부상하는 군사과학기술에 대한 경쟁

### 2.1 부상하는 군사과학기술

트럼프 미 행정부는 과거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자세로 중국을 대하고 있다. 2017년 미 국가안보전략서(National Security Strategy)에서 중국을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을 대신하여 패권을 장악하려는 야심찬 국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2018년 미 국가안보전략서에서는 중국을 “전략적인 경쟁자”로 규정하고 “강력한 경제력과 증대하는 군사능력으로 주위 국가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라고 기술하고 있다. 최근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미국의 국가전략 문서에 공식적으로 표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략적 경쟁자로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고심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과거 냉전시대에는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로서 소련이라는 하나의 국가만이 있었다. 그 당시에는 미국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차원에서 오로지 소련만을 봉쇄하는 데에 최대한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최근의 전략적 경쟁 구도는 달라진 국제적 안보 상황에 따라 여러 지역에 걸쳐서 더욱 복잡다단해졌고 불확실해 지고 있다. 더구나 최근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전략적 경쟁을 하는 분야, 즉 전략적 경쟁의 수단과 방법이 안보와 경제 분야로부터 군사과학기술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군사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전략적 경쟁은 상대 국가들보다 장기적인 전략적 이점을 선점하고 그 전략적 이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경쟁 상대국가보다도 지정학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군사적으로 유리한 전략적 옵션과 전략적 선택을 갖게 되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군사과학기술 분야에서 전략적 우세 또는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분야에 국가자원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부상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로봇, 3D 프린팅 등이 혁신적인 군사과학기술 분야로 언급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만 하더라도 미래 군사력의 효과성을 증진하고 군사적으로 활용 시 그 이점이 매우 많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첨단인 우수한 군사과학기술의 보유는 이미 그 기술이 적용되어 개발된 실제 무기체계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혁신적이고 새로운 군사과학기술의 확보는 실질적인 군사력으로 평가되고, 나아가 지정학적인 힘(power)으로 나타나게 된다.

인공지능 기술 분야를 보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기계학습 알고리즘은 지금까지의 정보처리속도, 무기체계나 감시 장비 등의 자동화, 정밀 타격, 신속한 전장 결심 등에서 뛰어난 능력을 제공해주고 있다. 인공지능의 군사적 활용은 무수히 많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복잡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격을 실시간에 분석하거나, 자율적인 목표를 탐지하고 공격하는 드론이나, 전장에서 필요한 막대한 양의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장 지휘관이나 전투원에게 차후 행동 조치 요구사항을 알려주는 전투관리시스템 등에 활용된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발달은 군대가 어떻게 신속하게 새로운 민간 과학기술을 채택할 것인가, 군사 작전적 수준에 따라 어떻게 활용하고 적용할 것인가, 미래 전장은 어떠한 환경으로 변화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사항들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게 된다.

미래 전장이나 미래 군사 능력에 매우 중요한, 새롭게 부상하는 군사과학기술이 군대조직에 깊숙이 스며들어 실질적으로 조직운영에 활용되고 무기 체계에 운용되는 양상은 각 국가마다 다른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부상하고 떠오르는 혁신적인 군사과학기술을 신속히 받아들여 실제적인 군사 능력으로 가시화하는 것은 각국의 군대조직이 처한 환경과 국방혁신을 추진하는 생태계에 따라 다르다. 새로운 혁신적 과학기술을 군사용으로 채택하고 적용하여 무기체계의 설계에 반영하고, 군대의 작전 개념을 바꾸어 가는 과정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간 영역에서 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과학기술을 식별하고 분류하여 군사용으로 쓸모 있는 과학기술을 추려내는 것도 또한 어려운 과정이다. 민간 과학기술이 성숙하기 전 초기 단계에서 군사적 효용성이나 군사 전략적 이점을 판단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러한 혁신적인 과학기술들이 군사조직 내부나 군사기업에서 일어나기 보다는 민간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상업적인 용도로 개발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래 표<1>에서는 상업적 민간영역에서 부상하고 있는 과학기술 중에서 군사적 활용도가 높고 향후 군 작전에 전략적 이점을 가져다 줄 것으로 평가되는 민군겸용(dual-use) 과학기술을 요약하였다.

표<1> 부상하는 민군겸용(dual-uae) 과학기술 분야

구분	인지 /데이터 처리 기술	실행 기술 / 신소재	통신 /항법 / 타격 기술	제조 /군수 보급 기술
세부분야	클라우드 컴퓨팅	양자 컴퓨팅	정밀항법 / 위치추적	로봇
	빅 데이터 분석	자율성 기계	지향성 에너지 (레이저)	3D 프린팅
	인공지능	스마트소재/ 바이오 소재	전자파 무기	4D 프린팅/ 스마트소재
	가상 /증강 현실	항공용 복합재료	무인체계	가상/증강 현실 제조
	로봇/무인체계	사물인터넷	극초음속 무기	모의시험/훈련
	첨단 센서	에너지획득 / 저장	인공위성 연결	컴퓨터 디자인
	사물인터넷		가시광선 통신	

(\*출처 : “부상하는 군사과학기술에 대한 전략적 경쟁” 미 국방대 논문, “Strategic Competition for Emerging Military Technologies, Comparative Paths and Patterns”, by Michael Rask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Prism Vol 8, No 3, Jan 2020.)

## 2.2 미·중·러의 군사과학기술 수준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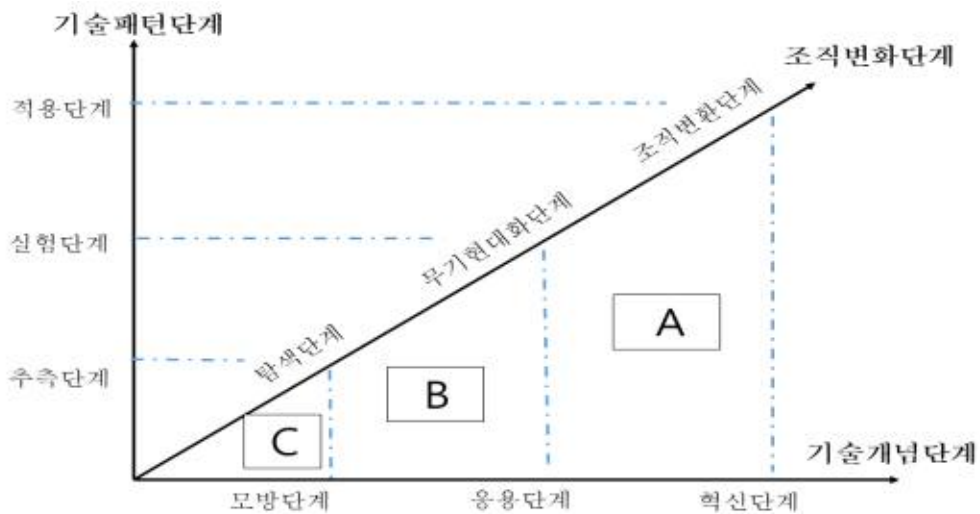
새롭게 부상하는 민군겸용 과학기술을 적절한 방법과 수단으로 획득하지 못하여 군사용으로 적용이 되지 못한다면, 그 국가의 군사적 능력이나 그 국가 주변의 안보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국, 중국, 러시아가 새로운 민군겸용 과학기술의 취득과 활용에 있어서 각각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며 국가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세 국가가 어떻게 부상하는 군사과학기술에 대처하고 있는가를 바탕으로 세 국가의 국방혁신 방향성과 군사과학기술 수준을 상대적으로 비교 평가할 수 있다.

상호 비교평가 요소는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각 국가가 각 요소에서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를 비교하여 볼 수 있다. 3가지 요소는 기술개념실현단계(conceptual paths), 기술패턴단계 (technological patterns), 조직변화단계(organizational change)이다. 1) 기술개념실현단계는 부상하는 군사과학기술이나 군사전략에 대하여 기술모방/복제단계 -> 기술응용단계

-> 기술혁신단계로 발전되어 간다고 규정한다. 2) 기술패턴단계는 새롭게 부상하는 군사과학기술에 대하여 추측예상단계 -> 실험단계 -> 적용단계로 발전되어 간다고 볼 수 있다. 3) 조직변화단계는 새로운 민군겸용 과학기술에 대하여 탐색단계 -> 무기현대화단계 -> 조직변환단계로 발전되어 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발전과정은 각 단계가 분명한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교차 중첩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상호평가요소를 그래프 상에 나타내어 표시한 것이 아래 그림<1>과 같다.

그림<1> 군사과학기술 발전 단계와 비교평가 요소



(\*출처 : “부상하는 군사과학기술에 대한 전략적 경쟁” 미 국방대 논문, “Strategic Competition for Emerging Military Technologies, Comparative Paths and Patterns”, by Michael Rask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Prism Vol 8, No 3, Jan 2020.)

위 그림에서 A 단계에 있는 국가는 가장 발전된 단계의 국방혁신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국가의 국방혁신 생태계가 국방 분야 무기체계의 기술개발이나 생산 능력이 정치, 경제, 사회, 창의성, 조직문화 등과 결합하여 새로운 군사과학기술의 창출이 가능한 수준이다. B 단계는 군사과학기술의 개발이나 무기체계의 생산에 있어서 부상하는 과학기술을 수

용하고 새로운 과학기술에 적응해가는 국방혁신 생태계라고 할 수 있다. C 단계는 이미 존재하는 군사과학기술을 복사하거나 재생산하는 수준에 있는 국방혁신 생태계이다.

### 중국의 군사과학기술 발전 추세

중국은 최근 부정할 수 없을 만큼 군사과학기술의 발전을 가져왔고, 중국군의 현대화에 많은 진전을 가져왔다. 중국군 현대화에 있어서 주요한 정책은 2가지의 목표, 즉 중국군의 기계화와 정보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다. 두 가지 동시이행(2-track) 접근은 새로운 군사과학기술을 적용하여 기존의 무기체계를 업그레이드하려는 단기간의 목표와 첨단정보기술에 의한 새로운 군사혁신을 가져오려는 장기간의 목표를 동시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장기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국군은 민간산업 분야의 과학기술 기반을 중국군 군사과학기술 기반과 하나로 통합하여 추진하는 전략을 이행하고 있다. 민간분야의 용도인지 군사 분야의 용도로 개발하는지 분간하기 어렵다. 이러한 정책은 꾸준히 해외에서 부상하는 새로운 군사과학기술을 탐색하고 있으며, 유사한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국제적인(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일본, 인도 등) 연구개발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해외의 진전된 과학기술을 인지하여, 유사한 과학기술을 획득하고 확보된 기술을 중국군의 현대화에 활용하고자 하는 면이 많다. 이러한 목표와 정책은 “2006-2020 장기 국방과학기술 개발계획서”에 잘 나타나 있다.

중국 자체의 독자적이고 고유한 군사과학기술을 연구 개발하여 확보하고자 하지만,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예산을 절약하고 시간을 단축하고자 비정상적인 노력을 하기도 한다. 이는 해외 과학기술을 체계적으로 해킹에 의하여 확보하는 노력, 즉 사이버 공간에서 고도의 과학기술을 해킹하는 것이다. 또한 국제적 기술협력을 하면서 해외 과학기술을 중국으로 들여오려는 시도, 해외에서 유학하여 공부하고 연구하는 중국인을 활용하여 해외 선진기술을 가져 오려는 시도도 하고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노력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중국의 중앙 통제적인 관리 체계와 다양한 기술 분야에 걸쳐 분산되어 있는 조직의 관리나 경영 부실, 기술개발 계획 분야의 중첩, 행정조직이나 기술관리 조직의 관료화, 민군 복합조직에 의한 군사과학기술의 개발 추진 등으로 부상하는 첨단 과학기술의 자체 획득이 비효율적이고 부진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술 확보 환경을 극복하여 중국군 현대화를 이루기 위하여 2가지 정책적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1) 중국 고유의 혁신적인 과학기술개발을 통하여 뒤떨어지고 해외 의존적인 군사과학기술 기반을 확보한다. 민간과 군이 통합된 노력으로 현재의 장애를 개척하여 간다. 2) 중국군이 국경 너머의 원거리 지역에서 국가이익을 지키고 원거리 합동작전과 같은 군사작전 수행을 위하여, 중국군 현대화를 위한 군사과학기술과 무기체계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전략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진핑 정부는 민군 통합조직에 의한 군사과학기술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군이 민군 겸용기술의 연구개발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06-2020 장기 국방과학기술 개발계획서”에는 중국이 확보해야 할 민군 겸용기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미세 전자제품기술, 우주 체계, 신소재(복합재료나 합금), 추진장치, 미사일, 컴퓨터에 의한 제조기술, 그리고 정보기술 등이 그것이다. 2017년에는 민간과 군이 통합하여 군사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장기적인 국가적 전략으로 삼고 이를 감독하고 추진하는 조직으로 민군통합연구개발위원회를 당중앙위원회에 새롭게 조직하였다.

중국의 군사과학기술 분야의 전반적인 모습은 장기적인 국가 정책으로서 민군통합 기술개발 구도를 갖추고 있으며, 중국군의 현대화에 필요한 첨단 과학기술과 무기체계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은 기술적으로 앞선 무기체계를 확보함으로써 비대칭적인 전략적 이점을 획득하고 있다. 항공모함을 공격할 수 있는 대함정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사이버공간과 우주 공간을 통합하는 능력, 인공위성을 격추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과학기술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국제적인 군사협력의 부족,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전략목표의 유연성 부족 등으로 중국의 군사과학기술의 단계는 “발빠른 추격자” 또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앞선 국가를 따라잡으려는 국가”의 위치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된다.

### 러시아의 군사과학기술 발전 추세

러시아는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군사과학기술을 세밀하게 모니터링 하고 있고, 이러한 혁신적인 군사과학기술들이 장기적으로 어떠한 전략적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에 대하여 어떠한 대응수단을 강구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부상하는 군

사과과학기술에 전략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첫째는 일련의 전략적, 기술적 핵 무기체계가 더 다양한 능력을 갖추도록 개발하여 핵무기의 슈퍼파워 국가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러시아 안보의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보이며, 190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의 경제적인 어려운 시기에도 꾸준히 핵무기의 업그레이드에 노력해 왔다. 둘째는 미국과 중국의 부상하는 혁신적인 군사과학기술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국의 고유한 프로그램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 개발 프로그램의 예산이나 규모는 작아 보인다.

첫 번째의 정책인 핵무기 업그레이드를 통한 핵 강국 정책을 살펴보면, 러시아는 핵무기체계가 전략적인 억지 기능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저비용이 든다고 여기고 있다. 러시아가 운용하고 있는 전략 로켓군(strategic rocket force)은 지상에 배치되어 있는 ICBM을 운용하는 조직인데, 이 부대가 사용하는 개발 및 운용유지 군사비용이 러시아 국방비의 5% 이내로 낮은 수준으로 이다. 이는 저비용에 의하여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는 모양새이다. 주요한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우선 다양한 전략적 핵무기로 사용될 ICBM의 성능 향상이다. 이미 새로운 잠수함 발사 ICBM과 더불어 미국이 NATO에 배치하는 미사일 방어시스템에 대응할 액체 추진제를 장착한 스마트 ICBM, 고체추진제에 의한 이동식 발사가 가능한 ICBM 등이다. 특히 기차에 실려 이동이 가능한 ICBM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나아가 극초음속(hyper-sonic) 비행체를 ICBM 탄두에 적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극초음속 탄도는 그 비행 궤적을 예측할 수 없어 현재의 미사일 방어 무기체계로서는 방호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핵무기를 탑재하는 전략폭격기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기술적 핵무기도 순항미사일이나 단거리 탄도미사일, 함정에서 발사하는 각종 미사일의 탄두에 핵무기를 장착하여 운용하고 있고, 이 분야를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즉 기존의 핵무기 부대를 업그레이드된 기술적 핵무기로 재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의 정책은 새로운 군사과학기술의 자체적인 개발과 확보 정책이다. 러시아는 2012년에 고등개발기구(ARF : Advanced Research Foundation) 을 설립하였다. 이는 미국의 국방고등연구소(DARPA : Defense Advanced Research Agency) 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데, 극초음속비행체, 인공지능, 3D 프린팅, 무인잠수정, 레이저무기 등과 같이 개발 설공에 대한 고위험성은 있으나 막대한 군사적 영향을 가져올 군사과학기

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부상하는 기술을 실제적인 무기체계로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자원 부족이나 기술적인 부족이 상존한다. 국제적인 군사협력도 미국이나 유럽국가와 순조롭지 못하여 주로, 인도나 중국과 국제 기술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 미국의 군사과학기술 발전 추세

미국은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지하고 있는 미 군사력의 월등함(superiority)은 군사과학기술의 월등함에서 온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보다 월등한 군사적 능력의 우세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을 항상 모색하고 있다. 미국방부는 새로운 군사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군사 작전수행 측면에서, 군사 조직적인 측면에서, 전쟁 수행의 모든 단계에서 우세함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최근에는 조직의 민첩성(agility)을 강조하며 현대적인 군사능력의 첨단화를 상대 경쟁국가보다 빨리 가져오고, 새롭게 부상하는 민간 상업 영역의 과학기술을 신속하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첨단 무기체계를 야전에 신속하게 배치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국방부는 부상하는 민간 과학기술(사이버 기술 포함)을 군사용으로 신속히 적용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군사과학기술의 첨단화에 가속화하려 한다. 미국방부는 2014년에 제3차 상쇄전략(3rd Offset Strategy)을 수립하고 공표하였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군사과학기술 수준을 최근에 거의 따라잡았다고 보고, 미국의 군사능력이 압도적인 우세유지가 부분적으로 점점 소멸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군사과학기술 수준 차이를 상당히 벌려 놓아야 한다는 의도이다. 혁신적인 군사과학기술과 군사작전 능력을 새롭게 개발하고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이는 국방의 전반적인 면에서 혁신을 이루고자 한다. 리더십, 국방운영, 장기적인 군사과학기술 개발 분야 등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첨단기술을 식별하고 개발하여 국방에 적용하고자 한다. 미국의 3차 상쇄전략은 첨단기술에 의한 첨단 무기체계의 실험적 개발, 새로운 무기체계에 의한 새로운 군사 작전개념 창출, 향후 21세기에 걸맞은 미군의 군사전략도 수정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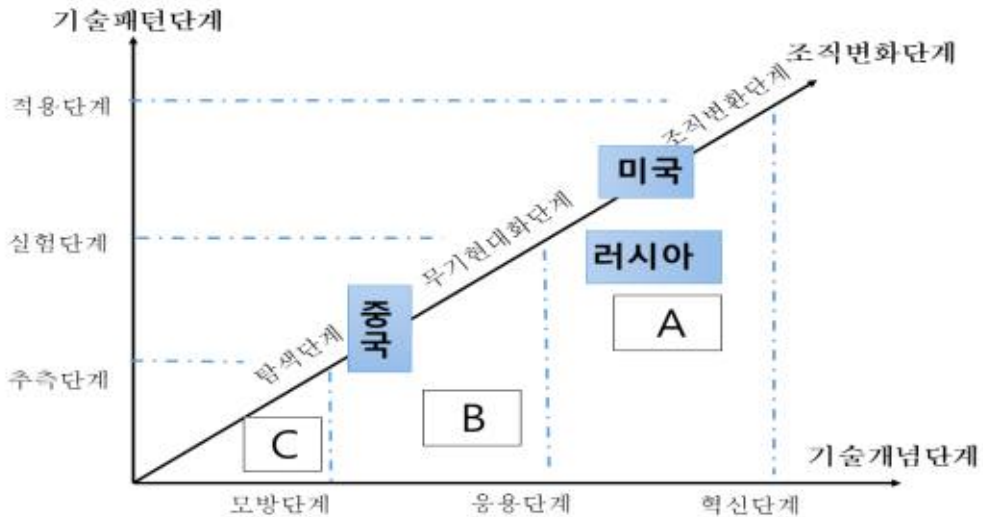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3차 상쇄전략이라는 용어는 자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그 목표와 방향은 변함이 없이 추진되고 있다. 트럼부 행정부에서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식별한 주요 군사과학기술 분야는 1) 기계학습, 인공

지능, 무인 자율무기체계의 통합으로 사이버공격, 전자전 공격, 우주 인공 위성 공격, 미사일 공격 등에 적용한다는 것, 2) 고도의 컴퓨터와 이미지 인식기술을 결합하여 전장에서 지휘관 결심지원이나 전투원 활동 지원체계를 개발하는 것, 3) 전장의 모든 비행기 조종사 및 육해공군 전투원들을 하나의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전투원과 로봇 무기체계가 팀을 편성하고 전투를 수행하는 것, 4) 이러한 모든 전투원과 무기체계, 자율 무인전투체계가 C4I체계에 통합되고 연동되어 새로운 전투능력을 만들어 내는 것 등이 포함된다.

미국이 군사적 능력과 군사과학기술에서 상대국보다 압도적인 우세함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성패는 조직의 능력과 예산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직이 민첩하게 새롭게 부상하는 군사과학기술을 발견해내고, 이를 신속하게 군사적 능력으로 활용 및 적용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또한 새로운 과학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인적 자원과 예산, 국방과학기술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 연구소의 적극적 호응 등이 필요하게 된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군사과학기술의 현 발전 단계를 종합하여 비교 평가를 해본다면, 미국은 새로운 군사과학기술의 개발이나 첨단 무기체계의 생산 능력이 국가 자체적으로 가능한 수준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정치, 경제, 사회, 창의성, 조직문화 등과 결합하여 새로운 군사과학기술의 창출이 가능한 수준이다. 중국은 자체적인 군사과학기술의 창출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은 군사과학기술의 개발이나 무기체계의 생산에 있어서 부상하는 군사과학기술을 수용하고 이를 활용하려는 국방 혁신생태계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는 이미 존재하고 가용한 군사과학기술을 복사하거나 재생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국방혁신 생태계이다. 그러나 미국이 군사과학기술 수준에서 중국과 러시아보다 과거(2000년 초반까지)에 누렸던 초격차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구조가 전 세계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과학기술의 정보를 각국이 서로 공유하는 체제가기 때문이다. 그림<2>에 이러한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군사과학기술의 발전 수준을 표시하였다.

그림 <2> 미국, 중국, 러시아의 군사과학기술 발전 단계



(\*출처: “부상하는 군사과학기술에 대한 전략적 경쟁” 미 국방대 논문, “Strategic Competition for Emerging Military Technologies, Comparative Paths and Patterns”, by Michael Rask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Prism Vol 8, No 3, Jan 2020.)

### 3. 부상하는 군사과학기술의 개발 추세

미국의 국방부와 의회는 국가 안보를 증대하고 경쟁국가 들보다 앞서가기 위하여 새롭게 부상하는 군사과학기술을 개발하고 획득하는 데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미군의 군사능력은 월등하고 압도적인 군사과학기술의 우세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민간 상업분야에서 과학기술의 급진전은 어느 한 국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고 있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파급은 미국이 누려온 전통적인 군사과학기술의 우위에 의한 군사적 이점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2014년의 미 국방부의 3차 상쇄전략은 경쟁 국가 (중국과 러시아)에게 따라잡힌 군사과학기술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새로운 첨단 군사과학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기

반으로 대규모 군사작전이나 소규모 전술의 수행 능력 즉 무기체계도 업그레이드시켜 보겠다는 것이다. 2018년 미국 국가방어전략서(National Defense Strategy)에는 이러한 제3차 상쇄전략이 녹아 들어가 있다. “미국의 국가 안보는 급변하는 전쟁의 성격 변화와 과학기술의 혁신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새롭게 부상하는 군사과학기술은 고도의 컴퓨터기술,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자율무인체계, 로봇, 지향성 에너지기술(레이저), 극초음속 비행체, 생물학 기술(biotechnology) 등인데 향후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올 기술들이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지금 미국은 여러 군사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앞서가고 있지만, 주요 경쟁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꾸준히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2020년 8월에 미 의회보고서 “부상하는 군사과학기술, Emerging Military Technologies :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에서는 현재 미국과 중국, 러시아를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군사과학기술을 다음 6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1) 인공지능, 2) 자율 무인무기체계, 3) 극초음속 무기체계, 4) 지향성 에너지(레이저) 무기, 5) 생물학 무기, 6) 양자(quantum) 기술이다. 이러한 6가지 군사과학기술 분야가 어떠한 용도의 군사과학기술이며, 미국 중국 러시아가 이 여섯 가지 분야에서 보여주고 있는 자국의 개발 추세는 어떠한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 3.1 인공지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은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지만, 통상적으로 인간의 수준과 동일한 인지(인식)능력을 갖는 컴퓨터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인공지능은 크게 둘로 대별 되는데 협소 인공지능 (narrow AI)와 보편 인공지능(general AI)이다. 협소 인공지능은 특정한 임무나 업무, 기능만을 수행하기 위해 훈련받아 수행하는 시스템이라면, 보편 인공지능은 어떤 특정한 업무영역이 아니라 인간처럼 다양하게 넓은 영역의 업무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보편 인공지능은 현재까지 아직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확률이 높다.

협소 인공지능은 최근에 군사적 용도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아직은 제한된 군사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정보, 감시정찰, 군수, 사이버 작전, 지휘통제체계, 자율 주행 장비 등에 적용되고 있다. 인공지능기술은 어떤 업

무를 수행하는 인간운용자를 대체하거나 운용자를 돕는 쪽으로 발전하여 가고 있다. 가령 1) 운용자가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보다는 인공지능이 훨씬 빠르게 소요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다. 2)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정보의 양을 분석하는 기능은 인공지능이 훨씬 우수하다. 3) 수많은 자율 무인체계가 서로 집합적으로 협력하며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예로서 집단 비행체; swarming)

이러한 인공지능도 그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훈련용 데이터의 편향된 알고리즘으로 인하여 편향된 결과(output)를 도출할 수도 있다. 인종 차별적이거나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편향적 인공지능이 군사적인 살인 무기에 적용된다면, 의도하지 않은 적 병사나 아군을 사살할 우려가 있다. 그 외에 인지능력이나 식별능력에 있어서 현재의 인공지능은 약 99.3%의 신뢰도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군사적 목표를 인지하고 식별하여 총격이나 미사일 발사를 해야 하는데 100% 신뢰도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의도하지 않는 사상자가 발생하게 된다.

####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추세

미국 국방부는 공개된 인공지능 개발 예산으로 2016년에 600만 불에서 2020년에는 927만 불로 증액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인공지능 개발 사업 수가 600여 개에 이른다고 발표하고 있다. 2019년도 국방수권법으로 국방부는 합동인공지능센터(Joint AI Center)를 설립하고, 인공지능의 개발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있다. 이 법안은 또한 국방부가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전략적 로드맵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인공지능 국가안보위원회를 설치하여 현재 국방 분야의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향후 대책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 중국의 인공지능 개발추세

중국은 미국을 가장 기술적으로 근접한 경쟁자로 보고 있다. 중국은 2017년 차세대 인공지능 개발 계획서를 작성하고, 여기에서 인공지능기술을 국제적인 경쟁에서 전략적 과학기술로 기술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에 언어인지와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하여 국내 민간 감시영역에 적용하여 왔다. 이러한 기술은 대간첩 업무나 적 타격목표 획득이라는 군사용으로 적용될 수 있다. 그밖에 다양한 종류의 육해공군 무인 지능운행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집합비행체 기술이나 사이버 공격에 사용할 인공지능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러시아의 인공지능 개발추세

러시아의 푸틴은 “인공지능에서 앞서가는 국가가 앞으로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인공지능 개발은 미국과 중국 보다 매우 뒤쳐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는 최근에 2025년까지 군사용 장비의 30%를 로봇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러시아 인공지능 기술개발은 반 자율 또는 자율무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육해공군의 이동 무기체계를 자율 무인체계화 하고자 한다. 그리고 러시아는 인공지능을 국내 민간 감시용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대미국 정보작전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 3.2 살상용 자율무기체계

#### (LAWS: Lethal Autonomous Weapon System)

미 국방부가 정의하는 살상용 자율무기체계는 완전자율체계(full autonomy), 운용자감독 자율체계(human-supervised autonomy), 반 자율체계(semi-autonomy)로 분류한다. 완전자율체계는 무기체계가 독자적으로 목표를 식별하고 가용한 무기를 운용하여 목표를 타격하는데 까지 운용자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 무기체계를 말한다. 운용자감독 자율체계는 체계의 운용 전반을 모니터링 할 수 있고 필요시에 중간단계에서 체계를 중지시킬 수 있고 목표를 변경할 수 있다. 반 자율체계는 오직 개별적인 목표 또는 특정한 목표를 운용자가 선택하여 주고 이를 타격하는 체계이다. 이러한 살상용 자율무기체계는 적과 아군을 식별할 수 있고, 적과의 교전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가용무기를 목표에 타격하는데 유도할 수 있는 고도의 컴퓨터 알고리즘과 각종 센서 등이 요구된다. 자율무기체계는 전장에서 자체 통신체계의 운용이 적에 의한 통신 방해 상황에서도 작동 가능해야 한다. 자율무기체계의 전문가들은 기존의 운용자가 운용하는 무기체계보다 군사적 목표물에만 한정하여 더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고, 부차적인 민간인 피해 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으로 30개국 165개 정부 조직들은 살상용 무기체계의 개발 및 사용 금지를 주장하며 활동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자율무기체계가 살상의 오류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도덕적으로 무분별한 살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율무기체계는 또한 해킹이나 인간운용자의 행동조작, 전장 환경변화에 따라 예상치 못한 자율적 대응, 소프트웨어의 오작동 등으로 그 위험성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 운용자가 중간단계에서 개입할 수 없다면 대규모의 비정상적인 피해나 민간인의 살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이다.

#### 미국의 LAWS

미국은 공개적으로 살상용 자율무기체계를 개발하거나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미 국방부 살상용 자율무기체계 지침(DOD Directive 3000.09)에는 개발이나 배치 운용은 금지하고 있지 않다. 이 지침을 보면 살상용 자율무기체계는 전쟁법과 조약에 상응하고 안전규칙과 교전규칙을 준수하는 무기이어야 하고, 지휘관이나 운용자가 무기 운용상 적절한 단계에서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지침은 자율무기체계가 기계학습에 의하여 기능이 향상되어 갈 때 적시적인 시험평가를 실시하여, 지휘관이나 운용자의 의도에 벗어나는 기능이라면 운용자의 관여를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 중국의 LAWS

중국은 킬러로봇을 중동지역에 수출한 적이 있다고 보도되고 있으며, 목표를 식별하여 획득하고 이를 타격할 수 있는 자율무기체계를 개발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중국은 미국처럼 살상용 무기체계의 개발에 대한 금지 조항 같은 것은 없다고 보인다. 중국이 추구하는 자율성 무기의 5가지 기능은 살상 능력, 완전 자율성(운용자의 어떠한 관여도 없는 상태), 일단 목표에 관여하기 시작하면 중간에 정지하는 등의 운용자 관여가 불가능, 목표의 종류나 목표지역 환경에 따르지 않고 가차 없는 목표 타격, 기계학습으로 운용 환경에 적응하며 기능향상 등의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 러시아의 LAWS

러시아는 살상용 자율무기체계를 “폭발물을 제외한 무인 기술수단으로 무기사용 결심 다음 단계에서 운용자의 관여 없이 의도된 목표 타격 임무를

수행하는 체계”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군사적인 목표에 대한 정확한 유도 와 타격을 가능케 하고, 부수적인 민간인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간주 한다. 러시아는 아직 공개적으로 살상용 자율무기체계의 개발에 대하여 언급 하지 않고 있지만, 지상용 무인자동차에 탑재되는 목표 식별과 타격을 위한 모듈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3.3 극초음속 무기 (Hypersonic Weapons)

극초음속 비행체는 음속의 5배인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는 무기이다.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극초음속 활강 비행체와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이다. 극초음속 활강 비행체는 로켓에서 발사되어 탄도탄 같은 고정된 타원형의 비행 궤적을 따르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대기층을 미끄러지듯이 비행한다.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은 자체 엔진을 장착하고 비행하는 동안 자체의 추진체에 의하여 비행하는 미사일이다. 이러한 극초음속 무기의 비행경로는 예측이 불가능 하고, 또한 매우 빨라서 이들에 대한 대공방어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무기전문가들은 극초음속무기에 대한 방어의 어려움이 가져올 군사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극초음속 무기의 비행시간이 짧아 상대방이 대응할 준비시간이 부족하게 되고, 비행궤도의 예측 불가능으로 상대방이 타격목표가 어디인지 모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칫 오판에 의한 대규모 타격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어떤 전문가는 극초음속 무기의 전략적 중요성이 그리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가 현재의 ICBM만으로도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뚫을 수 있고 충분한 지역을 타격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굳이 극초음속 무기의 탄도에 핵무기를 장착하여 미국을 공격할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 미국의 극초음속 무기

미 국방부는 2021년에 극초음속 무기 관련 예산으로 3.2 B\$ (약 35조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는 극초음속 방어무기 개발에 사용될 예정이다. 미 해군이 육군과 공군에서 운용될 극초음속 무기를 기존의 재래식 폭탄을 탄두에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 중이다. 미 해군이 이미 전 지구상에 30분-1시간 이내에 어떠한 목표도 타격가 능한

무기(재래식 즉각 타격 프로그램: Conventional Prompt Strike Program)를 진행하고 있었다. 미국의 극초음속무기 개발은 중국의 반억제/반접근 전략(anti-access/area denial strategy)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보고 있고, 아직은 핵무기를 탄두로 장착하는 프로그램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미국은 2023년에 야전에 배치 운용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가 핵탄두 장착용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하는 것과 다르게 재래식 탄두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핵무기 장착보다는 극초음속 무기의 정확성에 더 무게를 두고 개발하는 중이다.

####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

중국이 극초음속 무기개발에 우선순위를 높게 부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미국의 정교하게 첨단화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시스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고 있다. 또한, 미국이 중국의 주요 핵무기 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을 가해올 경우, 미국의 대공 미사일 방어망을 뚫고 공격할 미사일 자산이 부족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미 2014년 중국은 DF-41 ICBM을 개발하였는데 여기에 탑재되는 핵무기 탄두가 극초음속 비행이 가능하다. 2020년 2월 미국 북부사령관 (O'Shaughnessy)이 이러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 발표하였다. DF-41 핵탄두가 최종 단계에서 비행할 때 저고도에서 극초음속으로 비행하므로 미국의 현재 미사일 경고시스템으로는 사전경고가 어렵다고 말한다. 중국은 또한 DF-ZF라는 극초음속 비행체를 2014년 이후 9번의 시험비행을 하였는데, 이 비행체는 약 1,200마일을 사거리를 가지고 저고도로 적 방공망에 감지되지 않고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다.

#### 러시아 극초음속 무기

러시아는 미국이 유럽에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배치하자, 이에 대응하고자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8년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미국이 더 정교하고 수많은 대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추게 되어 러시아의 핵무기 보유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하여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뚫을 수 있고, 나아가 전략적인 핵무기 균형을 복구 하겠다” 고 선언하였다. 러시아는 핵탄두를 탑재한 극초음속 무기를 이미 개발하였는데 2019년에 배치 운용에 들어간 아방가르드(Avangard)와 2023년에 함정에서 배치 예정인 찌르콘(Tsirkon)이 대

표적 프로그램이다.

### 3.4 지향성 에너지 무기(Directed- Energy Weapons)

지향성 에너지 무기는 전자기적 에너지를 집중하여 사용하는 무기로서 레이저 무기가 대표적이다. 폭탄이나 미사일이 운동에너지에 사용한다면 지향성 에너지 무기는 전자기파의 에너지를 이용한다. 지향성 에너지 무기는 지상에서 단거리 대공 방어용, 무인기(드론) 격추용, 또는 단거리 미사일이나 대포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전자기파를 집중하여 발사하는 지향성 에너지 무기의 장점은 발사 당 소요비용이 매우 적다는 점이다. 레이저 무기의 경우, 전력 사용량과 비슷하여 한 번의 발사 비용이 1~20 \$ (약 천원~2만 원) 수준이다. 그리고 발사 수량도 전원이 충분하다면 거의 무한정 발사가 가능하다. 적의 드론 공격이나 다량의 드론 집합체의 공격에 저비용으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지향성 에너지의 또 다른 형태는 적의 컴퓨터나 통신 전자장비의 회로를 녹이는 전자기폭탄(EMP), 밀집된 인원에게 대한 열선 발사, 소음 발사 시스템 등이 있다.

#### 미국의 지향성 에너지 무기

미국은 1960년대부터 지향성 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하였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는데, 국방비의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민간 상업영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레이저 개발을 가져다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적 문제는 레이저 빔의 균질성 부족과 빔 세기(파워)의 통제 어려움, 그리고 레이저 발사장치의 크기가 커서 무기체계에 탑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 해군이 2014년 함정에 약 30KW 레이저 빔을 발사할 수 있는 초도 생산품을 시험 배치하였다. 이는 적 병사의 일시적 시력 마비, 드론 비행체의 격추, 적 함정의 부분적 파괴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 해군은 2021년에 60KW 레이저 빔 출력을 갖는 시스템을 배치 운영할 계획이다. 미 육군은 스트라이커 장갑차에 약 50 KW 레이저 빔 출력의 시스템을 2022년에 탑재할 계획이다. 미국은 국방고등연구소(DARPA)를 중심으로 향후 150-300 KW 레이저빔 출력이 가능한 시스템을 2024년까지 개

발 중이며, 이는 탄도미사일을 격추 무력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중국의 지향성 에너지 무기

중국은 LW-30 이라는 30KW 레이저빔 출력이 가능한 지상 이동 차량에 탑재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고 공표하였다. 공중 비행기에 탑재하여 적 공군기를 격추할 수 있는 레이저빔 체계를 개발 중이다. 중국은 인공위성의 격추에도 레이저빔을 운용할 예정으로 2020년까지 저고도로 비행하는 인공 위성을 공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 러시아 지향성 에너지 무기

러시아는 2018년 지상에서 레이저빔을 발사하여 GPS 위성시스템을 교란 하고 기능을 저해하는 체계(일명 Peresvet)를 개발하여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3.5 생물학 기술 (Biotechnology)

생물학 기술은 군사적 적용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안보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기술로서 저비용으로 유전자 조작 편집이 가능한 기술인 유전자가위 기술인 크리스퍼(CRISPR; Clustered Regularly Interspaced Short Palindromic Repeat)기술이다. 이는 유전자나 DNA를 편집 수정 조작하여 식물, 동물, 사람의 기능이나 능력을 증대시키고 특별한 기능을 증가 확대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 전장에서 전투원에게 유리한 신체적 기능으로 지구력이나 근력을 선별적으로 증가시키고, 또한 화학 무기나 생물학 무기의 개발에 적용된다. 2016년 미국의 정보 단체들은 유전자 조작기술은 대량살상 무기화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많다고 선포하였다. 여기서 특히 우려되는 점은 윤리적 도덕적 기준에 벗어나 인간을 개조 하고 특출한 능력을 보유한 인간을 만들어 보려는 시도이다.

#### 미국의 생물학 기술

2017년 트럼프 행정부는 생물학 방어 국가전략(National Biodefense

Strategy)를 발표하고, 국가가 당면할 생물학적 위협을 평가하고, 미리 예방하고, 대응 준비를 하고, 필요시에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국가적 활동을 관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미국이 공개하는 생물학 기술, 즉 군사적 용도로의 개발 프로그램은 전장에서의 약품이나 전장에서의 신속한 진단과 치료에 대한 것들이다. 예를 들어, 전장 트로마(trauma)에 의한 두뇌 손상의 최소화, 전상에 의한 심리적 질환의 치료, 생물학적 전염병으로부터 음식물 보호 방안 등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또 다른 예로, 생물학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센서와 신소재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전장에서 전투원이 “더 튼튼하고, 더 스마트하고, 더 능력이 많고, 더 많은 인내력”을 갖추게 하는 생물학 기술도 연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인륜적, 도덕적으로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1974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은 대통령 산하에 생물윤리위원회를 두고 있었지만, 현재는 인륜적 도덕적 우려를 검토하는 국가적 기구는 없다.

#### 중국의 생물학 기술

중국은 노령인구의 증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로 생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나서는 이유이기도 하다. 중국은 공격적으로 유전자 편집기술과 정확한 약효를 보이는 약품 제조에 나서고 있다. 2016년 중국은 세계 최초로 인간의 유전자 조작을 위해 유전자가위 기술(CRISPR)을 사용하였다. 2018년에는 아마 중국 정부의 허락 하에 유전자가 편집된 아기를 생산하였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국가 유전자은행 (National Genebank)을 보유하며, 미국이 보유한 유전자 데이터를 포함하여 더 많은 유전자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개별적인 질병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라 생물학 무기의 개발에도 사용될 수 있다. 민간과 군이 합병되어 민군 통합 기술을 개발하는 중국의 체제에서는 민간의 앞서가는 생물학 기술을 군사용으로 전환 적용이 매우 쉬울 것으로 보인다.

#### 러시아의 생물학 기술

러시아는 2012년에 ‘BIO 2020’ 이라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서를 발표하였지만, 미국이나 중국보다는 그 기술의 개발 수준이 매우 뒤처져 있다고 보인다. 생물학 기술을 이용한 약품, 생물학 기술의 산업, 음식이나 식물 등 환경을 보호하는 기술 등을 개발하겠다는 목표는 제시되어 있지만, 공개적

으로 공표한 프로그램은 알려진 것이 별로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영국에서 활동하는 러시아 이중간첩에게 러시아 비밀공작원들이 신경작용제로 공격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는 러시아가 과거 소련부터 전통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생물학, 화학 무기 개발은 비밀리에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 3.6 양자기술 (Quantum Technology)

양자기술은 양자물리학(Quantum Physics)의 원리를 기술적으로 적용하는 분야로 해석될 수 있다. 양자기술은 아직은 시작 단계로서 성숙 단계라고 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렇지만 미래의 군사용 통신, 암호화, 스텔스 기술 등에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미국의 국방부와 감사원은 장차 양자통신 기술이 발전하면, 경쟁국가들이 보안이 철저한 통신수단을 갖추게 될 것이며, 이는 미군이 도청하거나 적국의 암호를 풀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에 양자 컴퓨터 기술은 상대방 경쟁 국가가 미국의 암호화된 민감한 정보들을 쉽게 해독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또한, 양자 기술이 군사용 양자 레이더에 적용된다면, 현재 운용 중인 레이더로 탐지할 수 없는 스텔스 전투기(F-22, F-35)를 그 위치나 속도에 대하여 정확하게 탐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양자 탐지기술은 나아가 바다의 잠수함 위치의 탐지가 더욱 용이하게 하여, 바다 속을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기술로 여겨진다. 아직은 양자기술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몇 가지 제한사항이 있다. 즉 양자 상태의 불안정성, 미세한 진동의 영향, 온도와 같은 주위 환경에 민감성 등이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첨단소재나 추가적인 기술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 미국의 양자기술 개발

미국의 국방과학위원회가 군사적으로 적용될 3가지 양자 기술을 발표하였다. 양자 탐지기술(quantum sensing)과 양자 컴퓨터 기술(quantum computing), 양자 통신기술(quantum communication)이다. 양자 탐지기술은 미군의 군사적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특히 GPS 신호가 약해지거나 재밍에 의해 거부당할 때 정밀 항법장치에 적용될

수 있다. 양자컴퓨터 기술은 적 암호 해석이나 각종 신호처리, 인공지능에 필요한 대규모의 계산능력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양자통신 기술은 미 국방부 전체의 네트워크 연결에 지대한 능력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2019년 국방수권법은 국방부가 미국 정부 내 각 부처와 민간 연구기구와 대학에서 수행하고 있는 양자 정보기술의 연구개발에 대하여 통합과 협조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연구개발 계획을 국방부가 책임지고 의회에 2020년 말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대 전 세계적인 경쟁 국가들의 양자기술의 현황과 수준에 대한 평가도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 중국의 양자기술 개발

중국은 점차 다른 군사과학기술의 개발보다 우선하여 양자기술 분야를 개발하려는 의도를 나타낸다. 국가 과학기술 혁신 계획서에서 2030년까지 양자 통신기술과 양자 컴퓨터기술에서 주요한 돌파구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양자기술 분야에서는 세계를 리드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2016년에 처음으로 인공위성을 통한 양자 암호화 통신이 가능한 것임을 시현 하였고, 2017년에는 양자 암호화 통신에 의한 국제영상회의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더구나 북경과 상하이 사이에 약 2,000Km에 달하는 양자 통신 네트워크를 건설하고 전국적인 양자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

#### 러시아의 양자기술 개발

러시아의 양자기술 개발은 인공지능 개발 낙후와 더불어 미국과 중국에 비하면 상당히 미진한 상태로 보인다. 러시아는 양자 컴퓨터 기술에서 중국과 미국보다 5-10년 정도 뒤쳐져 있다. 이러한 미진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2019년에 러시아 양자기술 로드맵을 작성하고 예산도 5년간 약 790만 불을 투자한다고 공표하였다.



#### 4. 시사하는 점

새롭게 부상하는 첨단 군사과학기술이 미래 전쟁이나 국가 안보에 시사하는 바는 여러 가지이다. 우선 현재 부상하고 있는 군사과학기술의 여러 가지 특성을 보면 향후 전쟁이나 전투 양상, 국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잠재적으로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이나 빅 데이터의 분석능력, 무인 자율무기체계 등은 저장에서 전투원이나 무기 운용자의 수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보이고, 나아가 무기의 전투 효과를 증대시킬 것이며, 전투의 진행속도를 가속 시킬 것으로 보인다. 저비용의 드론 무기체계는 전장에서 사용될 무기체계의 수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무기의 수적인 우세를 통한 전승을 가져 왔었다. 공격만이 승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고정 관념도 바뀔 수 있다. 즉 공격과 방어, 무기체계의 수량과 질 등에 대한 개념이 바뀔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수의 군집형태 무인드론에 의해 협조된 공격은 적 방어체계를 쉽게 무너뜨릴 수 있고, 공격자에게 커다란 이점을 줄 수 있다. 지향성 에너지(레이저) 무기체계는 저비용으로 군집형 드론의 공격을 무력화할 수 있어 공격자보다는 방어자에게 큰 이점을 제공한다.

여러 분야의 군사과학기술들이 서로 통합되고 결합하면 기존의 무기체계의 능력이나 새로운 무기체계의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고, 전쟁의 결과나 전략적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기술이 양자 컴퓨터 기술과 결합하여 적용된다면 그 무기체계가 더욱 강력한 기계학습이 가능하게 된다. 더욱 정교한 목표 식별과 이미지 인식이 가능하여 자율 무인무기체계의 성능이 고도화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이 5G와 같은 통신기술과 결합하면 전투원의 가상훈련체계가 더욱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고, 인공지능 기술이 생물학 기술과 결합하면 인간 두뇌와 컴퓨터의 연결이 가능하고 인간에 의한 로봇 무기의 조정이 용이하여 질 수 있다.

나토(NATO)의 "2020-40 과학기술발전 추세; Science & Technology Trends: 2020-2040"에서는 향후 나토의 군사작전과 국방 능력에 영향을 미칠 주요 혁신적인 과학기술을 식별하고 평가하였다. 약 6,000 명의 과학자, 분석가, 연구자, 공학자 등과 협조하여 군사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최근 부상하고 있는 군사과학기술 발전 추세를 평가하고 분석한 문서이

다. 향후 20년간 과학기술의 발전 방향의 성격을 4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지능적인(intelligent) 기술, 상호 연결된(interconnected) 기술, 분산된(distributed) 기술, 디지털(digital) 기술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새로운 과학기술이 향후 나토 동맹국의 군사작전이나 조직의 효과성을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나토 과학기술기구는 이러한 4가지 특성을 가진, 향후 20년에 걸쳐 군사 전략적 측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군사과학 기술 분야를 8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이들 8개 군사과학기술 분야는 상호 관련되어 있으며, 아직 초기 단계의 기술도 있고,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는 기술도 있다. 그 8가지 과학기술 분야는 1) 데이터(data), 2) 인공지능(AI), 3) 무인자율기술(autonomy), 4) 우주기술(space), 5) 극초음속기술(hypersonics) 6) 양자기술(Quantum), 7) 생물학기술(biotechnology), 10) 신소재(materials) 이다. 이러한 기술은 상호 융합되고, 상호 의존하여 이용될 경우에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예를 들어, 3가지 기술, 데이터-인공지능-무인자율기술이 연결되고 통합된다면, 빅 데이터에 대한 고도의 분석능력, 신속하고 정확한 인공지능, 광범위한 지역에서 무인으로 작동하는 각종 탐지기와 무인무기체계가 통합된다. 전장에서 신속한 결심과 작전 수행으로 군사 전략적 이점이 막대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이러한 복잡한 무기체계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고 오류가 발생한다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가령 자율 무인무기체계가 적절하지 못한 목표를 적으로 인식하고 탄약이 떨어질 때까지 스스로 운용된다면 민간인의 대량 살상이나 부수적인 피해를 가져 올 수 있다. 그래서 새롭게 부상하는 군사과학기술의 군사적 적용에 있어서 도덕적 고려사항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자율 살상무기는 그 연구개발과 사용을 금지해야 하며, 작동과정의 여러 단계에서 운용자의 판단이 적절하게 입력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1989년 헤이그회의에서 살상 자율 무인무기는 사용을 금지해야 하고, 그 사용은 인간 존엄을 고려하여 일반 대중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생물학 기술의 군사적 적용도 도덕적으로 고려할 점이 많다. 생물학 기술의 개발과정에서 인간에게 직접 실험을 하거나, 인간을 해치기 위한 무기로 개발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비윤리적이므로 적절히 통제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군사과학기술은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되어 그

기술이 구현되어 갈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현재까지 선진국을 중심으로 인류는 공격용이건 방어용이건 꾸준히 새로운 무기체계를 발명하고 개발하는 역사를 지니고 있다. 약 70년 전에 개발한 핵무기도 그러한 무기 중의 하나이지만, 인류는 적절한 통제장치와 사용의 자제력을 발휘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는 새롭게 부상하는 군사과학기술을 개발하고 획득하여 이를 군사용으로 적용하고자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다. 군사과학기술이 상대방 국가보다 유리한 전략적 이점 가져오고 유리한 전략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요소라고 간주하고 있다. 군사과학기술을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군사과학기술의 경쟁에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는 전략적 경쟁의 4가지 이론적 양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1) 거부전략, 2) 비용 설득전략, 3) 상대방 전략에 대한 공격, 4) 상대방 정치체제 공격이다. 거부전략은 상대 경쟁 국가에게 군사적 정치적 공격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포기하게 하는 전략이다. 비용설득전략은 상대 경쟁 국가가 추구하는 어떠한 정책이 비용이 과다하게 소모됨을 보여주어서 추구하는 정책을 바꾸게 하는 전략이다. 상대방 전략에 대한 공격은 상대 경쟁국이 추구하는 정책이 결국에는 자국을 망치고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략이다. 상대방 정치체제 공격은 상대 경쟁국의 저항세력을 활용하여 공격하는 전략이다. 이러한 4가지 전략적 경쟁 양상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서로 경쟁하는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 대규모의 전쟁이나 분쟁은 피하려는 것처럼 보이나,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국지적 영토분쟁, 군비경쟁, 군사과학기술과 첨단무기체계의 개발 경쟁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세 국가는 전시가 아니 평시에도 비군사적 영역에서 전략적으로 경쟁하는 양상을 보인다. 예로서 상호 간 정보(사이버)전쟁, 경제영역에서의 전쟁 등으로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자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새로운 첨단 군사과학기술이 동북아 지역 안보와 군사현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군사과학기술은 무엇인가를 인지하고 식별하며,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과 대안을 찾아내고, 한반도 주변 지역에서 고강도 분쟁이나 저 강도 분쟁에 첨단 군사과학기술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 5. 결 론

군사과학기술은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기반이 되고 있지만, 민간 과학기술의 영역과 대부분 겹친다고 할 수 있다. 한 국가의 과학기술 수준은 군사과학기술의 수준을 결정하고, 이는 그 국가의 군사력 및 군사적 능력과 직결되어 국가 안보에 중요한 요소이다. 나아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 2020년 현재 미국과 중국 러시아에서 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군사과학기술이 어떠한 것들인가를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현재 이들 3개국에서 부상하고 있는 첨단 군사과학기술은 6가지 분야로 요약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2) 자율 무인무기체계, 3) 극초음속 무기체계, 4) 지향성 에너지(레이저) 무기, 5) 생물학 무기, 6) 양자(quantum) 기술이다. 이러한 첨단과학기술에 대한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과학기술 발전 수준을 비교 평가해 보면, 미국은 새로운 군사과학기술의 개발이나 첨단 무기체계의 생산 능력이 국가 자체적으로 가능한 수준이다. 과학기술이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창의성, 조직문화 등과 결합하여 새로운 군사과학기술의 창출이 가능한 수준이다. 중국은 자체적인 군사과학기술의 창출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은 군사과학기술의 개발이나 무기체계의 생산에 있어서 부상하는 군사과학기술을 수용하고 이를 활용하려는 국방 혁신생태계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는 이미 존재하고 가용한 군사과학기술을 복사하거나 재생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이 과거 2000년 초반 이전까지 유지하여 온 과학기술 수준의 초격차가 많이 좁혀졌고, 일부 과학기술 분야는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3국이 새롭게 부상하는 첨단 군사과학기술을 확보하여 각국 고유의 군사 능력으로 확보하고자 자체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3개국에서 부상하고 있는 군사과학기술 6가지 분야에 대한 개발 추세를 보면, 일부 분야에서는 이미 무기체계화하여 실전에 배치하였고, 일부 분야는 아직도 기초연구 단계인 것도 있으나, 2개 이상의 분야를 서로 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두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미국이 단연 모든 분야에서 앞서 있지만, 중국은 인공지능 분야와 양자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유사한 과학기술 수준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러 분야의 군사과학기술들이 서로 통합되고 결합하면 기존의 무기체계이건 새로운 무기체계이건 그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고, 평시의 전략적 상황이나 전쟁의 결과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에서도 새롭게 부상하는 첨단 군사과학기술의 확보는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이다. 우리 한국군에 요구되는 첨단 군사과학기술이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이를 확보하여 군사 전략적 이점으로 활용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부상하는 군사과학기술에 대한 전략적 경쟁” 미 국방대 논문, “Strategic Competition for Emerging Military Technologies, Comparative Paths and Patterns”, by Michael Rask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Prism Vol 8, No 3, Jan 2020
2. “부상하는 군사과학기술”, 미 의회 보고서, “Emerging Military Technologies :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August 2020,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R46458, Kelly M. Sayler
3. “2020-40 과학기술 발전 추세”, 나토 과학기술기구, “Science & Technology Trends: 2020-2040”, NATO Science & Technology Organization, March 2020.
4. Alex Kessler, “Do Better Weapons Win Wars? The Role of Technology in Warfare” Feb 2, 2011
5. 중앙일보 2019.5.24.(금), 美 '국방수권법안'서 첨단기술전 선포…"중국군 연계 연구소 명단 내라"

<abstract>

## Current Trends of Emerging Military Technologies

Kim, Jong Ryul (Yeungnam University)

The military technology has been a crucial element of the national military power and military capabilities. It considers also a major factor to the winning of a war. This thesis analyzes the developing emerging military technologies in US, China and Russia. The 6 areas of technologies are emerging; artificial intelligence, lethal autonomous weapons, hypersonic weapons, directed energy weapons, biotechnology, and quantum technology. Strategic competitions between 3 powerful countries to gain strategic advantage relative to peer adversaries. Overall the United States continues its military innovation lead in most of those emerging technologies. Some technologies appear to be lead by China. For Korea, the required emerging military technologies should be defined and acquired to the military strategic point of view.

**Key Words** : Military Technology, AI, Autonomous Weapon, Hypersonic Weapon, Directed energy weapon, biotechnology, quantum technology.

# 북한의 핵공격에 대응한 한국의 자위적 선제공격전략의 타당성 검토

## 전 상 조<sup>1)</sup>

---

### 순 서

1. 서론
  2. 북한의 핵위협과 핵억제전략
  3. 선제공격과 자위권에 대한 이론적 고찰
  4. 한국군의 자위적 선제공격전략 적용 방안
  5. 결론
- 

### 요 약

북한은 2013년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 미사일에 탑재 가능할 수준으로 핵무기를 “소형화, 경량화”하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하였다. 이것은 실제로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의도와 능력을 구비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은 자체적인 방어책인 “킬체인(Kill-chain)” 개념에 의거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의도에 대한 명백한 징후가 확인되면 선제공격으로 발사 이전에 파괴 또는 무력화할 수 있는 계획과 능력을 구비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일명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로 공격해오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계획과 능력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점증하는 핵무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

---

1) 영남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21700094@ynu.ac.kr



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위적인 선제공격에 대한 개념과 선제공격을 위한 여건 및 구비조건을 분석하여 한반도 상황에 적용 가능한 지를 알아보고, 실제적인 자위적 선제공격을 위한 정당성 확보와 실행능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키워드 :** 선제공격, 기습, 예방전쟁, 자위권, 복핵문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 1. 서 론

북한은 2013년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정도로 핵무기를 “소형화, 경량화”하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하였다. 이것은 실제로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핵무기 공격의도와 능력을 구비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한국은 자체적인 방어책인 “킬체인(Kill-chain)” 개념에 의거하여 북한이 핵미사일로 공격하겠다는 의도와 명백한 징후가 확인되면 선제공격(pre-emptive Attack)으로 발사 직전에 지상에서 파괴할 수 있는 계획과 능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일명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로 북한의 핵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할 수 있는 계획과 능력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개전 초기의 기습은 적에 대하여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으며 기습 그 자체가 전승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니었다. 그러나 현대전에서는 일단 기습을 당하게 되면 군사적으로는 물론 정치·경제·사회 등 여러 면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고, 이를 회복하는데 많은 부담이 강요됨으로써 모든 국가는 이를 억제 또는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sup>2)</sup>

따라서 본고의 연구목적은 북한의 점증하는 핵무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책인 자위적인 선제공격의 일반적 개념을 고찰한 후, 선제공격을 위한 여건 및 구비조건을 분석하여 이를 한반도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 검증한 다음, 실제적인 선제공격 실행을 위한 정당성 확보와 능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4가지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첫째, 선제공격(pre-emptive Attack)이란 무엇이며, 기습(Surprise Attack) 및 예방전쟁(Preventive War)과는 어떻게 구별되는가?

둘째, 선제공격을 위한 전략적 환경 즉, 여건은 무엇인가?

셋째, 선제공격을 위해서 갖추어야 할 구비조건은 무엇이며, 선제공격이 갖는 유·불리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넷째, 선제공격의 개념, 및 여건, 구비조건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공격에 대한 자위적 선제공격은 가능한가? 그래서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공격으로부터 한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가? 또

---

2) Richard k. Betts, *Surprise Attack*, 전사편찬위원회 역, [기습](서울:전사편찬위원회, 1984) p.1.

한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공격에 대한 선제공격의 정당성 확보와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인가?

본고는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지금까지 논의된 각종 문헌연구와 사례를 중심으로 한 기술적 분석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연구의 범위는 이론적 연구를 중심으로 북한의 핵문제와 한반도 상황을 연계하여 제기된 문제들을 검증하는 것으로 제한하였다.

본고의 내용 중 일부에 개인적 사건이 반영되었으므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고 정확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 많은 전문가들의 연구가 이어지길 바란다.

## 2. 북한의 핵위협과 핵억제전략

### 2.1 북한의 핵무기 위협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에 이르는 기간에 구 소련의 붕괴와 동독의 서독으로 흡수통일을 목도한 북한은 안전보장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추진해 왔다. 또한 북한은 2011년 리비아 독재자 카다피 정권이 몰락하자 카다피가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스스로 폐기했기 때문이라는 인식하에 핵무기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것은 2011년 3월 북한 외무성이 “리비아 핵 포기 방식은 안전담보와 관계개선이라는 사탕발림으로 무장 해제를 성사시킨 다음, 군사적으로 덮치는 침략방식”이라고 비난한 것이나, 2013년 3월에 개최된 당중앙위원회에서 김정은이 “강력한 자위적 국방력을 갖추지 못하고 제국주의자들의 압력과 회유에 못 이겨서 이미 있던 전쟁 억제력마저 포기했다가 종당에는 침략의 희생물이 되고만 중동지역 국가의 교훈을 절대 잊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한 것에서 김정은은 결코 핵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카다피 몰락을 목도한 북한 김정은은 핵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등 제반 핵무기와 투발 수단 개발을 추진하였다. 그로한 가운데 김정은이 사망하자 김정은은 더욱 핵 개발을 추진하면서 국제사회와 대립과 갈등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만이 정권의 안전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유일무이한 선택으로 믿고, 주민들의 굶주림에 상관없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집착하는 것이다.

### 2.1.1 북한의 핵무기 개발 경과

북한은 한반도 공산화 전략하에 대규모 공격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핵과 탄도미사일, 화생무기 등 소위 비대칭 전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왔다. 특히 북한은 1953년 3월 구 소련과 ‘원자력 평화적 이용협정’을 체결한 이후, 1963년에 소형원자로를 도입하였으며, 1970년대에는 핵연료 가공기술을 연구하였고, 1980년대 이후에는 5MW 원자로 가동과 폐연료봉 재처리를 통해서 핵물질을 확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06년 10월에 북한은 마침내 1차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이후 북한은 2009년 5월에 2차 핵실험, 2013년 2월에 3차 핵실험, 2016년 1월에는 제 4차 수소탄 핵실험, 2016년 9월 제 5차 핵실험, 2017년 9월에는 제6차 핵실험을 강행하여 화성14호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소형화 완성단계에 성공했다고 공식화한 상황이다.

### 2.1.2 핵 능력

북한은 1992년 5월 영변 5MWe 원자로에서 연료봉을 인출하였고, 더 나아가 플루토늄 10~14Kg을 추출하여 1~2개의 핵무기를 제조하여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북한은 2003년부터 폐연료봉 8,000개를 재처리하여 20Kt급 핵탄두 6~9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의 플루토늄 약 40~50Kg정도를 추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2013년 2월에 실시한 3차 핵실험이 우라늄탄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는 이미 핵무기를 소형화에 성공했고, 북한의 우라늄 매장량을 고려할 때 200Kg 내외의 핵물질을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북한은 이미 상당수의 핵무기를 생산 가능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북한은 “2016년 1월 6일 첫 수소탄 실험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소형화된 수소탄의 위력을 과학적으로 해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미국지질조사국(USGS), 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와 중국지진센터 등은 규모 5.1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고, 한국 기상청도 인공지진으로 규모를 4.3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북한의 5차 핵실험(2016년 9월)을 통해 전략탄도로켓들에 장착할 수 있게 표준화하였다고 했으며, 5차 핵실험 위력은 10Kt 이상으로 증폭핵분열실험 및 핵탄두실험이 성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더 나아가 지그프리트 해커(Siefred S. Hecker)박사는 북한의 핵개발 능력에 대해 ‘300~400Kg 고농축우라늄을 비축하고 있고, 추가로 150Kg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며, 플루토늄 생산기술은 연 6Kg로 이는 6~8개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양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를 종합해보면 북한은 2016 연말에 이미 200개의 핵 폭탄 제조가 가능한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고, 매년 7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2017년 9월 제6차 핵실험을 실시함으로써 ‘화성 14형 미사일에 장착 가능한 수소탄을 개발했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따라서 북핵 전문가들은 북한이 1~6차 핵실험을 통해서 볼 때, 북한은 이미 핵 무기 생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충분히 비축하고 있고, 핵실험을 통한 기술 축적과 생산 능력, 가공할 만한 폭발력을 갖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2.2 핵억제 및 대응전략

핵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응전략에는 일반적으로 3가지로 분류한다. 먼저 핵미사일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전략은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핵무기 사용을 거부하게 하는 ‘억제전략’이 있다. 또 핵미사일 공격이 임박한 경우에 먼저 공격하여 파괴하는 ‘공격전략’과 발사된 핵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전략’이 있다.<sup>3)</sup>

### 2.2.1 억제(deterrence)전략

억제전략은 상대방이 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활동으로 ‘응징에 의한 억제(deterrence by punishment)’라고 한다. 한국은 미국이 제공하는 핵 확장억제와 핵우산 개념을 기반으로 적의 핵무기 위협을 억제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물론 한국도 자체적으로 북한이 핵무기 공격시 응징/보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비록 재래식 무기이지만 각종 지대지 미사일과 스텔스 전투기, 대포와 다련장포, 전투함/잠수함 등을 보유하고 있어 북한 전 지역에 대해 막대한 피해를 가할 수 있다

### 2.2.2 공격전략

공격전략은 적의 핵무기의 사용이 임박한 상황에서 적의 핵미사일을 공격하여 발사 이전에 지상에서 파괴하는 전략을 말한다. 이러한 공격전략은 적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시기적으로 임박했다고 판단된 경우에 적용하는 전략으로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시행될 경우 불법적인 공격행위로 인식되어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고,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자초할 수 있다. 또한 선제공격으로 적의 핵무기를 완전하게 파괴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대규모 핵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sup>4)</sup>

이와 같은 공격전략은 국제법적인 근거인 UN 헌장에 명시된 자위권(right of self-defense) 개념과 관습적인 국제법상을 기반으로 그 정당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공격여건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상당한 공격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핵 관련

3) 박휘락, 『북핵 위협과 대응』, pp. 64. 파주. 한국학술정보

4) 박휘락, 앞의 책, pp. 65.

정보는 주로 미측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도에는 제한사항이 많다. 특히 북한의 강력한 보안 대책과 더불어 핵공격 임박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부족하고, 분산되어 있는 핵시설과 실시간에 이동형 미사일 발사대 위치를 파악하여 타격하기에는 제한사항이 너무나 많다. 이와 같이 제한된 정보와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제공격이 실패할 경우에는 북한의 핵공격이나 전면전까지도 감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2.2.3 방어전략

핵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전략은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미사일은 항공기에 비해 속도가 빠르고 소형이며, 고고도 비행 등으로 격추는 물론, 탐지·추적, 타격도 쉽지 않다.<sup>5)</sup> 그래서 핵미사일 방어체계는 고도의 기술과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전략구현을 주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핵미사일의 비행경로를 추적하여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장거리 지상배치요격미사일(GBI : Ground-based interceptor)을 2004년부터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운용중이며, 해상배치요격미사일(Sea-based interceptor)을 탑재한 이지스순양함과 중거리 요격미사일(THAAD : Theater High Altitude Area Defense)과 지역 방공무기인 PAC-3를 배치하여 운용하는 등 다층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한 상태이다.<sup>6)</sup>

한국은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사드 배치에 대한 공식 협의하였고, 7월에 사드를 주한 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하여 경북 성주군에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하였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M-SAM(한국형 패트리엇)과 L-SAM(한국형 사드) 등 미사일 방어체계를 국산화를 추진하여 종국적으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인 KAMD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구축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 의도를 포기하게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다.

## 3. 선제공격과 자위권에 대한 이론적 고찰

### 3.1 선제공격의 개념 이해

---

5) 박휘락, 앞의 책, pp. 86.

6) 박휘락, 앞의 책, pp. 90~91.

### 3.1.1 선제공격(Pre-emptive Attack)과 기습공격(Surprise Attack)

전쟁에서 적이 충분한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치명적인 일격을 가한다면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명백한 논리이다.<sup>7)</sup> 기습이나 선제공격이 적에게 먼저 공격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유사하나 이 두 용어상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먼저 기습(Surprise)이란 적이 예상하지 못한 시간, 장소, 방법 등으로 적을 강타하는 것<sup>8)</sup>으로써 국어대사전에서는 “교묘한 꾀로 적진을 불의에 습격하는 것”<sup>9)</sup>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클라우제비츠(Clauswitz)는 전쟁론 제3편(전략일반)에서 “기습은 결정적 지점에서 상대적 우세를 부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특히 모든 방책을 강구한 후에 병력을 교묘히 분할 사용해서 실시하는 공격수단을 의미한다.”<sup>10)</sup>라고 하여 기습이 상대적 우세를 달성하는데 유리하다고 강조되었다.

이와 같이 기습은 피아전투력의 균형을 결정적으로 아군에게 유리하게 전환시킬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은 기습은 적이 예기치 못한 시간과 장소, 방법으로 공격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적이 모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이 알았다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sup>11)</sup>

반면에 선제공격(Pre-emptive)은 적이 막 공격하려 하거나 공격 시작 직후에 이를 탐지한 국가가 실시하는 공격이다.<sup>12)</sup> 선제공격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많이 사용되었지만 그 이후에는 전쟁억제 측면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국가들 간의 국지적인 전쟁에서 다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선제공격은 첨단과학기술과 정보수집능력이 아무리 발달한다 하더라도 기습을 추구하는 적의 의도를 정확히 판단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전쟁을 유발하거나 또는 전쟁도발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적의 의도에 휘말려 들어갈 가능성 충분히 있다.

이와 같이 선제공격과 기습은 상대국이 전쟁 개시이전에 공격을 실시할 의사 여부에 따라 구분되며, 적의 공격의도와 징후가 임박하다면 선제공격이 되는 것이고, 징후가 없거나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며 침략적인 기습공격이 되는 것이다.

### 3.1.2 선제공격(Pre-emptive Attack)과 예방전쟁(Preventive War)

선제공격은 양자가 공히 전쟁의 불가역성을 인식하고 어느 한쪽이 먼저 선수를

7) 본향건, 국대원 역, 「전쟁과 철학」(국방대학원, 1982), p.320.

8) 신정도, 「전략학 원론」(서울 : 동서병학사, 1970), p.236.

9) 양주동 감수, 「국어대사전」(서울 : 동아출판사, 1985), p.213.

10) Clausewitz, On War, 이종학 역, 「전쟁론」(서울 : 일조각, 1989), p.97.

11) 「전략전술용어집」(육군본부, 1984), p.97.

12) 신재균, [선제공격의 적용성 연구: 제3.4차 중동전을 중심으로] (국대원 석사학위 논문, 1986), p.7.

치는 것임에 반해, 예방전쟁은 상대방보다 아측이 전쟁의 불가역성을 더 긴밀하게 인식하고 개전을 하는 것이 차이점이다.<sup>13)</sup>

반면 예방전쟁은 전쟁도발이 당장 급박한 상황은 아니지만 조만간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이 유리한 전략상황에서 전쟁을 개시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적보다 먼저 전쟁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예방전쟁의 동기는 첫째, 아군의 능력이 어느 시점에서 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시기를 적절히 이용하는 것이고, 둘째, 현재는 피아전력이 대등하지만 조만간에 적의 능력이 더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 개전을 결심을 하는 것이다.

예방전쟁은 그 자신이 기선을 취한 행위의 결과이나, 선제공격은 적의 공격이 막 시작될 때 적에 대해 공격을 가하거나 적이 공격 직후에 실시하는 공격 행위이다.

선제공격과 예방전쟁은 미리 응징한다는 점에는 유사하나, 선제공격에서는 그 사실적 응징은 상대방이 이미 개시한 행동에 지향되고, 그러한 적의 공격행동이 실제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필연적인 확실성이 있다. 그러나 예방전쟁은 지나쳐 버릴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또는 적이 취하려고 하는 행위나 취할 가능성을 나타내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행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 미래에나 행동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환경은 아직도 전쟁의 도발을 막을 수 있도록 발전될 수도 있다. 따라서 예방전쟁은 예상되는 적의 행동에 대해서 확실성이 적을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바로 예방전쟁을 합리화 시킬 수 있는 타당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 3.1.3 선제공격과 자위권(right of self-defense)

선제공격은 양자가 공히 전쟁의 불가역성을 인식하고 어느 한쪽이 먼저 선수를 치는 것으로 생존을 위한 자위권임을 강조한다.

여기서 자위권이란 법률용어로 국가가 다른 나라로부터 침해(侵害)를 받을 때 실력으로 막아 낼 수 있는 국제법상의 기본적인 권리. 또는 개인이 남에게 위해(危害)를 받을 때 실력으로 막아 낼 수 있는 권리<sup>14)</sup>라고 정의했다..

다음백과에 언급된 자위권(right of self-defense)<sup>15)</sup>을 살펴보면, 자위권은 국가가 국제사회에 등장하여 존재하고 있을 때 그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의 하나로 그러한 권리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13) 윤형호 외, [전쟁론] (서울:도서출판 한원, 1994),p108.

14) 다음 한국어 사전,

<https://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216238&supid=kku000272035>. 2020.12.13. 검색

15) 다음백과사전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b18j2416a>. 2020.12.13. 검색



그 행사요건 및 범위와 관련해서는 논란이 있다.

이러한 논의는 국제사회에서 한 국가가 자국의 의사를 실현할 최종수단으로서 전쟁을 인정하고 있고, 그것이 정당한 근거가 있는 무력행사가 합법적이었던 1919년 이전의 국제법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시대는 직접적으로 국가의 영토 보전과 생존권 위협상황이 아니더라도 자국 국민의 생존권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명목으로 강대국이 약소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을 하거나 간섭하는 구실로 이용되어 왔던 것이다.

예를 들면, 1837년 캐나다를 식민통치하고 있던 영국과 미국 간의 분쟁인 캐롤라인호(號) 사건에서 캐나다 반군을 지원하던 미국 선박을 영국이 방화·파괴한 공격행위를 자위권행사라고 정당화했는데, 이것이 오늘날까지 자위권행사의 고전적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유엔(UN)헌장에 따라 자위권이 국가의 고유한 권리임을 인정하고 무력공격을 받은 경우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세부적인 조치가 있기까지는 개별적 또는 집단적인 자위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라도 자위권행사는 즉시 안보리에 보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가공할 무기성능으로 실제적인 무력공격이 없지만 무력공격이 예상될 경우에는 방어행위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과 국가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경제적 공격, 해외에 있는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자위권행사 가능성 등에 대한 정리가 미흡한 상황이다.

## 3.2 자위권 행사요건과 선제공격의 구비조건

### 3.2.1 자위권의 행사요건

1842년 8월 미국 국무장관(Daniel Webster)은 Caroline 호 사건에 대응하여 일관적 자위권의 견해를 인정하는 내용의 서한에서 영국 정부가 “여하한 수단의 선택과 숙고의 시간을 허용하지 않는,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자위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동시에, 그러한 행동이 “비합리적이거나 과도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는 바, 그 이유는 “자위의 필요성에 의해서 정당화되는 행동은 그러한 필요성에 의해 제한되어야 하며, 명백히 그 범위 이내로 그쳐야 되기 때문이다(Masferrer et al, 2012, 319). 오늘날에도 대응의 “필요성”과 그러한 대응을 위해 사용된 무력의 “비례성”에 초점을 맞춘 Webster의 Caroline 기준은 자위권 분석의 기초를 형성한다(Bowett, 2009, 188; Higgins, 1961, 299-302).

첫 번째 요건은 필요성(Necessity)인데, 필요성은 이제는 무력사용 이외에 다른 합리적 대안, 즉 외교적이나 경제적, 사법적 또는 기타 유엔 안보리에 회부와 같은

무력사용 이외의 대안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두 번째 요건인 비례성(Proportionality)은 “무력사용 또는 강요의 강도와 규모가 자위의 수용 가능한(admissible) 목적을 즉시 달성하는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말한다(McDougal and Feliciano, 1961, 242). 자위의 목적이 현상(the status quo)의 유지이므로, 비례성은 일단 위협이 제거되면 군사행동의 중단을 요구한다(Schachter, 1986, 120).

#### 다. 급박성(Immediacy)

자위권 행사의 세 번째 요건은 ‘임박성’이다. 유엔헌장 제51조에는 ‘즉시성(immediacy)’의 요건이 포함되어 있다. 자위권은 안보리가 무력공격을 통보받고, 국제평화와 안전회복 조치에 소요되는 기간에만 무력공격에 대응할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급박성이 무력공격과 자위권행사 간에 어떤 지체시간이 없어야 함을 의미하지만, 이 조건은 과도하고 엄격하게 해석되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Kenny, 1995, 1162-1167).

### 3.2.2 선제공격의 구비조건

전략적인 환경과 여건을 고려하여 볼 때 선제공격전략이 최선이라는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져서 선제공격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첫째, 조기경보 능력과 신속-정확한 정보판단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선제공격이란 적의 공격징후가 임박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적의 공격징후판단을 위해 전선에서의 군사적 활동뿐만 아니라, 종심상의 군사 활동과 대내-외적인 정치외교 활동 등에 대한 정보수집능력과 수집된 첩보를 종합하여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수집된 첩보와 생산된 정보가 소요 정책결정기관이나 부서에 적시에 제공할 가능한 보안수단과 자동화 전파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적의 공격징후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건전한 결심과 실행을 가능케 할 것이다. 특히 선제공격은 전쟁의 시작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결정이 신중할 수밖에 없다. 그러지 못하면 전쟁은 정당성을 보장 받을 수 없는 침략전쟁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제공격을 위해서는 적의 임박한 공격징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조기경보능력과 신속 정확한 정보판단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자주적인 전략과 정책의 선택이 가능해야 한다. 즉, 국가방위를 위한 안보 정책과 군사전략의 채택을 자국의 의지대로 자유로이 변경할 수 있는 작전통제권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군사적 동맹이 정책 및 전략을 선택하는데 제한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적, 군사적 동맹이 없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

으나, 동맹국들로 하여금 간섭을 받는 위치의 국가에서는 선제공격의 선택이 어렵다는 것이다.

셋째, 선제공격에 대한 국내외적인 지지 확보가 가능해야 한다. 국가가 처한 상황이 선제공격 이외의 다른 대안이 없었음을 국내외에 홍보하여 적극적인 지지와 우호적인 여론 형성이 가능해야 한다. 그것은 전쟁의 당위성과 선제공격의 정당성을 국내외로부터 인정받는 것이며, 이는 국가 방위와 민족의 생존, 번영 문제와 귀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노력은 우방국을 포함한 중립국의 지지 확보를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동시에 적의 동맹국이 묵인하거나 전쟁 불개입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만 한다.

넷째, 선제공격은 전략, 교리, 무기체계, 군구조, 교육훈련면에서의 공세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가능하다. 즉, 선제공격을 위해서는 공세적인 전략과 전술교리, 그리고 이러한 교리에 기초한 교육훈련을 통한 숙달, 경량화 및 기동화된 부대구조, 적의 전략적-작전적 중심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 등의 능력과 여건이 구비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 3.2.3 선제적 자위권 행사

선제적인 자위권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제한적 선제공격이 가능한 것으로 보는 학파에 의하면 선제공격의 정당성과 적법성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Bowett, 2009, 188-189).

첫째, 유엔헌장 제51조에서는 자위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1945년 이전의 자위와 관련된 국제관습법이 현재 ‘진행 중(existing)’인 공격뿐만 아니라, ‘임박한’ 공격 위협에 대해서도 국가가 스스로 방위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둘째, 무력공격에는 불가피하고 임박한 공격도 포함된다. 예를 들면, 적국이 자국의 국경선 인근으로 전투력을 집결하여 공격준비를 한다면, 자국은 적에 의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상황을 무력공격의 시작으로 보고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1945년 이후 무력공격이 임박하고 불가피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국가들이 자위권을 인정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사태 당시 미국에 의한 해상봉쇄나 1967년 이스라엘-아랍 간 전쟁, 1981년 라크 원자로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 그리고 1986년 미국의 리비아 폭격 같은 사건들을 무력공격 이전에 자위를 위한 행동이 취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선제적 자위권은 ‘임박한 공격’에 대해서 대응할 권리를 내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Mikael Nabati(2003, 790-791)는 “자위권은 기존의 현장 규정과 독립적이고 자율적(autonomous) 권리이며... ‘고유의 권리’는 국제관습법에 정의된

자위권을 보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했다.

#### 3.2.4 선제공격의 유·불리점

선제공격이 갖는 이점은 첫째, 선제공격은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고, 열세한 군사력으로 취약점을 극복하고 군사력의 균형을 결정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둘째, 전략적 중심이 얇은 경우 선제공격은 적지역으로 전장을 확대하여 아국의 피해를 방지하며, 전쟁지속능력을 보장하며, 적의 혼란과 피해를 최대한 조장할 수 있다. 그 예로 3차 중동전쟁시 이스라엘은 선제공격을 통하여 시나이 반도를 점령하여 전략적 중심을 확보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었다.

셋째, 효과적이고 기습적인 선제공격은 조직적인 적의 대규모의 공격을 지연시키고,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크게 높일 수 있다.

이와 같이 선제공격의 이점이 많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불리점과 어려움도 있다.

무엇보다 선제공격은 외교적인 고립을 자초할 가능성이 있다. 앞에서 논의된 선제적 자위권의 정당성이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즉 적의 공격 가능성을 오판했거나 긴박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사회로부터 침략국으로 낙인찍힘으로써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선제공격은 이해관계에 놓인 주변국의 지원이나 개입을 불러올 수도 있다. 특히 적의 동맹국이나 지지하는 입장에 있는 국가들과는 사전 정치외교적인 협조를 통하여 전쟁에 개입할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하는 한편 아국에게는 유리한 국제적 지원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셋째, 선제공격은 아국의 입장에서도 동맹국간에 갈등과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사전 동맹국들에게 선제공격 의사를 분명히 밝혀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 내거나 최소한 묵인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넷째, 정보수집이나 판단 능력이 부족한 경우, 선제공격은 적의 의도에 말려들 가능성이 있다. 적의 공격 가능성에 대한 오판으로 선제공격을 한 경우, 전쟁발발에 대한 책임을 면키 어렵기 때문에 국제적인 지지 획득이 곤란하고, 적의 동맹국 개입으로 전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이 선제공격은 여러 가지 군사적인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많은 정치·외교적 불리점도 많기 때문에 최근에는 채택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은 자국의 생존과 국가이익을 위해서는 선제공격의 전략적 이점을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선제공격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도 사실상 곤란하기 때문에 언제든 선제공격은 가능할 수도 있다.

## 4. 한국군의 자위적 선제공격전략 적용 방안

### 4.1 선제공격의 한반도 적용 가능성 검증

한국이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해 “선제공격전략”을 기본전략으로 채택할 수 있을까? 먼저 선제공격의 이점에서 논의된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첫째, 선제공격이 갖는 이점, 즉 전쟁에서 주도권 장악이 가능하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공격으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복구에도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핵 공격의 일격을 허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 공격을 사전에 거부하거나 직전에 파괴나 무력화 시키는 방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둘째, 선제공격은 적지역으로 전장을 확대하여 종심을 증가시키고, 아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북한의 핵무기 발사지점에 대한 선제공격전략은 대단히 유효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선제공격전략은 북한의 재래식 무기로 기습공격하려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다. 군사분계선 직후방에 배치된 다련장 로켓 등 대구경화기나 기갑 및 기계화 부대에 대한 선제공격은 북한의 기습공격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하고 전면전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할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 먼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이전에는 독자적인 공세적 방위전략으로 선제공격전략 채택은 한·미간에 충분한 공감대와 협조가 필요하다.

둘째, 한국의 독자적인 정보수집 및 분석능력이 부족하다. 선제공격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 공격징후와 시기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한국의 정보수집 및 판단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선제공격 전략의 채택은 어려울 수도 있다.

셋째, 선제공격을 위한 군사적 능력과 운용의 제한이다. 한국의 현 군사력으로는 독자적인 선제공격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군사력이나 군사교리, 무기체계, 군 구조, 전략 등에서 많은 제한 사항이 있다. 특히 정보획득 능력이나 타격능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현상유지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주변 강대국들은 한국의 선제공격전략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이미 핵무기와 장거리 투발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사용할 의지가 있는 상황에서 적의 기습공격을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의 선제공격전략은 정치적 불리점과 선제공격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구비조건의 불비<sup>16)</sup>함

에도 불구하고 자위적인 선제공격전략은 한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포기할 수 없는 전략으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채택을 위한 능력과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 4.2 한국군의 자위적인 선제공격전략 방안

### 4.2.1 선제공격의 정당성 확보

#### 4.2.1.1 급박성

한국에 가해지고 있는 북한의 핵사용 위협이 임박해야 한다. 즉, 상황이 너무나 임박하여 선제공격을 하지 않으면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 위태로운 상태여야 한다. 핵공격 임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핵연료 주입, 발사대 이동, 준비인원 및 차량의 이동 등 임박한 핵공격 징후의 증거물을 확보해야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공격이 임박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ISR 운용 계획과 전력확보가 급선무이다.

#### 4.2.1.2 필요성

선제공격의 필요성은 첫째, 남북한의 현상항과 지리적 환경측면에서 선제공격이 필요하다. 한국은 이스라엘과 같이 휴전선을 경계로 직접적인 대치를 하고 있다. 한국의 서울과 수도권은 인구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종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으며, 전쟁지도본부가 위치하고 있다.

둘째, 북한의 치명적인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에 대응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선제공격이다.<sup>17)</sup> 한국은 현재 대외적으로는 “수세 후 공세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공격을 흡수하고 대응하기에는 피해가 막대하여 현실적인 조치가 불가능 할 것이다.

셋째, 한국군의 전력상 열세 측면이다. 한국은 북한의 재래식 군사위협과 대량살상무기를 비롯한 비대칭전력에 대해서 매우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한국형 3축(킬체인, KAMD, KMPR)체계는 2020년 중반 이후에나 어느 정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요격단계의 위협 부담을 전제하는 것 보다 선제공격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것이다.

이처럼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의도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한 북한의 핵 공

16) 구비조건의 불비: 공세능력, 정보수집 및 판단능력, 전략 및 무기체계, 교리, 군구조, 교육훈련 등 전반적인 면에서 아직은 공세위주의 작전수행능력이 미흡.

17) 권혁철, “북한 핵 위협에 대비한 군사전략 방안”, 『합동군사연구』, 제 18호(2008년), pp. 57~62.

격 직전에 실시하는 선제공격에 대한 정당성 확보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본다.

#### 4.2.1.3 비례성

북한이 주는 위협의 크기에 비례하여 선제공격을 시행해야 한다. 미약한 선제공격으로는 북한의 공격 기도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치명적인 손실을 가하는 강력한 공격이 필요하다. 한국이 선제공격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를 완전히 무력화 하였을 때, 북한은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를 동시에 공격해야 한다는 논리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합법적인 군사목표만 공격하여 부수적인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밀화된 타격자산과 다양한 수단의 무기체계 양산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요건에서도 선제공격은 모든 평화적인 노력(외교, 경제, 정보 등)이 실패한 후에 실시하는 최후의 수단과 방법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국제사회로부터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여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 4.2.2 선제공격 능력 확보

##### 4.2.2.1 선제공격 계획수립과 개념발전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사용 위협이 긴박한 현실이 될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선제공격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판단하면 선제공격을 실시하게 되며, 선제공격은 일단 시행한다면 100% 성공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군은 선제공격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면서 현실적인 계획을 발전시키고, 부단한 연습과 훈련을 통해 즉각 투입 가능한 전투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선제공격전략 시행을 위한 계획 수립과 연습은 전쟁기획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sup>18)</sup>

##### 4.2.2.2 정보우위 달성

선제공격이 성공하려면 ‘북한의 정확한 핵능력과 의도, 그리고 실제로 사용할 가능성 판단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은 가용한 정보자산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정보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미래전은 첨단 무기체계와 연계된 항공우주력 중심의 정보 및 타격자산, 지휘통제체계를 이용함으로써 효과중심의 정밀타격과 전쟁수행 속도의 가속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조기경보 또는 전장감시 능력의 확보와 운용은 선제공격을 위한 군사력 운용의 선결조건이다. 따라서 RQ-4, JSTARS, U-2 등 고고도 정찰기와 같은 전략적 수준의 ISR 전

---

18) 김문상,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군사적 대응 노력”, 합동군사대학 석사학위논문(2015), p.43

력 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준의 UAV를 개발 양산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 핵무기와 미사일 같은 국가 전략무기에 해당되는 비밀정보를 영상이나 신호정보에만 의존하는 것은 제한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인간정보 자산의 필요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4.2.2.3 공격 전력 구축

북한의 핵무기 공격에 대한 자위적 선제공격을 위한 핵심전력은 킬체인체계이다. 킬체인체계는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하려는 의도와 징후가 명확할 경우, 30분 이내에 탐지 및 식별-결심-타격할 수 있는 일종의 미사일 타격체계로 선제공격의 주요 수단으로 운용할 수 있다. 한·미는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기지, 저장소를 ‘표적 목록’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sup>19)</sup>

한국군은 킬체인을 위한 타격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해외 무기도입사업과 자체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2년 10월 신미사일 지침을 개정하여 탄도 미사일은 800Km(탄두중량 500Kg)까지는 개발할 수 있다.<sup>20)</sup> 현재 한국군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은 현무-1(180Km), 현무-2A(300Km), 현무-2B(500Km)가 있으며, 최근 800Km 이상 투발 가능한 탄도탄 시험발사에 성공하였다. 순항미사일은 현무-3A(500Km), 현무-3B(1,000Km), 현무-3C(1,500Km)가 있으며, 이지스구축함(7,600t급), 한국형 구축함(4,500t급), 214급 잠수함(1,800t급)에 일부 배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나<sup>21)</sup>, 탄도미사일보다 대응시간이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투발수단을 이용하여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순항미사일의 속도부분을 개선시켜야 한다. 더불어 한·미 양국이 한층 고도화된 전략미사일 단독보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미사일 지침을 완화하는 방법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해군도 함대지순항미사일인 현무-3C개량형<sup>22)</sup> ‘청룡’(사거리 500~1,000Km)을 배치하여 운용 중이다. 더불어 북한의 핵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해상 킬체인의 핵심인 핵(원자력) 잠수함 건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핵잠수함의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한·미 원자력 협정의 수정과 대외 군비경쟁 촉발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명분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공군은 KF-16과 F-15K, F-35A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밀유도 무기인 JDAM(Joint Direct Attack Munition), SLAM-ER(Standoff Land Attack Missile- Expanded Response) 등의 무장을 장착하여 운용할 수 있다. 공군 전력

19) 김문상, 앞의 책, P.45.

20) 이재웅, “북 핵실험 계기로 킬체인 전반 점검..” 『연합뉴스』, 2016년 1월 18일.

21) 김종원, “북한 핵·미사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아시아투데이』, 2016년 1월 12일.

22) 이정훈, “한미 미사일 정책의 변화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무기들”.



무기 중 KGGB(Korea GPS Guide Bomb/한국형 GPS 유도폭탄)은 2016년 9월에 실전배치 된<sup>23)</sup> 공대지유도무기로써 재래식 폭탄에 위성위치확인 시스템과 보조장치를 장착해 원거리 목표물을 정밀타격 할 수 있는 무기이다.<sup>24)</sup> 또한 2017년까지 170여발을 도입한 현존 최고의 공대지순항미사일로 평가받는 타우러스(TAURUS)는 500Km이상 원거리 정밀타격이 가능하며, 지하 및 갱도화 되어 있는 북한의 WMD를 파괴하기 용이하다.

더 나아가 한국군은 스텔스 무인항공기(UAV)와 소형로봇을 무기화하여 식별되는 적 핵 발사 징후, WMD 프로그램, 장사정보에 대해 자폭하는 폭탄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등 변화되는 첨단과학기술과 연계하여 북한의 핵공격에 대한 선제공격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 전자공격능력도 확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전자기펄스(EMP), 고출력 마이크로 웨이브(HPM) 등을 개발하여 인명손실 없이 북한의 핵시설 기폭장치나 미사일 유도장치 등 전자기기를 무력화 시키고, 컴퓨터나 통신장비의 주요 전자회로를 파괴함으로써 북한의 핵무기 공격의도와 능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자적 공격은 선제공격에 대한 수단성 측면에서도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중요한 전력으로 고려될 것으로 판단한다.

#### 4.2.2.4 지휘통제체계(C4ISR) 개선

다양한 ISR자산으로 획득된 실시간 정보를 분석하고 결심하여 타격할 수 있는 지휘통제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북한의 핵공격에 대한 선제공격을 위한 지휘통제체계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또는 전략적 표적에 대한 감시 및 타격수단과 복합적인 전투수행이 요구되며, 전구작전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전장통제수단으로써 운용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sup>25)</sup> 이는 24시간 지속적으로 정보를 획득하여 제공하고,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타격하고 표적을 관리해야 하는 합동작전부대 지휘관에게는 핵심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군의 전력이 첨단화 되면서 데이터링크 운용전력이 증가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네트워크중심작전 수행을 위한 C4ISR연동과 통합운용하기 위한 개념을 정립하고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23) transil, "군, '핵 잠수함 확보 신중검토', 미동의 등 난제 산적", 『연합뉴스』, 2016년 10월 18일.

24) transil, 위의 책

25) 김관용, "[국감]공군 전력 강화 사업 잇따라 지연, 전력공백 초래 우려", 『이데일리』, 2016년 10월 11일.

## 5. 결 론

지금까지 북한 핵 위협과 공격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선제공격전략을 논했다. 북한이 내부적으로 ‘핵 보유국법’을 제정하면서까지 핵보유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6차례 핵실험을 강행하는 동안 약 20여개의 핵무기를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연간 7개정도의 핵무기를 제조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핵무장 등 비대칭 전력은 남·북한간에 군사력의 균형을 깨고 북한이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핵무기를 전면전에서 사용한다면, 초전 대량피해를 감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의 핵무기 공격을 받게되면 그 피해는 상상을 추월할 가능성이 많고 이러한 패해를 극복하고 국가 재건을 위한 소요는 극심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정확한 의도와 징후를 식별하여, 사전에 공격하는 자위적 선제공격에 대해 알아보았다. 선제공격은 정당성, 적법성, 현실성 측면에서 예방타격보다 타당함을 증명하였다. 선제공격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급박성, 필요성, 비례성 등이 있으며, 이러한 선제공격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국제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또한, 선제공격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제공격의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주도면밀한 계획수립과 연습 및 훈련, 정보우위 달성을 위해 고성능 ISR자산의 도입과 양산이 필요하다. 또한 타격전력 구축을 위해 킬체인 의 조기 완성과 첨단화되는 과학기술을 반영한 무기체계의 개발 및 도입이 필요하다. 더불어 ISR 자산과 타격자산과의 네트워크 기반을 연동하여 OODA주기를 최소화 해 Sensor to Shooter 개념을 조기 정립해야 한다. 또한 선제공격과 연계하여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와 국제안보환경의 변화는 한국의 자주 국방력을 조기에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 참고문헌

1. 권혁철, “북한 핵 위협에 대비한 군사전략 방안”, 『합동군사연구』, 제 18호(2008년), pp. 57~62.
2. 김관용, “[국감]공군 전력 강화 사업 잇따라 지연, 전력공백 초래 우려”. 『이데일리』, 2016년 10월 11일.
3. 김문상,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군사적 대응 노력”, 합동군사대학 석사학위논문(2015).
4. 김종원, “북한 핵·미사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아시아투데이』, 2016년 1월 12일.
5. 박휘락, 『북핵 위협과 대응』, pp. 64. 파주. 한국학술정보
6. 본향건, 국대원 역, 「전쟁과 철학」(국방대학원, 1982).
7. 신정도, 「전략학 원론」(서울 : 동서병학사, 1970).
8. 양주동 감수, 「국어대사전」(서울 : 동아출판사, 1985).
9. 신재균, [선제기습공격의 적용성 연구: 제3,4차 중동전을 중심으로] (국대원 석사학위 논문, 1986).
10. 윤형호 외, [전쟁론] (서울:도서출판 한원, 1994).
11. 「전략전술용어집」(육군본부. 1984).
12. 이정훈, “한미 미사일 정책의 변화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무기들.”
13. 이재웅, “북 핵실험 계기로 킬체인 전반 점검..” 『연합뉴스』, 2016년 1월 18일.
14. Clausewitz, On War, 이종학 역, 「전쟁론」(서울 : 일조각, 1989).
15. Richard k. Betts, Surprise Attack, 전사편찬위원회 역, [기습](서울:전사편찬위원회, 1984).
16. transil, “군, ‘핵 잠수함 확보 신중검토’, 미동의 등 난제 산적”, 『연합뉴스』, 2016년 10월 18일.
17. 다음 한국어사전, <https://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2162>

38&supid=kku000272035. 2020.12.13. 검색

18. 다음 백과사전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b18j2416a>.  
2020.12.13. 검색

<abstrast>

## **Reviewing the Feasibility of South Korea's Self-Defense Pre-emptive Strike Strategy in Response to North Korea's Nuclear Attack**

Jeon, Sang Jo (Yeungnam University)

Since conducting its third nuclear test in 2013, North Korea has announced that it has succeeded in "minorizing and lightening" its nuclear weapons enough to be mounted on missiles. This actually tells us that North Korea has the capability to attack South Korea with nuclear weapons.

According to its own "kill-chain" concept, South Korea is preparing plans and capabilities to destroy the North Nuclear Weapon before launching, conducting a pre-emptive strike if clear signs of its nuclear and missile aggression are confirmed, and also developing plans and capabilities to intercept the North's nuclear missiles, known as the "Korean Missile Defense System (KAMD).

Under these circumstances, we would like to analyze the concept of a self-defense preemptive strike, conditions for a preemptive strike, and conditions for a preemptive strike, which South Korea can choose to counter growing threats from North Korea, to find out if it is applicable to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suggest ways to secure justification and execute the actual preemptive self-defense attack.

**Key Words : pre-emptive strikes, surprise, preventive war, self-defense, North Korean nuclear issue, Kill Chain, Korean missile defense system**

## 논문 작성/투고 내규

### 1. 원고작성 형식

1) 편집용지 : A4

2) 용지여백 : 위쪽 20, 아래쪽 30, 왼쪽 35, 오른쪽 35,  
머리말 12, 꼬리말 12, 제본 0

3) 줄간격 : 본문 160, 첫줄 들여쓰기 10

4) 글자크기 : 본문 10, 장평 100

#### 5) 논문 구성

- 논문제목 : 국문, 영문

- 필자명: 필자인적사항은 각주로 간단히 표기

- 요약 : 국문, 영문(abstract)

- 본문은 1. 장 제목

1.1 절 제목

1.1.1 소절 제목과같은 형태로 순차적으로 매긴다.

- 각주는 일련번호로 표시하고 본문 해당면 하단에 위치

- 표와 그림은 <표 1> 표제목, <그림 1> 그림제목 과 같은 형태로  
표기하고 표와 그림의 상단에 위치

- 참고문헌 : 사회과학의 논문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작성

요령을 참고하여 한국어문헌, 외국어 문헌 순서로 구분하여 배열  
예)논문: 저자, “논문제목”, 학회지명, 호수, 학회명, 연도, 페이지

저서: 저자, 『저서』, 출판사, 연도, 발행지, 페이지

2. 저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저자의 이름은 본문이나 각주 등에서  
저자의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언급을 피한다.

3. 제출 원고는 다른 학술지에 미발표 된 독창성 있는 논문이어야 하며,  
필자는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제출된 논문은 필자에게 되돌려주지 않는다.

## 논문 심사 내규

### 1. 심사 대상

- 1) 심사는 기획논문을 제외하고, 접수된 모든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 2) 기획 논문은 한국군사문제연구소가 원고를 청탁하여 접수된 논문이다.

### 2.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기간

- 1)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5명에서 9명으로 한다.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구성된 편집위원 중에서, 또는 별도의 관련 전문분야의 심사위원을 논문 1편당 3인 이상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 2)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날 이후 10일 이내에 논문 심사를 의뢰한다.
- 3) 논문의 초심 심사기간은 15일 이내, 재심은 10일 이내 이다.

### 3. 논문심사

- 1) 논문 심사 시에 필자의 이름은 밝히지 않는다.
- 2) 심사위원은 지정된 양식의 논문심사서에 판정과 심사소견을 기입한다.
- 3) 논문 심사판정은 판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불가” 중 반드시 한가지 만을 선택한다. 그리고 그 이유를 심사 소견란에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4) 3인의 논문심사에 대한 최종판정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최종판정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불가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위의 경우가 아닐 때			게재 불가

### 4. 논문심사 결과 통보

- 1)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필자에게 통보한다.

### 5.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와 관련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며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연구소장 겸임) : 김종열(영남대)

편집위원:

김정수교수(영남대)	전상조교수(영남대)
성형권교수(영남대)	김군기교수(영남대)
노양규교수(영남대)	양해수교수(서경대)
정한기교수(삼사관학교)	최윤철교수(상명대)

---

# 영 남 국 방 논 총

Yeungnam National Defense Review

제2권 제1호 (통권 제2호) 2020

---

<비매품>

2020년 12월 20일 인쇄

2020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 김종열(영남대부설 한국군사문제연구소장)

편집인 : 김종열(영남대부설 한국군사문제연구소장)

발행처 : 영남대학교부설 한국군사문제연구소

Tel : 053)810- 3681

Fax: 053)810- 4635

email : jrkim1201@yu.ac.kr

\* 본 학술지에 실린 논문은 개인적인 의견이며 한국군사문제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